

이번 국제대회는

해외NGO 단체들과 한반도 평화문제를 함께 논의하여 지난 5월에 있었던 헤이그 평화회의 성과를 발전시키고 이를 내년에 한국에서 개최될 '아셈2000대회'로 계승한다.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와 평화정착이 21세기를 평화의 세기로 만드는 첫 출발이며 국제평화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내용으로 특별성명을 채택하여 이를 국제사회에 천명함으로써 한반도 문제를 국제평화문제로 이슈화한다.

20세기 전쟁과 냉전으로 인해 한반도가 겪어야만 했던 역사적 사례를 '20세기 한반도 냉전 피해 10대 상처'로 정리하여 대회기간 중 이를 발표하고 향후 세계평화주의자들과 함께 해결방향을 모색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국제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하여 이번국제대회가 끝나면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는 산하에 <20세기 상처를 생각하는 인도주의 센터>를 창설할 예정이다.

민족회의가 선정한 20세기 한반도 10대 상처

선정기준

- 일제식민지 지배로 인한 상흔을 간직하고 있는 동포
- 한국전쟁, 베트남전쟁등 금세기 전쟁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동포
- 분단으로 인하여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동포
- 이념을 초월해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20세기의 아픔을 상징하는 사안

- | | |
|------------------|------------------|
| ■ 정신대 할머니 | ■ 베트남 전쟁 고엽제 피해자 |
| ■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피폭자 | ■ 대인지뢰 피해자 |
| ■ 태평양 전쟁 희생자 | ■ 미군범죄 피해자 |
| ■ 한국전쟁 피해자 | ■ 장기수와 국가보안법 피해자 |
| ■ 이산가족 | ■ 조선족 사기 피해자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는

1994년 7월 2일 54개의 민간단체가 모여 창립한 민간통일운동단체로, 남과 북이 7.4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으며, 온 겨레가 함께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넘어 머리를 맞대고 통일의 길을 열어가는 한국의 대표적인 비정부기구입니다.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KNCR (Korean National Congress for Reunification)
전화: 708-4981 팩스: 708-4982
Email: onekr@yahoo.co.kr http://user.alpha.co.kr/~kncr

PEACE BRINGS HUMAN RIGHTS

인권정보자료실
SAe1.4

한반도 냉전청산과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대회

ONE HEART TO PEACE ONE STEP TO ONE KOREA

FREEDOM

PEACE



HUMAN RIGHTS

일시: 1999년 8월 12일(목요일)~8월 14일(토요일)

행사내용

8월 12일

오후 7시, 국제대회 참석인사 환영만찬

8월 13일

오전 12시, 용산미군기지반환요구 시위, 용산미군기지 앞
오후 2시, 개막식 및 제1학술토론회,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오후 6시, 평화기원 작은 마당, 마로니에공원 야외무대

8월 14일

오전 9시, 제2학술토론회,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오후 2시, ASEM2000 평화분과 준비 워크샵, 타워호텔

8월 16일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 및 공동선언 발표, 철학카페네티나무

주관: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전화/ 745-5872, 708-4981 팩스/ 708-4982)

주최: ASEM2000 한국민간단체포럼준비위원회

후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CBS, 동아일보 협찬: 삼성전자

행사일정

8월 13일 (금요일)

■ 집회

- 1) 때 : 1999년 8월 13일 오전 12시 ~ 오후 1시
- 2) 장소 : 용산미군기지 앞
- 3) 주관 :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 4) 참석 : 해외 NGO, 해외동포, 주관단체 등
- 5) 내용 : 용산미군기지만환, 한미행정협정 개정, 주한미군범죄 근절 낭독 등

■ 국제대회 개막식

- 1) 때 : 1999년 8월 13일 오후 2시 ~ 오후 2시 30분
- 2) 장소 :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 제 1 학술토론회

- 1) 주제 : 21세기 세계 평화의 전망과 평화운동의 방향
- 2) 때 : 1999년 8월 13일 오후 2시 30분 ~ 오후 6시
- 3) 장소 :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 4) 내용
 - 가. 발제 1
 - 주제 : 동북아 및 세계평화체제 구축방향
 - 발제자 : John Feffer (AFSC)
 - 나. 발제 2
 - 주제 : 평화운동의 국제적 연대의 방향
 - 발제자 : Martin Broke (ENAAT)
 - 다. 사회 : 이장희 (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

■ 21세기 세계평화 기원 작은마당

- 1) 의의 : 대인지뢰 피해자, 전쟁 피해자들 및 각국 참가자들의 증언을 통해 21세기를 평화시대로 열어 가자는 의지를 모으는 기획행사
- 2) 때 : 1999년 8월 13일 오후 6시 ~ 오후 9시
- 3) 장소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야외무대
- 4) 내용
 - 가. 대인지뢰 피해자 등 증언
 - 나. 평화기원메시지 발표 : 각국 참가자 2~3인 정도다. 문화행사와 결합 (평화기원 비나리, 노래 공연 등)

8월 14일 (토요일)

■ 제 2 학술토론회

- 1) 주제 :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평화정착의 방향』
- 2) 때 : 1999년 8월 14일 오전 9시 ~ 12시 30분
- 3) 장소 :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 4) 내용
 - 가. 주제 연설 - 한반도 냉전 청산과 NGO의 역할
나. 발제
 - 1분과 주제 : 대인지뢰, 아시아 유럽 무기거래와 방위비
주한미군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대안 안보
 - 2분과 주제 :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평화교육의 방향
인도적 대북지원
 - 다. 사회 : 이삼열 (숭실대 교수)

■ ASEM 2000 평화분과 준비 워크숍

- 1) 때 : 1999년 8월 14일 오후 2시 ~ 오후 5시
- 2) 장소 : 타워 호텔
- 3) 주관 : ASEM 2000 한국민간단체포럼 준비위원회 평화분과
- 4) 내용 : 헤이그 대회 평가와 후속 대책 논의, ASEM 2000 평화분과 준비, 기타
- 5) 참석 : 해외 NGO, 헤이그 대회 참가단체, ASEM 2000 평화분과 단체

8월 16일 (월요일)

■ 기자회견 및 공동선언 발표

- 1) 때 : 1999년 8월 16일 오전 10시 30분
- 2) 장소 : 철학카페 느티나무
- 3) 내용 : 기자회견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선언

... 목 차 ...

- 행사일정 / 4
- 국내 참가 인사 / 8
- 해외 참가 인사 / 9
- 국제대회 참가 주요 해외 단체 소개 / 10
-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과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미래
Building Peace in Northeast Asia The Future of Multilateralism - 존 페퍼 / 14 ◆
- 평화운동의 발전과 미래
Developments and future of the Peace movement - 마틴 브록 / 41 ◆
- 한반도 냉전구조의 현황과 청산방안의 모색 - 강정구 / 48
The Current Stat and the method for dismantlement of the Cold War structure(summary)
- 대인지뢰 대책의 방향 / Courses for Anti-Landmines - 조재국 / 76
- 아시아와 유럽의 무기이전과 군사비
Arms Transfers and Military Expenditure in Asia and Europe - 이철기 / 87
- 아시아 주둔 미군과 미군 기지 되찾기 운동
The U.S. Armed Forces in Asia and the Movement for Return of U.S. Armed Bases - 김용한 / 96
-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동북아 대안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과제
The Task for Peace Settlement in Korean peninsula and Establishment of Alternative Security System in Northeast Asia - 김창수 / 108
-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
Reasons for abolishment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 김성만 / 119
-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평화교육
Peace Education to break down the Cold War structure on the Korean Peninsula - 이현숙 / 125
- 대북지원운동에 대한 성과와 과제
The achievement and project of Support movement for North Korea - 도 각 / 137
- 부록
 - 헤이그 평화회의 보고 / 144
 - 아시아 유럽 민중의 전망과 제안
- PEOPLE'S VISION : 더 정의롭고 평등하며 지속가능한 세계를 향해 / 153

행·사·일·정

8월 12일(목)

□ 환영만찬 □

- 시간 : 오후 7시 ~ 오후 9시
- 장소 : 인사동 한정식집(지리산)

8월 13일(금)

□ 주한미군범죄근절과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위한 금요일 집회 □

- 시간 : 오전 12시 ~ 오후 1시
- 장소 : 용산미군기지앞
- 주관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참석 : 해외NGO, 주관단체 등
- 내용 : 용산미군기지 반환, 한미행정협정 개정, 주한미군범죄 근절, 성명서 낭독 등

□ 국제대회 개막식 □

- 시간 : 오후 2시 ~ 오후 2시 30분
- 장소 :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 제1학술토론회 □

- 주제 : 『 21세기 세계 평화의 전망과 평화운동의 방향』
- 시간 : 오후 2시 30분 ~ 오후 6시
- 장소 :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 내용 : 가. 발 제 1 : John Feffer(AFSC)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과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미래”
나. 발 제 2 : Martin Broek(ENAAT) “평화운동의 발전과 미래”
다. 사 회 : 이장희(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

• 순 서

- 소 개 : 사회자
- 발제 1 : John Feffer(AFSC)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과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미래”
- 토 론 : Gigi Francisco, Dorothy Guerrero, 김윤옥(한국교회여성연합회장), 이수형(국제평화전략연구원)
- 종합토론
- 휴 식
- 발제 2 : Martin Broek(ENAAT) “평화운동의 발전과 미래”
- 토 론 : Karin Lee(AFSC), Marco Mezzera(FOCUS), 노정선(연대교수), 윤영모(민주노총 국제국장)
- 종합토론
- 총 평
- 정 리 : 사회자

□ 21세기 세계평화 기원 작은마당 □

- 시간 : 오후 6시 ~ 오후 9시
- 장소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야외무대
- 내용 : 가. 정신대 및 대인지뢰 피해자 등 증언

- 나. 평화기원 메시지 발표 : 각국 참가자
- 다. 문화행사(평화기원 비나리 등)

8월 14일(토)

□ 제2학술토론회 □

- 주제 :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평화정착의 방향』
- 시간 : 1999년 8월 14일 오전 9시 ~ 12시 30분
- 장소 :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 내용
 - 가. 주제 연설 : 강정구(동국대 교수) “한반도 냉전구조의 현황과 청산방안의 모색”
 - 나. 발 제
 - 1분과 주제 : 대인지뢰, 아시아 유럽 무기거래와 방위비, 주한미군, 한반도평화체제와 동북아대안안보 모색
 - 2분과 주제 : 국가보안법, 평화교육, 인도적 대북지원
 - 다. 사회 : 이삼열(숭실대 교수)
- 순 서
 - 토론자소개 : 사회자

주 발 제 : 강정구(동국대 교수) “한반도 냉전구조의 현황과 청산방안의 모색”

1분과 발제 : 조재국(대인지뢰대책회의집행위원장) “대인지뢰대책의 방향”

이철기(경실련통일협회정책위원장) “아시아 및 유럽의무기이전과 군사비”

김용한(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전국공대위) “아시아주둔미군과 미군기지되찾기운동”

김창수(민족회의 정책실장) “한반도평화체제수립과 동북아 대안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과제”

토 론 : 대인지뢰 피해자(이덕준), Brid Brennan, 주한미군 피해자(전만규), 정영철
종합토론

- 2분과 발제 - 김성만(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정책위원장) :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
이현숙(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평화교육”
- 도 각(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 “대북 지원운동에 대한 성과와 과제”

토 론

- 백승헌(민변) / Roland Wein, 정용민(전교조), 조성범(농발협)

종합토론

독일에서 한반도평화체제수립을 위한 공동

총 평

정 리 - 사회자

특별성명채택 및 폐막선언

□ ASEM2000 평화분과 준비 워크숍 □

- 시간 : 1999년 8월 14일 오후 2시 ~ 오후 5시
- 장소 : 타워 호텔 본관1층 ROSE룸
- 주관 : ASEM2000 한국민간단체포럼 준비위원회 평화분과
- 내용 : 헤이그 대회 평가와 후속 대책 논의, ASEM 2000 평화분과 준비,
- 참석 : 해외NGO, ASEM 2000 평화분과 단체

8월 16일(월)

□ 기자회견 및 공동선언 발표 □

- 시간 :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느티나무
- 내용 : 기자회견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성명 발표

◇ 국내 참가 인사

이름	소속단체 및 직책	발제(토론) 주제
강정구	학술단체협의회 대표, 동국대 교수	한반도 냉전구조의 현황과 청산방안의 모색
김성만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정책위원장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
김용한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전국공대위 집행위원장	아시아 주둔 미군과 미군 기지 되찾기 운동
김윤옥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회장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과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미래
노정선	연세대 교수	평화운동의 발전과 미래
도 각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대북지원운동에 대한 성과와 과제
백승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서동만	외교안보연구원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및 동북아 대안안보 모색
이현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한반도 냉전구조해체를 위한 평화교육
운영모	민주노총 국제국장	평화운동의 국제적 연대의 방향
이철기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동국대 교수	아시아 유럽의 무기이전과 군사비
이수형	국제평화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동북아 및 세계평화체제 구축방향
정용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평화교육의 방향
조재국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집행위원장	대인지뢰대책의 방향

◇ 해외 참가 인사

이름	소속단체 및 직책	발제(토론) 주제	국적
Brid Brennan	TNI 연구원, 아시아담당	아시아 유럽 무기거래	네덜란드
Pietje Vervest	TNI 연구원, 아시아담당	-	네덜란드
Marco Mezzera	Focus 아시아담당 Staff	평화운동의 국제적 연대의 방향	이탈리아
Martin Broek	ENAAT (AMOK) 연구원	평화운동의 발전과 미래	네덜란드
John Feffer	AFSC 아시아 담당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과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미래	미 국
Karin Lee	AFSC 아시아 담당	평화운동의 국제적 연대의 방향	미 국
Roland Wein	Asia House 코리아사회 연구소 소장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독 일
Gigi Francisco	DAWN 동남아지역담당	동북아 및 세계평화체제 구축방향	필 리 핀
Dorothy Guerrero	Institute for Popular Democracy 국제담당 코디네이터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방향	필 리 핀
Evelyn Balais-Serrano	Forum Asia 캠페인 컨설턴트	-	태 국
Suraiya Kamaruzzaman	Women's Solidarity for Human Rights	-	인도네시아

국제대회 참가 주요 해외 단체 소개

TNI

□ TNI(Transnational Institute)

1973년에 설립된 TNI는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제3세계의 민주화와 세계화, 평화안보의 문제들을 분석하고 비판적 대안을 연구, 제시함으로써 제3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을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이다.

TNI는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미국, 유럽, 아프리카 등 전세계의 진보적 학자, 지식인들이 Fellow의 형태로 참여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협의자격을 가진 연구소도 8개가 있다. TNI의 Fellow 중에는 윌튼 벨로, 수잔 조지 등 우리에게 익숙한 학자들이 있다.

한편, TNI는 각 프로그램 혹은 센터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5월 전세계 8,000여명의 평화운동가들이 모인 헤이그 국제 평화대회에서 진행된 아시아, 유럽의 대안안보 전략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유럽을 대표하는 NGO이다.

아시아 프로그램의 주요 사업은 특히 아시아 지역의 민주화에 미치는 EU의 영향 평가나 아시아의 문제를 유럽사회에 알리는 매개 역할이 포함된다. 특히, TNI 아시아 프로그램은 제1차 아셈회의 때부터 아시아-유럽 NGO 포럼을 주관해온 단체로서 2000년 10월 한국에서 제3차 아셈회의가 열린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TNI는 앞으로 한국의 2000년 아셈준비위원회가 집중적으로 연대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단체이다.

Brid Brennan은 TNI의 Fellow이며 아시아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다. 현재 아시아 지역의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EU와 각 유럽국가 및 의회를 상대로 하는

AFSC

□ AFSC(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미국 친우봉사회)

AFSC는 미국의 퀘이커(Quaker) 재단 단체로, 다양한 신앙을 배경으로 한 사람들이 사회정의, 평화, 인도주의적인 봉사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단체의 활동은 모든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친우적인 종교 사회」와, 폭력과 불의에 대항하는 「사랑의 힘에 대한 믿음」 위에 기초하고 있다.

친우봉사회는 1차 세계대전의 시민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1917년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친우봉사회의 활동은 미국, 아시아, 아프리카, 중유럽, 남미, 중동 지역 등에서 경제적 정의와 평화구축, 군축문제, 사회정의, 청소년 문제들에 중점을 두고 펼쳐지고 있다.

이번 국제대회에는 일본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아시아 담당자인 John Feffer와 Karin Lee가 참여할 예정이며 특히 John은 한반도 평화와 갈등해소에 예전부터 많은 관심을 가져온 활동가로 이번 대회에서도 '동북아 및 세계평화체제 구축방향'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 FOCUS(Focus on Global South)

타일랜드(태국)에 소재하고 있으며 Chulalongkorn 대학의 사회연구소 협력 단체로 주로 동남아시아 등 제3세계 나라들의 빈곤 문제를 연구하고 지원하는 일을 한다.

1995년 4월에 방콕 사무실 운영을 시작했다. 평화운동가와 인권운동가로 한국에도 잘 알려진 필리핀대 교수 윌튼 벨로가 공동대표로 있다.

FOCUS

ENAAT

□ ENAAT(European Network against Arms Trade)

[무기생산 및 군수무역 국제대회]의 성과를 통해 1984년에 설립된 단체이다. 무기거래가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유럽의 개인과 단체들이 무기거래 반대 활동을 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유럽 13개국의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본부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다. 이번 한반도 국제대회에서는 Martin Broek가 방한하여 '평화운동의 국제적 연대의 방향'을 주제 발제한다. Martin Broek는 1962년 7월생으로 ENAAT에 소속되어 있는 AMOK(Anti Militarist Collective in Amsterdam)의 연구활동가이다. 1987년부터 독일 평화운동에 참여했으며 유럽의 무기거래와 군사방위산업에 관련된 다양한 기사 및 인도네시아 무기거래에 관련된 책(1997년 출간)을 집필하였다. ENAAT에서 주관한 인도네시아 무기거래 반대캠페인의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기도 했다.

□ ASIA HOUSE

ASIA HOUSE는 독일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로 한반도 문제 등 아시아의 문제를 연구하고 활동하고 있다. 이 단체에는 코리아협의회가 있어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고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 코리아협의회는 아시아 하우스의 창립멤버로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제 상황들의 발전과정을 알려 국제적인 연대를 조성하며, 한민족의 통일노력을 지원한다. 그리고 한국인-독일인 사이의 다문화적 상호소통 또한 동반자적 관계를 촉진시키는데 기여를 한다. 코리아협의회는 상기목적들을 다음과 같은 기구를 통하여 실천한다.

ASIA HOUSE

①코리아연석회의 : 독일에서 한국과 관련된 일을 가지고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 회의는 비조직적 형태로서 이에 관심있는 모두에게 열려 있다. 이 회의에서 정보와 경험들을 교환하며 서로 만나고 이를 통해 공동활동사업을 만드는 것에 기여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이 회의에서 진행되는 사실들을 알리는 2개국어로 된 회신이 발간된다.

②코리아포럼 : 독일어와 한국어로된 잡지를 발간한다. 이 잡지는 정기적으로 한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에 관한 것들을 분석하며 토론의 광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학문·정치·언론·종교계분야에 종사하는 한국에 대한 전문가들과

함께 일한다.

③코리아사회연구소 : 1995년 봄부터 아세아재단이 운영하는 아시아 하우스에 그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이 재단을 같이 창립한 다른 제 단체들과 함께 아시아 하우스의 중추역할을 한다. 코리아사회연구소는 한국인-독일인조직과 개인들을 엮으며 유럽과 세계적인 차원에서 일하는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단체들과 공동작업을 발굴하는데 노력한다. 또한 여러 정보와 전문가를 중개하며 세미나와 집회를 기획·조직하며 한국에 있는 동반자들과의 관계를 유지한다.

이번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Roland Wein은 코리아사회연구소 Director로서 베를린의 험볼트 대학서 한국학을 전공했다. 1993~1995년까지 영국의 뉴캐슬 대학에서 한국정치를 강의했다. 현재 소속된 코리아협의회는 1995년 9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일년에 두 번 발행되는 코리아포럼의 편집장을 맡고 있다.

□ DAWN(Development Alternatives with Women for the New Era

DAWN은 '새시대를 위한 여성의 대안적 개발 기구'로 제3세계의 여성 연구활동가의 국제연대기구이다. 이 단체는 1)세계화 시대의 정치, 경제 문제 2)인구문제와 성차별 문제 3)정치, 사회 개혁과 구조조정, 사회변화 문제 4)환경과 여성생계 문제 등과 관련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Gigi Francisco는 동남아 지역 담당자로서 FOCUS의 안보연대 멤버이기도 하다. 현재 필리핀 Miriam 대학의 국제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DAWN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과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미래

John Feffer
/ AFSC

1970년대 초반, 미국과 소련이 긴장완화기에 들어섰을 때, 미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는 세계가 군사적으로 양극체제, 정치적으로는 다극체제에 들어섰다고 주장했다. *Suisheng Zhao, Power Competition in East Asia (New York: St. Martins, 1997), p.136*. 다시 말해서 미국과 소련이 세계에서 유례없는 군사적 초강대국으로 남아있는 동안, 다른 정치적 세력의 중심이 출현했다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은 냉전의 종식 이후 변화했다. 오늘날의 일극 체제에서는 군사적 초강대국은 단 하나만 존재하며, 그것이 바로 미국이다. 그러나 중국과 같은 개별국들이 세력을 강화하면서, 또 유럽연합(EU)과 같은 지역연합이 중요해지면서, APEC과 같은 다자적 기구가 생겨나면서, 그리고 비정부 국제단체(NGO: 예를 들어 엠네스티, 그린피스)와 같은 국가이외의 행위자들과 다국적 기업들이 세계 정치에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정치적, 경제적인 세력은 좀더 다양하게 분산되었다.

코스보에서 한국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종종 평화 운동가들이 정치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선호하는 문체들에서 일방적인 군사적 해결방법을 고집해 왔다. 평화 운동가들은 미국이라는 군사적인 걸리버에 대항하는 정치적인 릴리푸트인이라고 할 수 있다. 종종 다자적으로 적용되는 미약한 정치적 해결방법으로 평화 운동가들은 미국의 거대한 군사적 힘을 중립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야만 했다.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에서, 소인국인 릴리푸트인들은 거인 걸리버를 수많은 작은 바늘로 묶기 위해서 함께 일한다. 이것은 냉전시기의 소련에 대한 유화책이 아니라, 미국 세력의 확장을 유화시키는 21세기의 새로운 유화정책이 될 것이며, 키

난에 의해 제안되었던 군사적 유화책이 아니라 정치적 유화정책이 될 것이다.

〈평화 운동가들은〉각기 다른 수준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왔다. 개별 국가들에서, 평화 운동가들은 〈반전 운동을 주창했고, 군사 예산에 반대하는 로비를 벌였고, 국제적으로 다른 평화 운동가들과 연대를 이룩했다.〉국제적인 수준에서 운동가들은 국제연합(UN)이 전쟁방지 및 분쟁당사자들의 분리 그리고 전쟁의 피해복구를 위한 효과적이고 공정한 다자적 기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국제연합을 개혁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국가와 국제 영역 사이의 회색지대에서, 운동가들은 유럽 국가안전협력 단체(OSCE)와 같은 지역적 분쟁조정 기구들을 미국의 군사적 지배에 대한 대안으로 지지해 왔다.〉

국가와 국제영역 사이의 회색지대 중 하나인 동북아시아는 평화 운동가들에게 특별한 도전을 시사한다. 미국 안보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동북아시아는 미국의 군사적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모니를 통한 평화 이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정부의 입장이 되어온- 에 따르면, 미국 군대와 기지들, 제 7함대가 이 지역의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다른 국가들을 분리시키는 완충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군사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것이며, 한반도는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증강된 일본의 군사력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을 위협하리라는 예상이다. *Sheldon Simon, Alternative Visions of Security in Northeast Asia,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Fall 1996), p.91*. 사이먼은 이 힘의 공백에 대한 공포가 중국과 북한 관리들로 하여금, 공식적인 발표와는 대조적으로, 그들 정부가 심지어 통일 이후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는 것을 지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동기부여가 된다고 주장한다. 비록 미국이 수년간 중국과 관련된, (그 다음에는 중국을 유화하는) 정책이나, 필리핀 기지로부터 미군을 철수시키고는 최근의 방문국협정 (Visiting Forces Agreement)를 통해 주둔을 다시 추진하는 정책, 한반도의 군비 축소를 두고 계속되었던 실랑이 등 특정 정책에 대해서는 불명확하고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여왔으나, 미국 전략의 핵심은 여전히 동일하다. 미국 안보 토론의 주요흐름에 따르면, 미국은 평화적 힘으로서, 아시아의 핵심 지역들은 미국 국익의 영역에 포함되며, 미국 군사력은 반드시 이 지역의 전쟁 억지에 경찰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군사력의 압도적인 존재로 인해서 동북아시아는 다자주의가 매우 약한 지역이 되어왔다. 사실, 동북아시아는 세계에서 다자적 안보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주요지역이다. 대신에, 동북아시아는 쌍무적 관계로 이루어진 지역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일본과 한국과의 강력한 쌍무적 관계를 통해 아시아 지역에 개입해 왔다. 아시아 지역의 다른 국가들은 유사하게 자신들의 유대관계를 다져 왔다. 전통적으로 북한은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동맹관계를 유지했다(때로는 다른 한쪽을 희생시켜 나머지 한쪽에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본과 남한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안보정책에 공조를 취해왔고, 지난 10년간 무역을 통해 중국과 남한의 관계는 더 친밀해졌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지정학적인 동기에 대한 공동의 의구심에 근거하여 좀더 가까운 경제적, 안보적 유대를 추구하고 있다. *Pavel Felgenhauer, Asian Triangle Shapes Up, Moscow Times, February 25, 1999. Also Yeltsin, Zhu discuss strategic partnership, Daily Yomiuri, February 27, 1999. And Stephen Blank, Which Way for Sino-Soviet Relations? Orbis, Summer 1998*. 간단히 말해서 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종류의 쌍무적 동맹관계를 맺고 있으며, 쌍무주의의 중요성은 최근 몇 년간 부각되고 있다. *Young-sun Song, The Korean Security Choice: Feasibility of a Multilateral Security System, Korean Journal for Defense Analysis (month, 1999), p.94*.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집단적 안보문제

에 관한 조직적인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마주앉아 협상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지역안보 기구들은 대체로 영향력이 작다. ASEAN 지역포럼은 Spratly 섬 분쟁을 해결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OSCE는 유고슬라비아 위기를 제대로 처리할 능력이 없었고, 아프리카 통일 회의(Organizations of African Unity)는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수많은 분쟁을 조정하지 못했으며, 그 외에도 수많은 예가 있다. 지역 안보기구들이 분쟁해결에 실패한 사례의 자세한 예를 위해서는 Paul Diehl, *International Peacekeeping*(Baltimore: Johns Hopkins Press, 1993)를 참조

그렇다면 이 문제야말로 동북아시아의 평화 운동가들에게 주요 도전과제가 될 것이다. 미국의 역할의 약화를 구분짓는 것은 미국에 의해 지원되는 쌍무주의를 다자적 구조로 대체하는 장기적 목표이다. 이 다자주의는 단순히 힘의 분산과 연결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것은 권력의 본성에 있어서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아시아 지역을 분산시키고 있는 많은 분쟁에 대한 군사적 해결에서 정치적 해결로의 전환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동북아시아의 다자적 안보 대안 건설에 대한 구조적 장애물들을 고찰하면서, 유럽의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적용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또한 다자적 체제를 건설하는 두 가지 방법 - 위로부터, 그리고 아래로부터 - 을 간략하게 분석하는 것으로 끝맺을 것이다.

다자주의의 걸림돌

국경간의 분쟁은 동북아시아의 긴장의 주된 원인이 되어 왔다. 한반도는 여전히 분리되어 있고, 러시아와 일본은 남한과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분쟁대상인 섬을 두고 다투고 있다. 좀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중국과 대만이 평화적인 공존의 공식을 찾으려는 길은 아직 멀기만 하다. 이 분쟁들은 지역의 역사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 러시아와 미국이 지정학적 게임의 비교적 새로운 참가자인데 반해, 일본과 중국은 동북아 지역의 주도권을 차지하려고 오랫동안 시도해 왔다. 이렇게 대립되는 제국주의자들의 주장으로 이루어진 역사는 듣기좋은 외교적 용어로는 쉽게 호도될 수 없다.

다자주의는 대립적인 국가들로 가득찬, 심지어 깊은 반감을 가진 국가들일지라도, 지역에서도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다자주의는 국가들이 다른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뿌리를 내릴 수 없다. 한반도의 분단과 미국, 일본, 남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북한이라는 외교적 망각지역의 존재는 이 지역의 다자주의의 주요한 도전일 것이다. 다자적 구조가 이러한 증점적인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이 분쟁들이 다자적 구조가 형성되기 전에 해결되어야만 하는가? 다시 말하면, 북한의 상대적 고립상태를 미국, 남한, 일본이 사안별 협상을 통해 쌍무적 관계로 접근해야 하는가? 아니면 4자, 6자 혹은, 8자간 협상이 이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는가?

현재 북한은 경제적 자급력을 회복하고 동북아 지역의(나아가서는 세계의) 외교적, 경제적 생활에 좀더 통합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전 휴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대체하기 위한 4자회담(중국, 남한, 북한, 미국이 참여하고 있는)의 몇몇 개의 다자적 포럼에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에너지 개발기구(Korean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북한의 경수로 건설을 위한 합의체제 아래 1994년 발효된 단체); Track Two initiative, 아태 안보협력위원회(The Council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CSCAP). 동시에 북한은 외교적 인정과 경제체제 해제를 위한 미국과의 쌍무적 협상

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과도 그 강도는 덜하지만, 정치적 인정과 제 2차 세계대전 보상을 둘러싼 쌍무적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다. 양자회담에서 북한은 몇번 논의를 무산시켰는데, 그 이유는 남한 정부가 비료제공문제를 이산가족문제의 진전과 연계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중국과 지속적인 호혜국으로서의 쌍무적 관계의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1990년대 초의 냉담기 이후 러시아와도 친밀한 관계를 재계했다. 심지어는 대만과는 주로 경제적인 요인으로 해서, 암묵적으로 관계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북한은 미국언론에 의해 보도된 바대로의 '비합리적인 악당'이라기보다, 점진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경제적 외교적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지역의 가장 강력한 행위자이며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주도를 따를 것이라는 현실주의의 이해에 근거해서, 북한은 뚜렷하게 미국과의 직접협상에서 최선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자신만이 북한의 핵 야심을 억제할 수 있다는 확신아래, 명목적으로는 일본과 남한과의 공동보조와 함께(특히 특별전담관인 윌리엄 페리의 방문과 기획된 보고서를 통해), 쌍무적 협상관계를 추진해 왔다. 물론 북한과 미국 모두 분쟁해결을 위한 양자회담에 무게를 두고 있긴 하지만, 그 이유는 각각 다르다고 하겠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이 상당한 정도의 외국 투자를 포함한 실질적인 개입을 이끌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북한체제의 변화(보수주의자들은 체제의 붕괴를 선호하고 자유주의자들은 체제의 점진적 변화를 선호한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의도의 불균형은 계속해서 북-미 관계의 충돌을 낳게 될 것이다. 북한 이슈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다.

< 이렇게 다양한 국경간의 분쟁은 최근의 경제적 불황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경제적 위기는 남한을 강타했고, 러시아 경제는 말그대로 폭발일로에 있으며, 북한은 장기간의 경제적 침체로 고통받고 있다. 일본은 10년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까지도 수출에 근거한 성장률의 저하를 목도하고 있다. 그러나 군비경쟁은 동북아시아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다. 남한은 2000년 국방예산을 5.5% 증강시킬 계획이며, 제한거리 300 km의 미사일 개발에 관심을 천명했다. 러시아는 군비 수출 산업을 다시 활성화시켰고, 일본은 자위대의 보유능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북한은 국방예산을 삭감했으나, 미사일 능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보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중국은 경제위기의 여파를 거의 받지 않는 관계로, 계속해서 군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비구매 및 군사적 현대화의 개략을 위해서는, Janes를 참조할 것* 미국은 동북아에 거대 군사력을 유지하는데 따르는 막대한 비용에 주목하고, 비용의 분담 내지는 일본과 남한에게 각각의 방식으로 지불하게 만들기 위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 >

이런 군비 경쟁에 있어서의 가장 최근의 기술적 진전은 미국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전역 미사일 방위 체제(TMD)이다. 국무부는 동북아 지역의 미국의 동맹국들을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우산을 씌우려고 계획하고 있다. TMD는 수많은 기술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높은 고도의 부품(소규모의 스타워즈)은 현재까지는 이론상으로만 존재할 뿐 아니라, 여전히 일련의 실험에 통과해야 한다. 일본이 TMD 연구에 자본을 투자하는데 동의한 반면, 다른 국가들은 그다지 열성적이지 않다. 러시아는 1972년의 탄도 미사일 금지 조약이 무효화되었던 것을 염려하고 있다; 중국은 강력하게 대만을

포함시키는 데 반대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일부가 기술적인 분산효과를 기대하고 있긴 해도, 당분간, 남한 정부는 TMD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중국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그러한 체제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TMD는 철의 장막이 유럽을 갈라놓았던 것처럼 동북아에 선을 긋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 연구단계에 있긴 하지만 TMD를 북한과 중국(그리고 러시아마저)과 같은 악한들을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일본, 남한, 대만과 같은 국가들과 구분하는 방편의 하나로 이용하고 있다. TMD 한계선은 열강들을(예를 들어 중국과 일본) 분리시키는 것은 물론, 국경간 분쟁선 사이를(한반도, 중국/대만) 지나고 있다. 이 선은 또한 동북아의 다자적 안보체제 구축을 하려는 노력 자체를 꺾는 선이기도 하다.

미국이 군비판매와 동북아의 냉전 기류의 유지에 있어서 유일한 배후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주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유럽의 군비 제조업자들은 이 지역에 무기를 쏟아붓고 있다. 동북아지역의 엘리트계층 또한 군비구매에 책임이 있다.(또한 남한의 초기의 핵 야심과 현재의 미사일 개발 계획과 같은 특정 사례들에 있어서는 미국 정부가 지역의 군비경쟁을 일정정도 제한하는 기능을 했다.) 동북아지역의 엘리트 계층은 진정한 지역적 다자주의를 희생양으로 해서 미국 또는 다른 나라들과 좀더 유리한 협상을 추구해온 데 대한 책임도 공유해야 한다.

요약해서 말하면, 동북 아시아에는 다자적 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 많은 구조적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다. 미국은 아직 자신의 군사적 존재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국경에 관계된 사안들은 지속적인 것이며 분리적이다. 북한의(그리고 대만의) 야심적인 지위는 상당한 외교적 도전을 던지고 있다. 쌍무주의는 협정을 협상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주요 방편이 되어왔다. 지역의 군비경쟁과 새로운 TMD 계획은 긴장을 고조시키고 신뢰에 기반한 협상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있다.

유럽의 경험

2000년 10월에, 서울은 제 3차 아시아-유럽 회의(ASEM)를 주최하게 될 것이다. 제 3차 ASEM을 기념하여, 나는 다자적 안보체제라는 대안의 문제를 유럽의 시각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975년에 유럽 국가들은, 미국, 캐나다와 함께, 유럽 안보협력 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CSCE)를 주창했으며, 그것은 오늘날 안보 문제를 위한 다자간 포럼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 운동가들은 이런 유럽의 경험으로부터 어떤 종류의 긍정적인, 또 부정적인 교훈들을 얻을 수 있는가?

먼저, 두 지역간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적인 차이라면 선행된 통합의 영향, 한국전이라는 비극, 서독과 일본의 다른 역할,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 있겠다. 첫번째 요소에서 판단하건대, 서유럽과 동유럽은 모두 1975년의 CSCE 창설 이전부터 합리적으로 잘 통합된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덧붙여, 각각의 유럽 모두 상당정도의 정치적 협력을 각각의 반구 안에서 이루고 있었다. 비록 CSCE의 장래 일부 회원국들은 안보 동맹체(NATO/Warsaw Pact:바르샤바 조약기구)나 경제 협력(EU/Comecon)중 어느 것에도 속해있지 않았지만, 지역 협력의 경험들은 그러한 거대한 다자적 협상 체

제를 좀더 가능성있게 만들었다.

냉전기의 서유럽에서 전쟁이 없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동북 아시아는 1950년부터 1953년까지 한국전쟁을 경험했다(수많은 소규모 사태들이 1950년대 이후와 이전에 계속되면서). 동북 아시아 중심부에서 일어난 이 내전은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두 한국간의 관계와 좀더 넓게는 지역적 관계에 있어 심각한 장애물로 남아 있다.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세번째 주요한 차이는 일본과 서독이 하고 있는 역할과 관련된다. 제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들로서, 일본과 서독은 모두 미국에 밀접하게 연결된 방어적인 안보 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유사성은 이것뿐이다. 1950년대 후반에서부터, 서독은 야심적으로 동진정책(Ostpolitik)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동독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 동유럽과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확장시키는 것, 그리고 소련과 함께 동-서 화해무드 조성을 북돋우는 것. 게다가, 서독은 광범위한 사회와 함께 제 2차 세계대전 범죄 희생자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제 2차 세계대전중의 범죄에 대한 일본의 보상은 그 희생국들에게(특히 남북한 모두와 중국) 만족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더우기 일본은 보상금의 형태로 거의 제공하지 않고 있다(그것도 대체로 집단 소송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부간 쌍무협약을 통해서). 또한 일본의 대 소련, 중국, 북한 정책은 상당히 모호했을 뿐 아니라, 화해무드에 가세할 때도 미국의 주도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최근에, 지역적 화해조정자로서의 주도적 역할을 맡는 대신, 일본은 미국이나 남한보다도 대북한 정책에 있어 더 유연성 없는 태도를 보여 왔다.

이렇게 유럽과 동북아의 경험에 있어서의 상당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CSCE/OSCE의 예는 여전히 유용하다. 결국,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은 냉전 분단체제를 극복했다. 유럽 국가들은 미약하나마 NATO와 독립적으로 다자간 안보 체제를 구축하려고 시도해 왔다. 마지막으로 유럽은 베를린 장벽과 소련 연방, 유고슬라비아의 삼중 붕괴와 함께 가속화되고 있는 인종적/국경간 분쟁들을 환기시키는데는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동북 아시아의 평화 운동가들은 OSCE의 성공과 실패사례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우선 CSCE의 구성에서부터 시작해 보자. CSCE는 수년간 서독이 참을성 있게 주도권이 부재했다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서독은 발트해 공화국(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에 대한 소비에트 연방의 권한을 인정함으로써 국경간 이슈에 대해 타협을 이루었고, 독일 국경의 상당한 부분을 폴란드로 귀속시키는 오더-나이제 라인을 승인했다. 두번째로, 서독은 1960년대 중반, 동유럽 국가들과 무력사용포기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게르만 재무장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갔다. 예를 들어, 1963년부터 1989년까지 서독은 이산가족 상봉과 정치수들의 이감비용으로 3억 5천만 마르크에 상당하는 자금을 동독에 지원했다. 비록 동진정책이 사회민주당(SDP)의 창안이기는 했으나, 그것은 기독교민주당(CDP)의 핵심적인 외교정책으로도 결국 받아들여졌다. 다시 말하면, 동진정책은 독일 외교정책의 뿌리깊은 합의의 토대가 되었던 것이다. 두 독일간 협력관계의 세부적 사항을 참조하려면, Timothy Gatten Ash, *In Europes Name: Germany and the Divided Continent* (New York: Vintage, 1993)

간단히 말해서 CSCE는 서독이 동-서관계의 주도권을 확고하게 다진 상태에서 건설되었다. 분단국은

자신의 분단이 바로 지역의 분단이기도 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서독은 독일 통일이 더 넓게 나아가 유럽문제의 해결에 좌우되며, 독일인들은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CSCE는 서독의 동진정책에만 의존해 건설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상호균형적 군비축소(the Mutual and Balanced Force Reduction) 회담과 전략적 군비축소 조약(the Strategic Arms Limitation Treaty: SALT 1) 그리고 1972년 5월의 닉슨-브레즈네프 정상회담을 포함하는 동-서 화해무드의 절정기에 이루어졌다. 이 경우에 다자주의는 주로 미-소 관계와 서독-소련 관계로 이루어진 쌍무관계가 진전한 계기에서 비롯되었다. *Ive는 CSCE OSCE의 공식적인 연혁을 OSCE의 웹사이트에 적고 있다 (website at http: www.osce.org.)*

게다가 CSCE는 거대한 타협위에 존재했다. 독일의 리더십을 따라서, 서방세계는 현존하는 국경이 침해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다시 말해서, 서독은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의 일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서유럽이 발트해연안 국가들의 소련 연방으로부터의 독립요구를 지원하지도 않기로 했다. 그 대신에 명목상으로 공산주의 블럭은 일련의 인권조항들에 대한 지원을 발표했다. 이 타협과, 동진정책의 실행, 그리고 미국-소련 화해 무드로 인해서 CSCE는 이데올로기 통합과 생활수준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 회원국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

CSCE의 창설 초기의 몇 가지 다른 특징들도 주목할 만하다. 우선, CSCE는 기구가 아니라 일종의 단계였으며, 공식적인 사무실도 없을 뿐더러, 평화유지를 위한 상설 군대도 존재하지 않았다. CSCE는 동의에 의해 운영되었고, 그 결정은 법률적으로는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포괄적인 안보 개념을 추구하여 좀더 전통적인 개념의 군사 안보와 함께 환경과 인권 문제들에 대한 고려도 포함시켰다.

CSCE는 예상된 성과와 같이, 예상치 못했던 성공도 이끌어 내었다. CSCE 체제 밑에서 서방과 동방은 군비 감시와 같은 전통적인 신뢰에 근거한 조치들과, 좀더 큰 투명성을 필요로 하는 조치에 동의했다. CSCE는 또한 증가된 무역, 문화교류, 기술적 협력을 통해 비군사적 방면의 협력도 배가시켜 갔다. CSCE 과정의 주요한 예상치 못한 성과는 CSCE 회원국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를 감시하기 위해 결성된 헬싱키 모임이었다. 이러한 그룹은 결국 동유럽과 소비에트 연방의 공산주의 정부의 몰락을 가져온 반정부 운동에 기여하게 되었다. 인권에 대한 수사학적인 책임에서 시작되었던 일들이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인권운동의 성장에 가장 눈부신 업적이 되었다. 헬싱키 워치(Helsinki Watch), 1975년에 조인된 헬싱키 조약에 따라 이름붙여진 이 조직은 다른 지역 감시 단체들로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이런 우산모양으로 확산된 이 단체는 현재 Human Rights Watch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장점과 성공사례에도 불구하고, CSCE는 한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실패를 기록했다. 이것은 북대평양 조약기구(NATO) -한 인기있는 풍자어구에 의하면, 미국인들을 유럽안에, 러시아인들은 유럽밖에, 독일인들의 세력을 확장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1949년에 창설된 범대서양 동맹-를 대체하지 못했다.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뒤이어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소되었을 때, CSCE는 당연히 냉전후의 후계 기구로서 손색이 없었다. 어쨌거나, CSCE는 나토보다 회원국과 범위에 있어 좀더 포괄적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토는 소련을 억지하려는 집합적 안보 합의로 정의되었기 때문에, 적의 부재상황, 곧 목적이 사라진 상황에서 나토는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함께 해소되어야 옳았다.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CSCE는 나토를 대체하지 못했다. 1990년, CSCE가 OSCE로 바뀌면서(따라서 '과정'이 아니라 '기구'가 되었을 때), 미국은 의도적으로 충분한 예산확보와 책임을 향상시키는 문제를 가로막았다. 부시 행정부는 OSCE가 나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물론 중립적이고 비군사화된 유럽을 원하지 않았다.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나토는 해체되고 있는 소비에트 연방을 유화시키기 위해, 그리고 중동과 북부 아프리카의 지역의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했다.

OSCE가 나토를 대체하지 못하게 한 두번째 요소는 유고슬라비아 위기상황이었다. 비록 OSCE가 개념적으로 발칸 반도의 분쟁을 막는 정통성을 가진 기구이긴 했지만, OSCE는 이 분쟁의 초기 단계에서 개입할 만한, 권위나, 예산, 직원이나 정치적 능력이 없었다. 그 결과 OSCE는 유고슬라비아 사태 해결에 실패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미국은 나토를 그런 종류의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로 지지했다.(실제로는 나토 또한 그런 문제의 대처에 아무런 경험이 없었는데도). 결국 나중에 나토부터 유럽연합, 그리고 국제연합에 이르기까지 어떤 기구도 이 도전에 대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판명 났다.

이런 두 요소로 인해서 나토는 OSCE를 우위의 다자적 기구로 만들었던 모든 특성들을 지빨리 이어받기 시작했다. 나토는 회원국 확장과정을 시작했다(처음에는 평화의 동반Partnership for Peace 계획을 통해, 다음으로 1999년에는 나토 회원국을 폴란드, 헝가리, 체코공화국까지 넓힘으로써). 덧붙여 나토는 최소한 수사학적으로는 안보의 정의를, 환경의 보존과 인권침해 방지까지 포함하는 비군사적 영역으로 확장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나토는 그 권위의 범위를 지리적으로, 단계적으로 동시에 확장하기 시작했다. 미 국무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는 나토가 상호 방위의 좁은 정의에서 벗어나 유럽과 그 외의 지역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규정 없이도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자고 요청했다. *Madeleine Albright, speech to annual foreign ministers meeting at NATO headquarters, December 10, 1998*

이제 위로부터의 접근인 정부간의 입장과 아래로부터의 접근인 시민단체에 의한 입장에서 동북 아시아의 다자적 안보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긍정적이고 또 부정적인 CSCE/OSCE 경험의 교훈을 다음의 토론에 적용시키려고 한다.

위로부터의 다자주의

매년, 동북 아시아의 다자적 안보체제를 위한 새로운 제안들이 쏟아져 나온다. 노태우, 개릿 에반스, 에두와르트 세바르드나제 등은 모두 OSCE에 필적하는 협의체를 아시아에 만들 것을 제안했다. 캐나다와 몽고로부터의 유사한 제안들은 특정한 동북 아시아 안보 논의에 있어 회원국의 숫자를 확장시켰다. *이런 제안들의 연혁을 살펴보면, Lee In-bae, The Retrospect and Prospects on Cooperative Security in East Asia, East Asian Review, Autumn 1998* 를 참조하라. 결가지로나마 동북아 안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정부간 기구를 들자면 아시아 지역 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을 들 수 있다. ARF는 약간의 성과를 거두었다. 1995년에 중국은 처음으로 스프라틀리 섬 문제를 다자적으로 다루는데 동의했다. 그리고 ARF는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남동아시아 핵 자유지대를 지지했다. 그러나, 아시아의 경제위기와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존재가 강화되면서 ARF는 절호의 시기를 놓쳤다. *Walden Bello has written on this subject*

see his contribution to the 1998 Alternative Security conference in Manila sponsored by Focus on the Global South; also the recent Far East Economic Review 게다가 북한은 아직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비록 ASEAN 회원들이 북한의 가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ARF가 동북 아시아 안보 문제를 별도로 다루는데는 능력에 한계가 있다. 북한은 1996년에 회원가입 신청을 했으나 1998년에 재신청하지는 않았다. "아세안이 북한에게 ARF에 가입할 것을 요청하다", *요미우리 신문*, 1998년 6월 5일자 참조 그렇다면 현재, 아시아에서의 안보와 협력에 관한 어떤 단체나 회담도 전적으로 지면으로만 남아있는 셈이다.

앞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CSCE는 두 독일의 친선관계와 미-소 화해무드의 바탕 위에서 건설되었다. 동북아에서 남북한 내의 화해협력과 미-북한 화해무드에 의해 유사한 계기가 형성될 수 있을까?

남북한 간의 화해협력의 가능성은 1997년 말 남한에서 김대중의 당선과 함께 되살아나는 것처럼 보였다. 김대중은 즉시 1988년 노태우의 북진정책을, 다른 방향으로 선회하여 재개했다. 남북한 경험은 권장되었고(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 계획처럼), 다량의 식품과 비료가 북쪽으로 보내졌다; 북쪽에서의 남한 관광객의 숫자는 파격적으로 늘어났다(금강산 관광객으로 제한하더라도); 남한의 많은 양심수들이 풀려났고, 김대중 정부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이 두가지의 남한내 변화는 지속적인 북한의 요구사항이었다)

이러한 남북한 관계개선의 협력단계를 1989년 이전의 동서독 교류와 비교해 보면, 남북한 관계는 여전히 독일인들이 *Verflechtung* 즉 긴밀한 연계라고 명명하는 단계의 아주 초기에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진다. Ash. op. cit., p. 258. 더욱더 우려되는 것은 북한의 김대중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다. 북한 정부는,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햇볕 정책이 형이 동생을 도우러 손을 내미는 것이나 강자가 약자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 기술적으로 더 발전된 쪽이 저개발국에 빛을 비추는, 후원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남한의 태도의 전체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see Roy Richard Grinker, *Korea and Its Futures* (New York: St. Martins, 1998). 더 걱정스러운 것은 남한의 개입정책을 미국이 소련에 취한 접근과 비교하고 있는 김대중의 최근 발언인데, 이것은 북한이 햇볕 정책을 실제로는 체제교란책의 위장일 뿐이라고 해석하게 할 여지가 있다. S. Korea's Kim Defends Policy Toward North, *Washington Post*, June 24, 1999.

북미 관계의 화해 무드도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방성과 미 의회에는 북한과의 교류를 반대하는 강경파가 상당한 세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 세력은 1994년에 합의된 체계를 서둘러 시행하게 하려는 시도에서 계속된 위협을 받고 있다: 1998년 8월에 있었던 북한의 로켓 발사, 금창리의 지하 핵시설에 대한 의심(미국 조사단이 최근 핵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내린), 그리고 가장 최근의 장거리 미사일 테스트. 비록 윌리엄 페리가 경제체제의 부분적 해체와 북한을 외교적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포함해 좀 더 긴밀한 북-미관계를 향한 시도를 시사하고는 있지만, 미국에서의 정치적 기류는 상당히 미약한 편이다.

만약, 동북아시아와 미국에서의 정부들이 CSCE/OSCE의 경험으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인내심이다. 화해 국면은 쉽지 않으며, 특히 서로 전쟁을 치루었던(결국 동-서독은 내전을 겪지는 않았다) 나라들 사이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김대중은 자주 인내심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남한과 미국의 정치세력들은 종종 북한과의 관계개선과는 아무 연관없는 국내적인 사정만으로 완화책으로서 교류

정책을 비난하거나 강성의 군사 정책들을 지원해 왔다. 다자적 안보 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들은 점진적일 뿐더러 때로는 좌절스럽기까지 하다. 하지만 정부는 브라이언 잡이 점진적인 지역주의라고 부르는 지역체제 구축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Brian Job, *Northeast Asia: Is There Hope for Cooperation? Paper presented at 13th Asia Pacific Round Table, Kuala Lumpur, May 30-June 2, 1999, pp. 10-12.*

두번째로, 다자주의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위의 토의가 시사하는 바처럼, 쌍무적 관계는 여전히 중요하다. 따라서 이것은 쌍무주의의 대 다자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쌍무적 관계가 다자적 안보 구조를 위한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다. 새로운 미-일 안보 가이드라인과 미-일의 TMD 연구계획은 북한과 중국같은 지역적 위협국들을 고립시키고 유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배제적인** 쌍무주의이다. 반면, 미국과 북한 간의 새로운 평화관계는 포괄적인 쌍무주의의 한 예로서, 동서독 관계가 CSCE 과정을 돈독히 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다자주의의 토대를 굳힐 수 있을 것이다.

세번째로, 마이클 피넨건이 제안한 것처럼, 동북 아시아에서의 최초의 다자적 구조는 OSCE보다 CSCE로부터 그 영감을 얻어야 할 것이다. 우선 다자적 체계는 비공식적이며 유동적이어야 하며, 몽고와 캐나다는 이런 작은 세력들이 CSCE의 성립에 중립적인 유럽국가들이 행했던 것처럼 중요한 균형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Michael Finnegan, *Constructing Cooperation: Toward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ian Perspective* (Vol. 23, No. 1, 1999)

네번째로, 만약 다자적 구조가 동북 아시아의 중요한 국경 분쟁들을 다루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한다면, 관련된 국가들은 CSCE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했던 것과 같은 다른 차원의 대타협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 타협은 뚜렷하게 주권의 문제를 다루고(북한의 외교적 인정 문제), 지역적 통합(다양한 국경 분쟁)도 다루어야 한다. 지역의 두 강대국으로서 모든 당사국들이 협상에 임하는데 대전제들을 필수적으로 만드는 것은 미국과 일본의 의무가 될 것이다. 특히 일본정부는 어떻게 화해 정책이 지역 안보와 번영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지 이해하기 위해서 1960년부터 1989년까지의 독일의 외교정책의 성공사례들을 주의깊게 참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북 아시아의 다자주의를 형성하는데 경제적 통합이 필수적으로 기능할 것이다. 어떻게 현재의 대립적인 체계(앵글로 아메리칸 자유방임주의의 대 국가 개입을 권장하는 아시아 모델)가 안보의 영역까지 확장되는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고찰하기 위해서는 이 논문의 범위로는 부족하다. 경제 세력들은 확실히 강력하지만, 무역의 증가가 그 자체만으로 지역의 분쟁의 날을 무디게 하고 각국의 유대를 돈독히 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다. 이 오류의 다른 버전은 만약 동북 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국제무역기구(WTO)에 가입하게 되면, 국경간의 분쟁을 사라질 것이라는 잘못된 예상을 하고 있다. 경제적 협력으로 인한 예상되는 이익이 CSCE를 좀더 구미가 당기는 제안으로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부유한 서부유럽과 가난한 동부유럽이라는 단절 구도는 OSCE를 덜 효과적인 기구로 만들고 있다. 세계 무역에는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며, 이 단절은 국가간의 분쟁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물론, 평화 운동가들에게 동북아시아의 정부들이 공동협력을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은 실수이다. 다자주의는, 비록 그 노력이 정부 차원에서 시행된다 할 지라도, 아래로부터 진행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다자주의

비록 CSCE가 비정부 기구와 Track II 외교가 성장하기 이전에 결성되었지만, 여전히 밑으로부터, 냉전의 긴장을 정치적이고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타개하는 것을 선호하는 풀뿌리 운동들의 과정은 존재했다. 평화 운동가들과 진보적인 엘리트들은 1950년대에는 핵무기에, 1960대 초기에는 지상 실험에 반대하는, 1970년대에는 군비규제 조처에 찬성하는 캠페인을 벌여왔다. 또한 그들은 동서독 협력과 미-소 화해 국면, 그리고 유럽과 소련에 걸친 인권운동들을 지지했다.

동북아시아 엘리트 계층의 수준에서는, Track II 과정(학자, 정책분석가, 때때로 관리들의 만남)이 1990년대 들어서 증가해 왔다. Paul Evans and Shirley Yue, *Dialogue Monitor. To receive their e-mail update on Track II events in the region, send an e-mail to Shirely Yue at syue@yorku.ca* 1993년에서 1994년의 핵 위기에, Track II 주력은(셸릭 해리슨과, 토니 남궁, 노틸러스 기구에 의한) 미국과 북한 사이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결국 1994년의 합의체제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했다. Track II 외교의 역사를 보려면, see Leon Sigal, *Disarming Stranger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Track II 외교의 진보주의 엘리트계층의 역할은 잘 규정되어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아래로부터 다자주의를 촉진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 평화 운동가들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 세 가지의 가설적 제안들이 있다.

특별 제안

평화 운동가들은 동북아의 핵무기금지 구역과 같은 특정 사안들에 대해 시위할 수 있을 것이다. 중부 유럽의 유사한 핵무기 금지 방안들은 1980년대 시위의 중요한 사안으로 판명되었으며,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다. 동북 아시아에서, 그러한 지역은 북한의 비밀 군사계획이나, 심지어 더 비밀스러운 남한이나 일본의 계획, 불안한 러시아의 핵 통제력, 그리고 부정도 확인도 하지않는 정책인 미국의 군함과 잠수함 계획에 대한 지역적 안보 사안들을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관심이 북한에 쏠리고 있는 가운데, 존 에디코트가 언급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한 개념의 성공에 중요한 것은 일본의 책임의식이며, 특히 일본의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핵저장고를 다국적 감시단에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일본에 의해 보유하고 있는 8톤의 플루토늄보다 동아시아에 불안정을 야기하는 요소는 없을 것이다. John Endicott, *Great-Power Nuclear Forces Deployment and a Limited Nuclear-Free Zone in Northeast Asia in Young Whan Kihl and Peter Hayes, eds.,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The Nuclear Issue and the Korean Peninsula* (Armonk, New York: M.E. Sharpe, 1997), p. 382.

다른 특정 사안은 중립국으로서의 한국을 되살리는 것인데, 이것은 1960년에 주일 미국대사 마이크 맨스필드에 의해 제안되었다. Bruce Cumings, *Koreas Place in the Sun* (New York: Norton, 1997), p. 490. 맨스필드는 그가 이 제안을 했을 때 호주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최근의 대화에서, 한국의 한 국회의원은 나에게 필란드가 한국에게 있어 적절한 모델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말했다.(소련에 대한 중국과의 위치에

있어서) 중립적인 한국은 위에 토의된 대전제의 실마리로서 작용할수도 있을 것이다.

아시아 지역의 군비경쟁이 엄청나게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평화 운동가들은 특정 무기판매와 특정 무기판매 체계에 집중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비록 특정 무기 체계에 맞춰 변형시킬 필요는 있겠지만, 그러한 캠페인은 대인지뢰 캠페인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역협력 저항운동

1980년대의 반핵 운동은 대서양전역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협력적 저항시위로부터 엄청난 도움을 받았다. 더 많은 평화운동가들이, 특히 일본과 한국의 운동가들이 특정 시위와 프로젝트에서 많이 협력하면 할수록, 언론과 정부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미국 기지를 유지하는 데 드는 엄청난 비용이나 무기구매, 정부 부패(현재 남한의 뜨거운 주제인), 또는 주권에 대한 도전과 같은 뚜렷한 이슈를 강조함으로써 어떻게 시위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고려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풀뿌리로부터의 관용과 평화건설운동

위에 언급한 것처럼, OSCE는 1990년대의 소련 연방과 유고슬라비아 내의 시민 분쟁이 확산되는 것을 막지 못했으며, 또한 대체로 독일의 이민이나, 동유럽 전체에 걸친 집시들에 대한 인종폭력의 증가를 다루는데 무력했다. 최소한 수단의 문제에 있어 냉전의 종식은 유럽에서의 폭력의 증가를 의미했다고도 할 수 있다.

동북아의 평화 운동가들은 이런 유럽의 비극에 주의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비단 국가들만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평화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의 평화 운동가들에게 있어 대인 교류를 지속하고,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한 민족들간의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의 일부는 관용이다. 나는 불의를 참아넘기는 의미에서의 관용을 의미하지 않는다. 차이를 인식하고, 차이를 받아들이며, 더 중요하게는 차이를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의미의 관용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관용은 평화의 기초과정이다. 동북아의 이런 종류의 관용이 건설되지 않는다면, 동북아는 유럽과 같은 운명을 겪을 지도 모른다. 민족간의 벽을 허물지 않은 채로 아시아의 냉전이 끝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평화는 제자리를 찾지 못할 것이다. ■

Building Peace in Northeast Asia The Future of Multilateralism

John Feffer
/ AFSC

During the early 1970s, whe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entered a period of relaxed tensions, U.S. Secretary of States Henry Kissinger proclaimed that the world had become bipolar militarily and multipolar politically Suisheng Zhao, *Power Competition in East Asia* (New York: St. Martins, 1997), p. 136. In other words, while the Soviet Union and the United States remained the worlds premier military superpowers, other centers of political power had emerged. The situation has changed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In todays unipolar world, there is only one major military superpower: the United States. Political and economic power has become more dispersed, however, as individual countries such as China have become more powerful, regions such as the European Union have grown in importance, multilateral institutions such as APEC have proliferated, and non-state actors such a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mnesty International, Greenpeace)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play a more prominent role in world politics. From Kosovo to Korea, the United States often seeks unilateral military solutions to problems that peace activists prefer to see resolved by political means. Peace activists are the political Lilliputians to the military Gulliver of the United States. With many slender political threads, often applied multilaterally, peace activists must attempt to neutralize the U.S. military giant. In Jonathan Swifts *Gullivers Travels*, the tiny Lilliputians work together to tie down the giant Gulliver with many small ropes. This will be a new containment policy for the 21st century containing the expansion of U.S. power rather than, as in the Cold War, containing the Soviet Union. This is a *political* containment policy rather than the

Kennan-inspired *military* containment.

Peace activists have grappled with this problem at many different levels. In individual countries, peace activists have built anti-war movements, lobbied against military spending, and established links with peace activists internationally. At the international level, activists are attempting to reform the United Nations so that it can act as an effective and fair multilateral instrument for preventing war, separating warring parties, and reconstructing war-torn countries. In the gray area between the national and the international, activists have supported regional conflict resolution structures such as th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as an alternative to U.S. military dominance.

Northeast Asia, one of these gray areas between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arenas, presents a special challenge for peace activists. From the perspective of U.S. security specialists, Northeast Asia remains peaceful only because of the U.S. military presence. According to this peace through hegemony argument -- which has been the U.S. government position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 U.S. troops, bases, and the 7th fleet act as a buffer separating the conflict-disposed countries of the region. Without the U.S. military, China would invade Taiwan, the Korean peninsula would be engulfed in war, and a growing Japanese military would threaten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See, for instance, Sheldon Simon, *Alternative Visions of Security in Northeast Asia*,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Fall 1996), p. 91. Simon notes that fear of this power vacuum has motivated both Chinese and North Korean officials to suggest that, official pronouncements to the contrary, their governments might support the continued presence of U.S. troops on the Korean peninsula, even after unification. Although the U.S. has vacillated on specific policies over the years -- engaging China then containing it, withdrawing from Philippine bases then pushing through the recent Visiting Forces Agreement, going back and forth on troop reduc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 the core of U.S. strategy remains the same. According to the mainstream U.S. security debate, the U.S. is a Pacific power, key areas in Asia fall into the realm of U.S. national interest, and the U.S. military must play a constabulary role in the region to prevent war.

Largely because of the overwhelming presence of the U.S. military, Northeast Asia is a region of very weak multilateralism. It is, in fact, the only significant region of the world without a multilateral security structure. Instead, Northeast Asia is a region of bilateral relationships. For example, the U.S. remains engaged in the region through its strong bilateral relationships with Japan and Korea.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have forged their own ties. Traditionally, North Korea has maintained alliances with China and Russia (sometimes moving closer to one at the expense of

the other). Japan and South Korea have coordinated security policies with the encouragement of the U.S. In the last decade, trade has pushed China and South Korea closer together. Russia and China are exploring closer economic and security ties based on shared suspicion of U.S. geopolitical motives. Pavel Felgenhauer, Asian Triangle Shapes Up, *Moscow Times*, February 25, 1999. Also Yeltsin, Zhu discuss strategic partnership, *Daily Yomiuri*, February 27, 1999. And Stephen Blank, Which Way for Sino-Soviet Relations? *Orbis*, Summer 1998. In short, all the countries in the region engage in a shifting set of bilateral alliances, the importance of bilateralism has only grown over the last several years, Young-sun Song, The Korean Security Choice: Feasibility of a Multilateral Security System, *Korean Journal for Defense Analysis*, (month, 1999), p. 94. and Northeast Asian countries are reluctant to sit down together to hammer out collective solutions to collective security problems. Regional security institutions tend to be rather weak in general. The ASEAN Regional Forum hasnt been able to untangle the Spratly Island dispute; the OSCE was incapable of dealing with the Yugoslav crises; the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has not been able to resolve numerous conflicts between African countries; and so on. For a description of the failures of regional security organizations to resolve disputes, see Paul Diehl, *International Peacekeeping* (Baltimore: Johns Hopkins Press, 1993).

This, then, is the general challenge for peace activists in Northeast Asia. It is a long-term goal of replacing a U.S.-fostered system of bilateralism with a multilateral system that features a much more modest role for the U.S. This multilateralism entails not simply a dispersion of power. It is a change in the *nature* of the power, for it means a shift from military to political solutions for the many conflicts that divide the region.

This essay will examine the structural impediments to constructing multilateral security alternatives in Northeast Asia. It will attempt to apply the lessons of the European experience. And it will conclude with a brief analysis of two methods of building multilateralism -- from above and from below.

Obstacles to multilateralism

Territorial disputes remain a chief cause of tensions in Northeast Asia. Korea is still divided; Russia and Japan continue to squabble over disputed islands as do South Korea and Japan; and a little further south, China and Taiwan have yet to find a formula for peaceful co-existence. These disputes have deep roots in the history of the region. Japan and China have long attempted to dominate the region while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are relative newcomers to this geopolitical

game. This history of conflicting imperial claims cannot be so easily papered over with fine sounding diplomatic language.

Multilateralism can function in a region full of contentious countries, even ones with deep animosities. But it cannot take root in a region in which countries do not recognize each others existence. The division of Korea and the diplomatic limbo of North Korea with respect to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outh Korea -- is perhaps the major challenge to multilateralism in the region. Can multilateral structures resolve these outstanding issues, or should these disputes be resolved *before* multilateral structures can be built? In other words, should North Korea's relative isolation be addressed on a bilateral basis, through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and Japan on a case-by-case basis? Or can four-party, six-party, or eight-party negotiations approach these issues comprehensively?

Currently North Korea is striving to regain economic self-sufficiency and become more integrated into the diplomatic and economic life of the region (and the world). North Korea participates in several multilateral forums in the Four-Party Talks to replace the Korean War armistice with a peace treaty (involving China, South Korea,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Korean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the institution responsible under the 1994 Agreed Framework for the construction of the light-water reactors in North Korea); the United Nations Tumen River Development Program; and the Track Two initiative, the Council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CSCAP). At the same time, North Korea has pushed hard for bilateral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on diplomatic recognition and an end to economic sanctions. It has pushed less hard in bilateral negotiations with Japan on diplomatic recognition and World War II reparations. It has several times walked out of the Two Party Talks becaus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linked fertilizer contributions to progress on the divided families issue. It continues to enjoy favorable bilateral relations with China and again, after a cold spell in the early 1990s, with Russia. And it has even reached out, quietly and for economic reasons, to Taiwan.

Rather than the irrational rogue portrayed in the U.S. press, North Korea is very pragmatically pursuing the best possible economic and diplomatic deal. Based on a *realpolitik* understanding that the U.S. is the most powerful actor in the region and that other countries will follow the U.S. lead, North Korea apparently sees its best chance in direct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The U.S., convinced that only it can restrain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s, has pushed for bilateral negotiations, albeit with substantial coordination with Japan and South Korea (particularly around the

trips and planned report of special advisor William Perry). Although both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gravitate toward bilateral talks to resolve their disputes, they do so for different reasons. North Korea expects that a deal with the U.S. will lead to real engagement, including substantial foreign investment. The U.S., meanwhile, is angling for a change in North Korea's system (conservatives favor a regime collapse; liberals prefer a soft landing). This asymmetry of intentions will continue to generate many conflicts in U.S.-North Korean relations. I will return to the issue of North Korea below.

These various territorial disputes are fueling a regional arms race, despite recent financial setbacks. An economic crisis has hit South Korea. The Russian economy has virtually imploded. North Korea is suffering from a long-term economic decline. Japan is mired in a decade-long stagnation. Even China has witnessed a slowdown in its export-driven growth. Yet the arms race continues unabated in the region. South Korea will be posting a 5.5 percent military budget increase for 2000 and has most recently declared an interest in developing a 300-km missile. Russia has revitalized its arms exports industry, and Japan is beefing up the capacities of its Self Defense Forces. North Korea is reducing its military budget but attempting to compensate with an enhanced missile capacity. And China, relatively unscathed by the economic crisis, continues to modernize its military. For a review of arms purchases and military moderniz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see ---, Janes. The U.S., sensitive to the high costs of supporting a large military presence in the region, has been pushing for burden-sharing, or making Japan and South Korea pay their own way.

The latest technological twist to this arms race is the U.S.-initiated Theater Missile Defense program (TMD). The Pentagon proposes to throw an umbrella over U.S. allies in the region to protect against missile attacks from North Korea and China. TMD faces numerous technical challenges: the high-altitude component (a mini-Star Wars) so far exists only on paper and has yet to pass a series of tests. While Japan has agreed to invest money into TMD research, other countries are significantly less enthusiastic. Russia is concerned about the violation of the 1972 Anti-Ballistic Missile Treaty; China strenuously opposes the inclusion of Taiwan. Although some in South Korea imagine technological spin-offs, for the time being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decided not to participate in TMD -- in order not to offend China and because such a system would not protect from North Korean attack.

TMD draws a line through Northeast Asia just as the Iron Curtain once divided Europe. The U.S. is using TMD, though it is mostly in the research stage, as a way of distinguishing rogue

powers such as North Korea and China (and even Russia) from the countries that need to be protected such as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The TMD line runs between territorial disputes (the Korean peninsula, China/Taiwan) as well as separating great powers (for example, China and Japan). It is also a line that runs right through any attempts to build a multilateral security framework in the region.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United States is not the only force behind arms sales and the perpetuation of the Cold War climate in Northeast Asia. European arms manufacturers, for instance, are pouring weapons into the region. Regional elites in Northeast Asia are also responsible for buying the weapons. (And in some cases, such as South Korea's earlier nuclear ambitions and current missile development plans, the U.S. government has served to restrain certain aspects of the regional arms race). Regional elites must also share responsibility for cutting favorable deals with the U.S. and other countries at the expense of true regional multilateralism.

In short, there are many structural impediments to creating a multilateral security system in Northeast Asia. The U.S. is not yet willing to draw down its military presence. Territorial issues are longstanding and divisive. The ambiguous status of North Korea (and also of Taiwan) poses considerable diplomatic challenges. Bilateralism is the chief mode of negotiating agreements and resolving disputes. The regional arms race and the new TMD raise tensions and decrease the possibilities of good faith negotiations.

The European experience

In October 2000, Seoul will host the third Asia-Europe Meeting (ASEM). In honor of ASEM 3, I want to examine the question of multilateral security alternatives through a European lens. In 1975, European countries, along with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created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 that continues today as a multilateral forum for security issues. What positive and negative lessons can peace activists in Northeast Asia learn from this European experience?

First, it is important to not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regions. Three key differences are the impact of prior integration, the tragedy of the Korean War, and the differing roles of West Germany and Japan. In terms of the first factor, both Western and Eastern Europe, prior to the creation of the CSCE in 1975, were for their time reasonably well-integrated economic communities.

In addition, both halves of Europe engaged in substantial political coordination within their own spheres. Although several future members of the CSCE did not belong to either security alliance (NATO/Warsaw Pact) or economic bloc (the European Community/Comecon), this experience of regional coordination made such a large multi-party negotiating framework more feasible.

In contrast to the lack of war in Western Europe during the Cold War, Northeast Asia witnessed the Korean War from 1950 to 1953 (with numerous incidents taking place before and after these years). This civil war at the heart of Northeast Asia is still not resolved and still remains a significant barrier in both inter-Korean relations and regional relations more generally.

The third major difference between Asia and Europe involves the roles played by Japan and West Germany, the principal economic powerhouses at the centers of their respective regions. As defeated powers in World War II, both Japan and West Germany adopted defensive security postures tied closely to U.S. alliances. Here, however, the resemblances end. From the late 1950s on, West Germany embarked on an ambitious *Ostpolitik* or Eastern policy that had three overlapping objectives: to foster ties with East Germany, to expand contacts with Eastern Europe more generally, and to encourage East-West détente with the Soviet Union. In addition, West Germany made extensive apologies and provided considerable compensation to the victims of its World War II crimes.

In contrast, Japan's apologies for its World War II crimes have not been deemed satisfactory by its victims (principally in both Korea and China) and it has provided relatively little in the way of compensation (largely through bilateral treaties with governments rather than through group claims). Moreover, Japan's policies toward the Soviet Union, China, and North Korea have been tentative and, where supportive of détente, have followed U.S. initiatives. Recently, instead of taking a leading role as regional conciliator, Japan has been less flexible than either the U.S. or South Korea in its policy toward North Korea.

Despite thes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experiences of Europe and Northeast Asia, the CSCE/OSCE example is still useful. After all, Europe, with Germany at its center, overcame its Cold War division. European countries have attempted with less success to establish a multilateral security system independent of NATO. Finally, Europe has largely failed to address the ethnic/territorial disputes that have proliferated in the wake of the triple collapse of the Berlin Wall, the Soviet Union, and Yugoslavia. Peace activists in Northeast Asia can learn a great deal from both the triumphs and tragedies of the OSCE.

Lets start with the CSCEs formation. The CSCE could not have been built without years of patient West German initiatives. First of all, West Germany compromised on territorial issues by recognizing Soviet jurisdiction over areas such as the Baltic republics (Lithuania, Latvia, Estonia) and by accepting the Oder-Neise line by which large chunks of German territory became part of Poland. Second, West Germany signed renunciation-of-force agreements with Eastern European countries in the mid-1960s, allaying fears of German re-militarization. Finally, West Germany made an increasing number of overtures to East Germany. From 1963 to 1989, for instance, West Germany sent the equivalent of 3.5 billion Deutschmark eastward to pay for family reunification and the transfer of political prisoners. Although *Ostpolitik* was the brainchild of the Social Democratic Party, it eventually was adopted as the foreign policy centerpiece of the Christian Democratic Party. In other words, *Ostpolitik* became a matter of deep consensus in Germany foreign policy. For a detailed assessment of inter-German cooperation, see Timothy Gatten Ash, *In Europes Name: Germany and the Divided Continent* (New York: Vintage, 1993) The CSCE, in short, was built on a solid foundation of West Germanys East-West initiatives. A divided country recognized that its division was also the regions division. West Germany came to understand that German unification depended on a resolution of Europes larger division, and that Germans would have to be patient.

The CSCE was not simply built on West Germanys *Ostpolitik*. It also came at the acme of an East-West détente that included the Mutual and Balanced Force Reduction (MBFR) talks, the Strategic Arms Limitation Treaty (SALT 1) and the Nixon-Brezhnev Summit in May 1972. Multilateralism, in this case, derived from improved bilateral relations, primarily US-Soviet and West German-Soviet. I've drawn some of the official history of the CSCE/OSCE from the OSCEs website at <http://www.osce.org>.

Moreover, the CSCE hinged on a grand compromise. Following Germanys lead, the West reaffirmed the inviolability of existing borders. In other words, West Germany would not claim part of Poland or Czechoslovakia nor would the West support the Baltic countries claims for independence from the Soviet Union. In exchange, the communist bloc declared on paper to support a set of human rights principles. It was because of this compromise and the foundation of *Ostpolitik* and U.S.-Soviet détente that the CSCE could boast such a diverse membership in terms of ideological affiliation and standard of living.

Several other features of the original CSCE bear noting. First of all, it was a process, not an institution. It had no formal offices, much less a standing army of peacekeepers. It operated by

consensus and its decisions were politically, but not legally, binding. It put forward a comprehensive notion of security, one that placed environmental concerns and human rights issues alongside more traditional concepts of military security. And it emphasized non-military means of solving disputes.

The CSCE led to some expected as well as unexpected successes. Under the CSCE framework, the East and West agreed to traditional confidence-building measures such as arms inspections and greater transparency. The CSCE also fostered non-military cooperation through increased trade, cultural exchanges, and technical cooperation. The chief unexpected consequence of the CSCE process were the Helsinki groups that formed to monitor human rights abuses in the CSCE countries. These group eventually contributed to the opposition movements that brought down the communist governments in Eastern Europe and the Soviet Union. What had begun as a rhetorical commitment to human rights became one of the most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growth of the human rights movement in the 1970s and 1980s. Helsinki Watch, named after the 1975 Helsinki Accords that launched the CSCE, spawned other regional watch organizations. This umbrella organization is now called Human Rights Watch.

Despite these strengths and successes, the CSCE failed in one very important respect. It did not replace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the trans-Atlantic alliance that was created in 1949 to keep the Americans in Europe, the Russians out, and the Germans down (according to a popular adage). When the Berlin Wall fell in 1989 and the Warsaw Pact subsequently disintegrated, the CSCE was the natural post-Cold War successor institution. After all, it was more inclusive than NATO, both in membership and scope. NATO, moreover, was defined as a collective security arrangement to deter the Soviet Union. Without an enemy, without a purpose, NATO should have disappeared along with the Warsaw Pact.

Two factors prevented the CSCE from replacing NATO. In 1990, as the CSCE became the OSCE (and therefore an *organization* rather than a *process*), the United States deliberately stood in the way of sufficient funding and enhanced responsibilities. The Bush administration did not want the OSCE to challenge the authority of NATO nor did it want a neutral and demilitarized Europe. NATO, from the US perspective was needed to contain the disintegrating Soviet Union and to launch out-of-area operations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The second factor preventing the OSCE from taking NATO's place was the crisis in Yugoslavia. Although the OSCE was conceptually the natural institution for preventing conflict in the Balkans, it

did not have the authority, the funds, the personnel or the political capacity to intervene in the early stages of this conflict. As a result, the OSCE was perceived to have failed in Yugoslavia. The U.S. held up NATO as the only institution that could handle a crisis of such proportions (although, NATO was in reality just as inexperienced in addressing such problems). No institution, it turned out, was capable of meeting this challenge, from NATO to the European Union to the United Nations.

As a result of these two factors, NATO moved quickly to take on the characteristics that made the OSCE a superior, multilateral organization. NATO began a process of expansion (first through the Partnership for Peace program, then in 1999 by extending NATO membership to Poland, Hungary, and the Czech Republic). Moreover, NATO began at least rhetorically to expand its definition of security to include non-military capacities including environmental clean-up and the prevention of human rights abuses. Finally, NATO began to expand the very scope of its authority, both geographically and institutionally. U.S. Secretary of State Madeleine Albright called for NATO to move beyond a narrow definition of mutual defense and take action without Security Council mandates in Europe and beyond. Madeleine Albright, speech to annual foreign ministers meeting at NATO headquarters, December 10, 1998.

I will now turn to the prospects for multilateral security in Northeast Asia from two perspectives intergovernmental (from above) and by civic groups (from below). I will apply some of the lessons of the CSCE/OSCE experience, both positive and negative, to the following discussion.

Multilateralism from above

Every year there are new proposals for multilateral security institutions for Northeast Asia. No Tae Woo, Gareth Evans, and Eduard Shevardnadze have all suggested Asian equivalents to the OSCE. Similar proposals, from Canada and Mongolia, would expand the number of members in a specifically Northeast Asian security dialogue. For a review of the history of these suggestions, see Lee In-bae, *The Retrospect and Prospects on Cooperative Security in East Asia*, *East Asian Review*, Autumn 1998. The only inter-governmental institution that addresses Northeast Asian security issues, if only peripherally, is the ASEAN Regional Forum (ARF). The ARF has had some successes. In 1995, China initially agreed to address the Spratly Island issue multilaterally. And the ARF promoted the Southeast Asia Nuclear Free Zone over U.S. objections. However, with the economic crisis in Asia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U.S. military presence in the region, the ARF has lost momentum. Walden Bello has written on this subject see his contribution to the 1998 Alternative Security conference in

Manila sponsored by Focus on the Global South; also the recent Far East Economic Review (get citation) Moreover, the ARF is limited in its ability to address specifically Northeast Asian security issues because North Korea is not yet a member (despite the interest of ASEAN members for it to join). North Korea applied for membership in 1996, but did not apply again in 1998. "ASEAN Asks DPRK to Join ARF," *Yomiuri Shimbun*, June 5, 1998. Currently, then, either an organization or a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Asia remains entirely on paper.

As I discussed in the last section, the CSCE was built on a foundation of inter-German rapprochement and U.S.-Soviet détente. Can a similar initiative in Northeast Asia be built on inter-Korean rapprochement and US-North Korean détente?

The chances for inter-Korean rapprochement seemed to revive with the election of Kim Dae Jung in South Korea at the end of 1997. Kim Dae Jung immediately recast Noh Tae Woos *Nordpolitik* of 1988, but with a different spin. Inter-Korean business has been encouraged (such as Hyundai's Kumgang Mountain tourism project). Large shipments of food and fertilizer have been sent north; the number of South Koreans visitors to the north has risen dramatically (even discounting the Kumgang tourists); many political prisoners in the south have been released and the Kim Dae Jung administration is considering a revis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both of these two domestic changes have been traditional North Korean demands).

If we compare these inter-Korean steps toward cooperation to inter-German exchanges pre-1989, it becomes clear that the two Koreas are still at the very beginning of what the Germans called *Verflechtung* or *Vernetzung* interlacing or networking. Ash, op. cit., p. 258. Of greater concern are the North Korean criticisms of Kim Dae Jung's policie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not without some warrant, perceives that the sunshine policy is patronizing, an older brother reaching out to help a young brother, the stronger extending charity to the weak, the more technologically advanced shining light upon the less developed. For a more general analysis of South Korean attitudes toward the North, see Roy Richard Grinker, *Korea and Its Futures* (New York: St. Martins, 1998). Even more troubling are Kim Dae Jung's recent statements comparing South Korea's engagement policy to the approach the United States took to the Soviet Union, which the North Koreans might readily interpret as an indication that the sunshine policy is really a covert policy of destabilization. S. Korea's Kim Defends Policy Toward North, *Washington Post*, June 24, 1999.

U.S.-North Korean détente also rests on a shaky foundation. There is a strong faction in the Pentagon and in the U.S. Congress that opposes engagement with North Korea. This faction has

seized on a succession of threats in their attempt to scuttle the 1994 Agreed Framework: North Korea's rocket launch in August 1998, the suspected underground nuclear facility at Kumchangri (that a U.S. inspection team recently determined to be non-nuclear), and most recently the possible long-range missile test. Although William Perry has proposed steps toward closer U.S.-North Korean relations including partial lifting of sanctions and moves toward diplomatic recognition the political atmosphere in the U.S. remains highly tentative.

If there is one lesson that governments in Northeast Asia (and the United States) should learn from the CSCE/OSCE experience, it is patience. Détente is not easy, particularly between countries that have been at war with one another (the two Germanys, after all, never fought a civil war). Kim Dae Jung has frequently counseled patience. But political forces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ten for domestic reasons entirely unconnected to relations with North Korea, have denounced engagement policies as appeasement and advocated hard-line military policies instead. Efforts to build multilateral security structures will be slow and at times exasperating. But governments must commit to what Brian Job calls incremental regionalism. Brian Job, *Northeast Asia: Is There Hope for Cooperation?* Paper presented at 13th Asia Pacific Round Table, Kuala Lumpur, May 30-June 2, 1999, pp. 10-12.

Second, while efforts toward multilateralism continue, bilateral relations will remain important, as the above discussion should indicate. It is therefore not a question of bilateralism *versus* multilateralism, but what *kind* of bilateral relations will create a better environment for a multilateral security structure. The new U.S.-Japan Security Guidelines and U.S.-Japanese research on TMD are examples of *exclusive* bilateralism designed to isolate and contain regional threats (such as North Korea and China). A new, peaceful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meanwhile, would be an example of *inclusive* bilateralism, which can serve as a foundation for multilateralism in the same way that the inter-German relationship cemented the CSCE process.

Third, as Michael Finnegan suggests, the first multilateral structure for Northeast Asia should take its inspiration from the CSCE rather than the OSCE it should be informal and flexible at the beginning. Moreover, Mongolia and Canada should be invited to participate since these small powers can play important balancing roles just as the neutral European countries did in the formation of the CSCE. Michael Finnegan, *Constructing Cooperation: Toward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ian Perspective* (Vol. 23, No. 1, 1999).

Fourth, if a multilateral structure expects to make headway in addressing the significant territorial

issues in Northeast Asia, the countries involved will probably have to find their version of the grand compromise that enabled the CSCE to get off the ground. This compromise will have to address the outstanding issues of sovereignty (diplomatic recognition of North Korea) and territorial integrity (the various border disputes). It will be incumbent o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s the two strongest powers in the region, to make the compromises necessary for all parties to sit at the same table. The Japanese government, in particular, should look very carefully at the foreign policy successes of West Germany, from 1960 to 1989, to understand how conciliatory policies can lay the foundation for regional security and prosperity.

Finally, economic integration will necessarily play a role in shaping multilateralism in Northeast Asia. It is beyond the scope of this paper to speculate on how the current confrontation of systems (Anglo-American *laissez-faire* versus the Asian model of greater state intervention) will spill over into the security realm. Economic forces are without question very powerful. However, it would be naïve to believe that increased trade, by itself, will soften the edges of conflict in the region and draw countries closer together. Another version of this fallacy holds that if all of Northeast Asia joins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hen territorial disputes will wither away. While expectations of gains from economic cooperation certainly made the CSCE a more attractive option, the current division of Europe into the Western haves and the Eastern have-nots makes the OSCE a less effective organization. There are winners and losers in the world of trade, and these divisions can exacerbate territorial disputes.

It would be a mistake, of course, for peace activists to wait for the governments of Northeast Asia to decide to work together. Multilateralism can proceed from below even if efforts are stalled at the level of governments.

Multilateralism from below

Although the CSCE was formed in an era before the growth of NGOs and Track II diplomacy, there were still pressures from below from the grassroots in favor of political, non-military means of overcoming Cold War tensions. Peace activists and liberal elites campaigned against nuclear weapons in the 1950s, against above-ground testing in the early 1960s, and for arms control measures in the 1970s. Peace activists and liberal elites supported inter-German cooperation, U.S.-Soviet détente, and human rights movements throughout Europe and the Soviet Union.

At the level of elites in Northeast Asia, Track II processes (meetings of scholars, policy analysts, and the occasional official) have increased in the 1990s. Paul Evans and Shirley Yue, *Dialogue Monitor*. To receive their e-mail update on Track II events in the region, send an e-mail to Shirley Yue at syue@yorku.ca During the 1993-4 nuclear crisis, Track II initiatives (by Selig Harrison, Tony Namkung, and the Nautilus Institute) helped to defuse tens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and led eventually to the 1994 Agreed Framework. For a history of this Track II diplomacy, see Leon Sigal, *Disarming Stranger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The role of liberal elites in Track II diplomacy is well-delineated. What role can peace activists play in helping to encourage multilateralism from below? Here are three tentative suggestions.

Specific proposals

Peace activists can rally around specific proposals, such as a nuclear-free zone for Northeast Asia. A similar nuclear-free corridor for Central Europe proved to be an important rallying point during the 1980s and continues to be relevant today. In Northeast Asia, such a zone addresses many of the key security fears of a secret North Korean program, an even more secret South Korean or Japanese program, a crumbling Russian nuclear capacity, and the neither-confirm-nor-deny policy of U.S. ships and submarines. With so much attention focused on North Korea, it is useful to pay attention to John Endicott's concerns about Japan: Central to the success of such a concept is the commitment of Japan, especially, to open its plutonium-reprocessing facilities and nuclear storage areas to the multinational inspectors. No one factor is more destabilizing to the states of East Asia than the 8 tons of plutonium held by a dynamic and vibrant Japan. John Endicott, Great-Power Nuclear Forces Deployment and a Limited Nuclear-Free Zone in Northeast Asia in Young Whan Kihl and Peter Hayes, eds.,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The Nuclear Issue and the Korean Peninsula* (Armonk, New York: M.E. Sharpe, 1997), p. 382.

Another specific proposal might be to revive the idea of a neutral Korea, which was proposed by U.S. ambassador to Japan Mike Mansfield in 1960. Bruce Cumings, *Koreas Place in the Sun* (New York: Norton, 1997), p. 490. Mansfield had Austria in mind when he made the proposal. In a recent conversation, a Korean parliamentarian told me that Finland might serve as an appropriate model for Korea (with China standing in for the Soviet Union). A neutral Korea might serve as the kernel of the grand compromise discussed above.

Since the arms race in the region is tremendously destabilizing, peace activists might also consider

focusing on specific weapons sales and specific weapons systems. Such a campaign could draw inspiration from the landmines campaign, though it would necessarily have to be adapted to the specific weapon system.

Coordinated protests

The anti-nuclear movement in the 1980s benefited enormously from coordinated protests, primarily across the Atlantic, but also internationally. The more that peace activists, particularly in Japan and South Korea, cooperate on *specific* protests and projects, the more likely that the media and the governments will pay attention. It is useful to consider how to make the protests more popular by emphasizing prominent issues such as the high price of U.S. bases or arms purchases, the element of corruption (a hot topic in South Korea at the moment), or challenges to sovereignty.

Tolerance and peace-building at grassroots

As mentioned above, the OSCE was incapable of preventing the spread of civil conflicts within the Soviet Union and Yugoslavia in the 1990s. It was also largely ineffective in dealing with the growth of ethnic violence elsewhere against immigrants in Germany or against Roma (Gypsies) throughout Eastern Europe. The end of the Cold War has meant, at least in the medium-term, an upsurge in violence in Europe.

Peace activists in Northeast Asia should pay close attention to these European tragedies. We have to think about peace between people and not just between states. Therefore, it is critically important for peace activists in the region to continue person-to-person exchanges, to break down stereotypes and foster understanding among the various peoples of the region.

Part of this process is tolerance. I do not mean tolerance in the sense of tolerating injustice. I mean tolerance as a recognition of difference, an acceptance of difference, and perhaps most importantly, an active appreciation of difference. This kind of tolerance is a building block of peace. Without this kind of tolerance-building in Northeast Asia, the region may experience the same fate as Europe. Without the breaking down of barriers between people, the Cold War may end in Asia, but peace will not take its place. ■

평화운동의 발전과 미래

Martin Broek
/ ENAAT

몇 달전에 세계 전역에서 모인 수천 명의 평화 운동가들이 헤이그 평화회의에서 만났다. 나는 그때 유럽과 아시아 운동가들의 일일 공동 워크샵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여러분과 평화운동의 발전과 미래에 대해 토의하고 있는 이 자리는 내년 아시아 유럽회의(ASEM)에서 공동 활동을 모색할 수 있는 협력 관계의 두 번째 만남이다. 나의 평화운동에 관한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80년대 중반부터 참여한 해운 서양의 평화운동 발전, 좀더 구체적으로는 네덜란드의 경험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좀더 포괄적으로 개괄하려고 한다.

지금의 시기는 나와 같은 평화운동가에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여름, 우리는 나토의 유고슬라비아 폭격을 목격했다. 그러나 평화운동 진영의 그에 대한 반대는 거의 없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분쟁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군사적 해결방식이 유럽과 미국 정부에 의해서 아무런 의심없이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80년대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을 일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냉전의 종식과 함께 서구 평화운동의 안보논쟁은 상당한 변화를 맞이했다. 서유럽의 80년대 평화운동은 대체로 공포에 의지하여 사람들을 움직였다. 두 블록간의 불안정한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평화운동의 주요 동인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소된 후에는 이러한 운동이 많은 지지자를 잃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냉전의 종식이 가까워 오던 시기에 상당한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국제연합은 국제 무대에 좀더 빈번히 등장하게 되었으며 적극적으로 평화협상과 평화 유지 활동들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한편 동유럽의 시민사회가 변화하는 사회에서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발전은 낙관적인 전망에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었다. 냉전시기의 방어 예산이 삭감된 후에, 그렇게 절약된 예산은 '평화기금'으로 명명되어, 그것으로 많은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천안문 광장에서의 학생 시위도 또한 이런 낙관주의의 기운에 강한 영향을 받았다.

그때까지 평화운동에 참여하는 각각의 단체들은 공동의 출발점, 즉 핵무기에 대한 반대라는 출발점으로부터 일을 해나갔다. 일부는 그 논점을 무기에 한정시키지 말고 전반적인 군사주의로 확장시키고자 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특정 종류의 핵무기로만 제한시키길 원했다. 그러나 출발점은 공통적이었던 것이다.(그 당시에 네덜란드와 벨기에, 영국에서는 반핵 풀뿌리 운동이 얼마간 회생하고 있었다.)

냉전후에 전략은 갈라졌다. 많은 분쟁들은 더 이상 더 큰 이데올로기 투쟁의 일부가 아니었다. 불행히도, 냉전동안 얼어붙어 있었던 다른 분쟁들이 끓어 올라, 길고 참혹한 전쟁을 유지해 왔다. 특히 이런 전쟁들은 개발기구나 인권기구들에 의해 새로운 평화활동의 계획을 세우게 했는데, 이것이 평화운동의 주류가 되었다. 그들은 종종 중재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분쟁지역에서 기초수준의 활동을 벌였으며,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문제를 이슈로 삼고, 재난구호의 수준을 높였으며, 이에 대한 군사분야의 가능한 역할을 논의했으며, 소규모 군비와 지뢰를 줄이는데 성공적인 로비를 벌였다.

그동안, '이전의' 평화운동은 '우리는 냉전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대중적 여론에 직면했다.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일부 국가들에서는 공산주의의 경험보다 훨씬 나쁜 '천민 자본주의'의 손에 떨어진 전 공산권 국가들에서 재난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대중들의 생각은 평화론자들의 주장은 틀렸으며, 좀더 국방예산을 증가시킬 것을 주장하는 강성론자들이 옳았다는 것이었다.

분쟁에 대한 군사적 해결은 인기있는 화제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라크와 소말리아, 보스니아 그리고 최근의 코소보에 이르는 지역의 군사개입을 목도했다. 현재 서구의 '우리는 세계평화를 위해 싸우는 현인들이다' 라는 인식때문에, 모든 문제해결에 군사적 방식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군사적 해결은 결코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거나 가장 차혜로운 수단이 아니다. 그들이 우리의 '해결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라크와 소말리아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알 것이다.

군사개입은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할 때에만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럴때 그것은 국제연합의 평화현장에서 평화유지라고 칭하는 활동과 궤를 같이 하게 된다. 평화를 강제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데는 바람직하지 않는 수단이 될 것이다. 수많은 의구심과 회의에도 불구하고, 나토라는 자칭 세계기구가 아니라 국제연합이 이러한 평화유지 활동에서 선두를 이끌어야 한다. 평화운동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가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즉, 국가들 간의 또는 국가내의 긴장상황이 어떻게 인간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될 수 있는 가를 고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평화운동은 또한 국가간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군사적 수단은 아주 단기적이며,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희생을 요구한다.

나는 몇가지 이유 때문에 군비 매매와 방위산업에 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의 군수산업은 계속해서 전세계에 그들의 상품을 선전하고 있다. 서방세계는 대규모 해군정과 전투기, 헬리콥터, 중장비들을 포함한 군비를 좀더 기동성을 갖춘 개입군을 만들기 위해 구입하고 있다. 이것은 군사적 해결의 신화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또 평화 유지야 말로 서구 국가들이 이렇게 비용이 드는 구입을 정당화하는 가장 중요한 구실이다. 그러므로 이런 신화에 대항한 무장해제는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다.

다른 한편, 분쟁지역이나 잠재적 분쟁지역을 살펴볼 때, 군비를 수출하는 것은 작은 돈을 아끼고 큰 돈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정책이다. 국가내 더 많은 군비가 존재할수록, 분쟁이 폭력적인 수단으로 해결될 여지는 더 많아진다. 이것은 수사학적인 어구가 아니라 국제적 평화 연구에 기초해서 확립된 사실이다.

그리고 여기 한국은 서구의 무기수출의 가장 중요한 시장중 한 곳이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한반도의 남북 문제를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오히려 더 많은 무기와 군사장비를 구입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의 가장 중요한 고객 리스트의 5위를 기록하

고 있는데도- 미국과 유럽이 더많은 군비를 판매하고자 함은 당연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남한 국방부의 군비획득기관에 담당이 바뀜으로 인해 향후 몇 년간 한국 무기 수입수요중 유럽의 몫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KDX-파괴기와 미사일, AWAC, 정찰기와 더 진보된 기술을 획득하려는 남한의 계획은 주변국들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김창수(민족회의 정책실장)는 헤이그에서 언급했었다. 이런 군비는 미국에서 구입되었지만, 최근 영국과 네덜란드의 해양 기술이 판매된 것을 볼 때 유럽에서의 판매 또한 중요할 것이다.

나는 여기서 우리가 공통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무기 판매와 무기 수출은 동전의 양면이다. 서방에 있는 우리는 남한으로의 무기 판매에 반대해야 하고, 남한의 활동가들은 그 구매에 반대해야 한다. 이러한 군비획득 계획은 이 지역의 증가되고 있는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해답이 아니다. > 우리는 지역적 차원에서 외교적 해결방법을 겨냥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동아시아의 새로운 긴장을 낳고 있는 전역미사일방위체제(Theatre Missile Defence: TMD)에 대해서도 반대해야 한다. 미 국무장관 윌리엄 코헨은 탄도미사일 방어와 연관시켜 "누구도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하고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책임의식을 의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매를린 울브라이트는 중국은 TMD에 관해 염려할 것이 아니라 대신 북한으로 하여금 미사일 개발과 실험을 중지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TMD에 대한 중국의 염려는 여전하다. 그러나 평화와 안정은 외부의 강제적 개입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으며, 더 많은 군비를 쏟아붓는 것으로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탄도 미사일 개발에는 반대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방에 의한 새로운 군비의 도입과 구매를 옹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적대국의 군비 제조를 비난하는 것은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것처럼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권력 정치에 의해 휘둘리는 것으로 느껴질 뿐이다.

<군비 거래는 단지 군사와 관련된 문제만 관계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 "남한이 필요에 의해 국방에 소요하고 있는 엄청난 예산을 생각해 볼 때, 무료 의료보험이라든가, 실업 수당, 퇴직 수당에 쓸 수 있는 경비는 거의 남지 않는다."(이것은 한국에 관한 론리 플래닛 여행 가이드에 나온 말이다) 그러나 군사관련 저널들은 남한의 무장정도로 볼 때, 북한은 군사적 위협 수준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기 구매는 권력의 투사를 위한 것이지,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정부가 영해를 방어하면서 국민들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실패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종류의 안보인지 질문해야만 한다.>

나는 우리가 좀더 인간안보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을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군사적 해결로부터 떨어져야 하며, 이것을 위해 우리는 미국이 아시아에서 행하고 있는 위협적 역할을 지적해야 한다. 우리는 ASEAN이 선포한 핵무기 금지구역을 환영하고 우리 나라와 지역에도 같은 목표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유고슬라비아의 전쟁을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몇몇 유럽 국가들의 노력에 한편으로 지지를 표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시아 유럽회의 과정에서 아시아와 유럽 당사국들에 대해 비판의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희생으로 삼아 금세기를 지배해 왔던 군사적 파워게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

Developments and future of the Peace movement

Martin Broek
/ ENAAT

Developments and future of the Peace movement

A couple of months ago thousands of peace activists from all over the world met in The Hague in The Netherlands during the Hague Appeal for Peace. I had the privilege to participate in a day-long common workshop of European and Asian activists. The fact that I am here today to discuss with you the development and future of the peace movement is a second step in what I hope will be a working relation that might result in common activities during the ASEM meeting next year.

When I speak about the peace movement this is based on experiences I had myself since mid-eighties and thus strongly influenced by Western developments and even more on Dutch experiences. But roughly I can sketch some world-wide outlines.

It ain't easy times for a peace activist like me. This spring we saw the bombing of Yugoslavia by NATO and there was hardly any protest from the Western Peace movement. The military solution, which in my opinion is never bringing any 'solution' to a conflict, was accepted almost unquestioned by both government and most of the opposition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This would probably have been unthinkable in the eighties. What has happened?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the security debate considerably changed for the peace movement in the West. The peace movement of the eighties of Western Europe had been mobilising people mainly on fear.

Fear for a collapse of the unstable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two blocks that could have resulted in nuclear war. So it was no surprise this movement lost many supporters after the Warsaw Pact disappeared. To our relief this nightmare scenario vaporised.

In the years towards the end of the Cold War considerably changes occurred. The United Nations became more present on the global stage and was actively involved in peace negotiations and also in peace keeping operations. While civil society in Eastern Europe showed to be important in changing society. Developments were giving ground for an optimistic feeling. After the Cold War defence budgets were cut and the money thus saved was called 'peace dividend' with which we thought beautiful things could be done. The student movement at the Tiananmiansquare was also clearly influenced by this spirit of optimism.

Up to that time the different organisations the peace movement had worked out of a common starting point; opposition against nuclear arms. Some wanted to broaden the discussion to armament and militarism in general, others wanted to limit it to only specific kinds of nuclear arms. But the starting point was common group. (At the moment there is some revival of the anti-nuclear grass roots movement in the Netherlands, Belgium and Britain.)

After the Cold War strategies diverged. Many conflicts were not part any more of a bigger ideological struggle which gave new possibilities to solve them. Unfortunately other conflicts which had been 'frozen' during the Cold War boiled up and led to long and sad wars. Especially these wars set the programs for many new peace activities by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organisations which became dominant part of the peace movement. They often work on basic level

in conflict areas where they create bodies for mediation, got the sexual related violence against women on the agenda, improve disaster relieve and discuss possible roles of the military in this, and lobby - successfully! - for a reduction of small arms and landmines.

In the mean time the 'old' peace movement was confronted by a general feeling in the public opinion that we 'won the Cold War'. Notwithstanding the disastrous situation in many former communist countries which fell into the hands of 'robber capitalism' which is probably in some respects and for some countries much worse than a lot of communist experiences. The general idea was that the 'peaceniks' had been wrong and the hard-liners in favour of ever more rising defence budgets had been right.

Military solutions to conflicts became a popular thing to do. So we witnessed intervention in Iraq, in Somalia, in Bosnia, and recently in Kosovo. From the general western feeling at present that 'we are the good guys knowing what's best for the world' every problem gets a military answer. which is, in my opinion, rarely the most effective and clever way to try to solve a problem. Ask the people from Iraq or Somalia what they think of our 'solutions'.

Armed intervention can be a method to solve conflicts, but only when all parties in a conflict agree, it will be a method of keeping peace on track, thus what is called peace keeping in the Agenda of Peace by the UN. Peace enforcing showed to be a very bad method to bring genuine peace. With all possible doubts the UN should take the lead in this peace keeping operations, and not the self declared world community of NATO.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peace movement stimulates the discussion on how problems should be addressed. How tensions between countries or within countries can be solved in a humane and long-lasting way. But the peace movement should also address security issues between states. The military way is extremely short-term and has extremely high costs for the peoples involved.

I concentrate my work on arms trade and defence production, because of several reasons. The arms industries of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are promoting their products increasingly all over the world. The West is buying arms, included major naval vessels, fighter aircraft and helicopters and heavy armour to develop mobile and flexible intervention armies. For this it is to keep the myth of military solutions alive. Because peace missions are the single most important argument for defending those costly acquisitions by Western countries. Opposing this myth, thus is very important for disarmament.

On the other hand when looking at conflicts or potential conflict area's it is also a penny wise and pound foolish policy to export arms. The more arms there are in a country, the bigger the change that disputes are solved in a violent way. This is not rhetoric but an established fact based on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And here, in Korea, is one of the very important markets for western arms. Notwithstanding economic hardship, notwithstanding all those people that want to solve the North-South problem in Korea in a diplomatic way, the Korean government is buying ever more weapons and military equipment - raking fifth on the list of global most important customers already.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are extremely willing to sell.

Analysts expect the European share of the Korean arms market will grow in the next years because of the change in acquisition organisation at the Ministry of Defence in Seoul. "South Korea's next plan to retain KDX-destroyers, submarines, AWACS, reconnaissance planes and more advanced technology is to prepare against the military threat of surrounding countries," as Kim, Chang Soo of PSPD mentioned in the Haque. These arms will come from the US, but will be also importantly of European origin as we are starting to see with recent sales of British and Dutch naval

technology.

Here I think we have common ground. Arms trade and arms exports are both part of the same coin. We in the West should oppose arms sales to South Korea and peoples in South Korea can oppose the acquisitions. These armament programmes are not an answer to the rising military tensions in the region. We would aim for diplomatic solutions in a regional context.

We also have to raise the issue of Theatre Missile Defence (TMD) creating new tensions in the region. US Secretary of Defense William Cohen said in connection to ballistic missile defence, "No one should doubt our commitment to defend our interests and to work together for peace and stability in Asia." Concerns of China were however easily swept of the table by Madeleine Albright, stating China should not worry about TMD, but should instead pressure North Korea to stop missile production and testing. Stability however is not created by forceful outside interference. It is also not created by pumping even more arms into the region. It is without doubt that ballistic missile proliferation must be opposed, but introducing new weapons and defending acquisitions of arms by allies on the one hand and condemning arms production of adversaries on the other hand does also not sound driven by peace and stability, but instead driven by power politics.

Arms deals not only concern military related issues, they also have impact on peoples security. 'Given the large amounts that South Korea must by necessity spend on defence, there is little cash left over to shovel into free medical care, unemployment benefits and retirement schemes,' it are the words picked up from the Lonely Planet travel guide to Korea. Military periodicals however say South Korea is armed on such a level that the North can be hardly seen as a military threat. Ongoing arms acquisitions are meant for power projection and not targeted on the North. One should ask what kind of defence it is when you are defending Sea Lines of Communication, but are unable to defend basic needs of the people.

I hope we can work together for a more peoples oriented defence. Get away from military solutions and for this we should point out the devastating role of the US in the region. We must be happy with the declaration of a nuclear free zone by ASEAN and struggle for the same in our countries and regions, and we can be a little happy with the aims by some European countries to look for a diplomatic solution of the war on Yugoslavia. But we must also stay critical towards the

Asian and European parties in the ASEM process, which hopefully will turn away from military power politics, which have dominated this century on the expense of to many people.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

평화로 한마음! 통일로 한결음!

한반도 냉전구조의 현황과 청산방안의 모색

강 정 구

/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1. 머리말

우리 민족의 분단과 전쟁이라는 비극은 전적으로 미·소냉전에서 비롯되었다. 이 분단과 전쟁의 과정에서 외세에 의해 강제되고 또 내적으로 심화된 한반도 냉전구조는 분단 반세기를 지난 오늘의 시점에서, 또 세계적 수준에서 탈냉전을 맞았다는 이 시점에서 약화되지 않고 여전히 속냉전의 형태로 민족의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다. 곧, 세계적 수준의 탈냉전으로 통일시대라는 민족사적 전환기를 맞았음에도 한반도 속냉전은 99년 6월의 서해교전이라는 남북정규군의 무력충돌 등으로 남북간에 나타나고 있다. 또 북·미간에는 영변핵의혹으로 발생한 94년 6월의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나 금창리핵의혹으로 인한 한반도3-4월 위기설, 주권에 속하는 북한의 인공위성발사에 군사적 대응 운운하는 전쟁위협 등으로 나타났다. 북·일간에는 98년 8월 북한 인공위성의 발사에 안보히스테리 증세를 보이고 북한의 동해안 노동기지를 일본공군이 F4EJ 개량전투기 4대로 500파운드 폭탄 열 여섯 발로 공격하는 극비연습을 진행시키고, 동해안 섬을 가상으로 상륙훈련을 실시하는 등 일본의 침략주의적 형태(『한겨레』 99.7.14) 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특히 서해교전에서 북쪽이 30명의 인명피해를 입었는데도 남쪽은 한 마디 유감 표명조차 없이 승리가를 구가하였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비책을 논의하기보다는 신북풍설이라는 허무맹랑한 음모론까지 들먹이면서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등 최소한의 이성마저 상실한 행위를 자행하였다. 인지합리성(cognitive rationality)을 상실한 조건 반사적인 이들의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김대중정부는 대북 '포괄적 접근전략'이라는 방식으로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형성된 외적인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려는 정책을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냉전구조의 해체를 통하여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시도하고, 또 이것을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대미 예측외교 일색이었던 기존의 정책과 차별성을 보일 뿐 아니라 통일이라는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근본적인 과정에 대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될 만 하다. 또한 남북과 남한 내에 포진하고 있는 냉전구조의 청산을 위하여 대북 포용정책과 화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외적인 냉전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내적인 냉전구조 해체정책인 포용정책이 구현되기 어려운 조건 속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냉전청산의 진전 없이는 김대중정부의 포용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서해교전과 북한의 제2인공위성의 발사준비를 계기로 대북 포용정책은 탄력을 상실하고 표류하고 있다.

이에 이 글은 한반도 냉전청산이라는 당면과제를 맞아 냉전구조라는 거시적 차원 뿐 아니라 개인 의식에 고착화된 냉전의식인 미시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만연된 냉전을 그 역사적 기원과 특성 및 성격을 한반도에 초점을 맞추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한반도 냉전을 청산하기 위한 방향을 김대중정부의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포괄적 접근정책과 페리조정안에 초점을 맞추어 시론적으로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한반도 냉전구조의 청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미국과 일본에 의한 대 북한 군사적 봉쇄, 적대관계, 및 전쟁위협을 해소이다. 이와 더불어 북한에 대한 낙인론, 이데올로기를 빙자한 내부통제, 개인수준의 반공 및 냉전의식 등에 대한 포괄적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은 이러한 포괄적인 냉전청산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보다 가장 핵심적인 군사적 적대관계의 해소에 국한하여 냉전청산 방향을 논하겠다. 또 시민사회의 NGO 수준에서 이를 청산하기 위한 역할에 주목한다.

2. 냉전의 성격과 분석 틀

흔히들 냉전(cold war)을 열전(hot war)과 구분하여 실질적인 전투행위(actual warfare)를 수반하지 않은 대결과 적대관계의 심화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열전이 없는 냉전은 2차 대전이후 냉전의 양극인 미국과 소련사이나 양 진영의 중심국사이의 관계에 해당되는 것이지 제3세계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중심부 위주의 냉전의 개념정의의 거절하고 필자는 냉전을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냉전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주의체제를 대표하는 소련과 자본주의체제를 대표하는 미국이라는 양극을 중심으로 양 진영간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이념적 적대와 군사적 봉쇄를 근간으로 형성된 정치, 외교, 경제, 군사 등 전 영역의 전면적 적대와 대결의 진지전적 관계(positional warfare)를 의미한다. 이 정의는 실제 양극과 양 진영 사이에 전면적인 전쟁행위에 돌입하지 않은 수준의 적대 및 대결관계 형성을 의미하나 제3세계 수준에서는 열전의 형태로 표출된 대결구도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중심부사이의 열전 없는 진지전적 적대관계는 실질적으로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라는 이념에 기반한 투쟁과 적대였으나 제3세계에서의 열전은 이데올로기를 외피로 한 전쟁이 대부분이었다.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앙골라전쟁에서와 같이 냉전에 처한 제3세계에서의 열전은 주로 양 진영의 직·간접적 개입에 의하여 내전이 발생하고, 이 내전에 양 진영이 개입하여 대리전 형식의 열전이 전개되는 유형을 띠었다.

이 냉전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데올로기적 적대에만 초점을 맞추어 1917년 러시아혁명과 시베리아 원정에서부터 출발하였다는 이데올로기 환원론에서부터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주로 전통주의 역사학과 수정주의 역사학과사이의 논쟁이 중심을 이룬다. 우람(Ulam)이나 가디스(Gaddis) 등을 중심으로

한 전통주의 역사학(orthodox historian) 2차대전 이후 소련의 적화야욕과 세계지배에 대한 공세정책에 미국이 피치 못해 방어적으로 대응하게 됨에 따라 냉전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소련의 지정학적 팽창정책에서 냉전이 기인한다고 본다. 이와는 달리 Williams, Aperovitz, Kolko, Horowitz 등으로 대변되는 수정주의 역사학(revisionist historian)은 전후 소련은 세계지배나 적화야욕의 의도도 없었거나와 능력도 없었으나, 미국 중심의 세계자본주의 체제를 소련이 확보한 동구라파의 영역에까지 확산시키려는 미국의 적극적인 공세정책에 소련이 방어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냉전이 비롯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최근의 소련문서의 공개를 계기로 후자의 수정주의 견해가 보다 설득력 있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Leffler, 1992, Parrish, 1998?).

일반적으로 냉전의 본격화는 1947년 3월 12일 분쟁 중인 그리스와 터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공언한 미국의 트루만독트린(Truman Doctrine)선포 이후로 보고 있다. 곧, "현시점에서 모든 나라의 국민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생활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로 양자택일의 강요에서부터라고 본다. 그러나 미국 측이 냉전을 공식화한 트루만독트린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아직까지 전면적인 냉전대결구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미국과의 타협을 모색하였다. 1947년 7월 전후 유럽재건이라는 마셜플랜(Marshall Plan)을 구체화하기 위한 파리회담에 소련이 89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참여하여 전후 복구에 미국의 지원을 기대한 시점까지 냉전은 아직 루비콘 강을 건너지 않았다. 그러나 소련은 이 회의 도중 미국이 마셜플랜을 통하여 서유럽을 재건하고 다시 소련의 영향권(sphere of influence) 하에 있는 동유럽을 탈환(roll-back)한다는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제대로 확인하면서 동유럽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차단시켰다. 곧, 미국의 냉전 선언을 소련 역시 받아들여지게 됨에 따라 이 시점부터 냉전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반세기간의 세계질서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때까지 동유럽에 널리 자리잡은 연립정권을 공산당정권으로 대체시키면서 동유럽을 철저히 소련에 예속시켰다. 서유럽 역시 마셜플랜에 의해 경제적으로 미국의 예속 하에 들어가고 이어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등에 의해 정치·군사적으로 미국에 예속되었다. 물론 지구촌 동편에서도 일본에 대한 역정책이(reverse policy) 취해지면서 미국의 예속 하에 일본이 처하게 되었다. 제3세계의 대부분도 미국 편의 자본주의 권과 소련편의 사회주의 권으로 양분되어 철저히 양극의 지배와 예속 하에 들어갔다(Leffler, 1992). 레프르는 이를 잘 요약해주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종결 후 초기에 스탈린은 소련점령지역을 넘어서 영향력 확대를 가끔씩 시도했다. 그러나 그의 가장 도전적이고 탐욕적인 외교행위는 1947년 후반과 1948년 사이에 일어났다. 물론 이들 도전은 서구의 주도에 대한 대응으로 발생한 것이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코민폼(공산주의정보국)의 창설, 체코슬로바키아에서의 쿠데타, 동유럽에서의 숙청, 베를린봉쇄 등은 바로 트루만선언, 마셜플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서독에의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서방의 재건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것이었다(Leffler, 1992: 515).

이렇게 공고화된 냉전의 특성은 핵무기를 중심으로 한 무기경쟁, 진영간의 이데올로기 선전전, 곧,

미국은 제국주의이고 소련은 나치독일이라는 낙인론, 양 극 사이의 성공적 협상 부재, 제3세계에서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앙골라내전 등과 같이 대리전 형식의 열전전개, 두 진영간의 내부통제력 강화, 곧 미국은 McCarthyism과 Reagan Doctrine(신개입주의)으로 소련은 반체제인사 탄압과 사회주의 제한주권론이라는 Breznev Doctrine으로, 진영간의 대결 지속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Halliday, 1983).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냉전의 완전한 청산은 그 특징인 핵무기를 포함한 무기경쟁과 군사적 봉쇄, 이데올로기전, 상대를 악마로 모는 낙인론, 성공적 협상 부재, 제3세계에서 대리전 형식의 열전전개, 이데올로기적 내부통제력 강화, 진영간의 대결 지속 등이 해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약 반세기 이상 지속된 동·서냉전의 세계질서는 전지구적으로 냉전구도를 공고화시켜 세계체제, 지역체제, 국가, 제도, 집단, 개인 수준에 이르기까지 냉전을 구조화시켰다. 1955년 반동회의를 계기로 비동맹세력이 형성되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인 미·소냉전구도를 약화시키지 못하였다. 특히 열전을 겪은 한반도는 외세에 의해 냉전을 지속적으로 강요당하였고, 이 냉전구도에 편승하여 권력을 장악한 세력에 의하여 확대 재생산되어 냉전의 극단화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반도의 냉전구도 분석은 세계체제, 동북아시아체제, 남한과 북한관계, 남한과 북한 국가 내, 남북주민 개인의식 수준에 이르기까지 포괄되어야 한다.

아울러 탈냉전이후의 한반도냉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규정 한 냉전의 성격 또는 기능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커밍스가 지적한 것처럼 1947년 여름이후의 세계질서는 미국의 대공산권봉쇄, 대동맹국 봉쇄, 전세계적 헤게모니의 세 가지 성격을 가진 냉전질서의 지배였다(커밍스, 1996: 51). 이러한 성격규정은 공산권과 동맹국을 같은 수준의 봉쇄대상으로 서술하고 있어 그 차별성을 간과하고 있기는 하지만 초기 냉전체제의 구축시점에서는 소련이 미국 영향력을 차단시키기 위하여 동유럽을 봉쇄하였듯이 미국 또한 일본이나 서유럽을 소련영향에서 차단시키기 위하여 철저히 봉쇄한 점을 잘 포착하고 있다. 그러나 1969년 화해기(detente) 이후의 냉전 분석은 소련을 핵심대상으로 한 대 공산권 봉쇄, 북한이나 남한과 같은 제3세계에 대한 지배,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핵심부 경쟁국가에 대한 초기의 봉쇄와 이후의 견제라는 성격을 가진 것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¹⁾

1947년 여름이후 공고화된 냉전체제는 할리데이의 냉전 시기구분과 같이 1차 냉전기(the First Cold War, 1946-1953), 오락가락 적대기(The Oscillatory Antagonism, 1953-1969), 화해기(Detente, 1969-1979), 2차 냉전기(The Second Cold War, 1979-1989, 탈 냉전기(Post-Cold War, 1989이후)로 역사적 변천을 거듭하면서 1989년 세계적 수준의 탈냉전을 맞았다(Halliday, 1983). 이 변천 과정에서 냉전은 초기의 철저한 이데올로기적 기준에 의한 경직된 봉쇄정책에서 약한 봉쇄정책이나 동맹국 견제 정책으로 그 특성이 변화하기도 하였다. 특히 베트남전쟁을 계기로 한 1969년의 화해기 이후의 냉전

1) 커밍스는 냉전이 대공산권봉쇄, 대동맹국 봉쇄, 전세계적 헤게모니의 세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규정은 공산권과 동맹국을 같은 수준의 봉쇄대상으로 삼은 초기의 경우는 적합하지만 베트남전쟁 이후부터는 대 동맹국 봉쇄정책을 지속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래서 이 글은 그 차별성을 보이기 위하여 냉전후기, 곧 할리데이의 이야기하는 화해기(1969-1979)이후에는 대공산권봉쇄, 대동맹국견제, 제3세계지배라는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본다.

특성은 아래와 같은 성격변화를 가지게 되었다.

첫째, 중소분쟁과 미·중간의 관계정상화 및 캄보디아의 폴 포트정권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서 나타나듯이 반공주의에서 반소주의로 이데올로기적 대결이 이완되었다. 둘째, 미국의 군사 및 경제력 압도성에서 소련의 상대적 역량강화로 미국의 대소 협상이 불가피 하게 되었다. 셋째, 진영내의 내부 탄압이 약화되어 사회주의 권에서 반체제인사의 처형이나 탄압이 약화되고 미국의 메카시즘적 마녀사냥이 약화되었다. 넷째, 적대나 대립의 중심이 유럽중심과(독일전후처리와 폴란드문제) 극동중심에서(한국전쟁, 베트남전쟁)에서 다른 제3세계분쟁 지역으로 전화되었다(아프카니스탄, 이란, 아프리카의 앙골라, 에티오피아 등). 다섯째, 초기 냉전의 경우 만약 양국사이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주로 유럽과 소련이 파괴되고 미국이나 소련일부는 생존이 가능하였으나 2차냉전의 경우 전쟁이 발발하면 지구를 20번 이상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공멸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특징을 가졌다(Halliday, 1983).

이러한 미소양국의 냉전질서는 양 대립물간의 상호교호과정을 그치면서 양국이 모두 변증법적 지양을 통한 변혁으로 극복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질서가 생성되는 창조의 형식으로 해체된 것이 아니었다. 냉전의 한 축이었던 소련이 급진적이고 급속한 개혁을 시도하면서 일방적인 해체를 기하였고, 잇달아 사회주의체제가 몰락함으로써 탈냉전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 결과 한 축은 기존의 냉전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한 축만이 탈냉전으로 나아감으로써 새로운 세계질서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기울어지는 불균형적인 형태를 띠었다. 그러므로 냉전의 군사적 봉쇄의 산물이었던 지역적 집단안보체제인 바르샤바조약 등 소련 축의 군사동맹은 소멸되었는데도 북대서양조약기구, 한미상호방위조약, 미일안보조약 등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군사동맹체제는 전혀 해체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다. 바로 이들이 미국의 단일초패권주의 및 일방주의(unilateralism) 세계질서가 탈냉전기의 지배질서로 등장하게 된 배경이다.

최근 지구촌 서쪽에서는, 코소보사태와 나토의 동진정책에서 보듯이 미국과 러시아사이에는 '작은냉전'이나 문명권 대결형식의 '신냉전'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또 지구촌 동쪽에서는 중국과 미국사이에 미일신가이드라인, 일본주변의 유사에 대만과 한국을 포함시키고,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를 구축하고, 1998년에는 대만에 세계 최대의 무기구입을(46억 6000만 달러) 허용하고, 필리핀에는 방문군협정(Visiting Forces Agreement)을 맺어 미군의 배치를 합법화하여 중국에 대한 군사적 봉쇄구도가 정착되었다. 중화문명과 서구문명의 대결이라는 '작은냉전'구도의 조짐이 나타난 셈이다.²⁾

탈냉전의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 하는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냉전의 해체는 소련에서 고르바초프가 공산당총서기가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약 5년간 지속된

2) 기존의 동서냉전은 이데올로기, 군사, 경제, 외교, 정치 등 전면적인 봉쇄와 단절 또는 적대로 특징화된다면 여기서의 작은냉전은 이데올로기, 외교, 경제, 정치 등에서는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군사적 봉쇄를 핵심으로 하여 적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현상을 의미한다. 최근 중국과 미국사이의 적대관계는(작은냉전) 주로 군사적 봉쇄로 인한 군사수준의 적대이지 외교나 경제수준의 적대관계는 아니다. 역시 러시아와 미국과의 관계도 동일한 군사적 차원의 적대이다. 동북아의 작은냉전도 한·미·일의 삼각군사동맹체제에 의한 중·러·북의 느슨한 연대에 대한 군사적 봉쇄가 핵심이고 다른 외교나 경제분야에서는 상호의존성을 높이고 있는 이중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소련의 일방적인 냉전해체 정책의 결과로 냉전종식이 선언된 시점은 1989년 12월초이다. "지중해에 냉전을 묻었다"고 선언한 고르바초프와 부시사이의 정상회담이 열린 말타협정에서였다. 이어서 고르바초프는 12월 5일자 프라바다지에 "세계는 냉전이라는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는 소련 측의 냉전종식 선언이지 미국 측의 탈냉전 수용은 아니었다. 냉전의 공식적 선언을 미국이 먼저 하였듯이 냉전해체에서도 미국은 역시 능장을 부려 소련에 비해 냉전 친화적인 속성을 여지없이 드러내었다. 미국이 소련의 이러한 움직임에 마침내 그 선의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냉전해체를 인정한 시점은 바로 89년 12월 크리스마스저녁이었다. 이 때 미국은 소련에게 차우셰스쿠 정권을 붕괴시킨 루마니아혁명군을 돕기 위하여 평화유지군으로 소련군과 바르샤바군을 파병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야말로 1945년 이후 처음 있는 대전환이었다. 그러나 세계만방에 불개입주의(non-intervention principle)라는 냉전종식을 공약한 대로 소련은 루마니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거절하였다. 미국이 소련과 냉전을 허물어버린 바로 이 시점에서조차 여전히 제3세계에게는 미국은 철저한 신개입주의의 레이거니즘을 휘두르는 냉전주의자였다. 바로 파나마의 노리에가를 축출하기 위하여 미국은 전격적으로 무력침공을 가하였다(Blanton, 1998?).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미국의 냉전정책은 소련과 공산권에게는 철저한 봉쇄를, 동맹국에게는 봉쇄와 견제를, 제3세계에게는 지배를 추구하였다. 비록 소련(러시아)에게는 탈봉쇄정책이 취해졌지만(이것도 신나토전략이나 코소보공습에서 보듯이 의문시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동맹국에 대한 견제와 제3세계에 대한 지배정책은 유지되고 있고, 특히 지역에 따라서는 제3세계에 대한 지배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한반도가 탈냉전 속 속냉전의 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구도를 띠게 되었다.

3. 한반도 냉전구조의 성격과 현황

우리는 앞 절에서 냉전이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 대립물이 상호 변증법적 지양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세계질서를 태동시키지 못하고 단지 소련의 일방적인 주도과 양보로, 또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체제의 몰락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미국 진영의 냉전구도는 그대로 존속이 된 채 지구촌 곳곳에서 냉전의 유산인 미국중심의 군사동맹체제 등이 잔존하고 있다. 또 탈냉전의 시점에서 미국은 전체 예산의 15%를 곧, 2600억 달러의 군사비를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세계 2위의 군사비를 투입한다는 러시아나 일본의 군사비보다 무려 3-4배 높은 군사비를 투입하면서 별들의 전쟁이라는 Star Wars의 후속판인 TMD나 NMD를 추진하면서 유일 초 패권주의를 획책하고 있다. 이의 연장으로 제3세계에 대한 지배가 강화되고, 이 지배의 시도가 바로 북한강제이기와 한반도냉전구조의 강화 형태로 귀결되고 있다.

한반도냉전구조는 앞서서도 지적하였듯이 세계, 동북아, 남북, 국내, 및 개인적 수준에서 여러 요소

들이 결합하여 냉전이라는 유형을 띠고 지속적인 규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구조들을 각각의 수준에서 검토해 보겠다.

3-1) 세계적 수준의 작은냉전

먼저 세계적 수준에서는 이미 언급하였듯이 공산 측의 바르샤바군사동맹체제가 해체되었는데도 서방 측의 나토군사동맹체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고, 인권을 빌미로 한 유고의 공습, 나토권역 밖의 일에도 미국과 나토가 개입하겠다는 침략적인 신나토전략, 중부유럽을 나토에 끌어들이고 다시 동부유럽으로 나토를 확장시켜 러시아를 압박 및 봉쇄하려는 동진정책 등의 형태로 탈냉전 속의 '작은냉전'이 지속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유럽통합군을 모색하는 유로를 나토동맹체제에 묶어두어 지속적으로 견제를 하겠다는 전략이 관철되고 있다.

지구촌 동편에서는 미일신가이드라인으로 일본을 하위동맹자로 하여, 또 필리핀을 방문군협정으로 (Visiting Forces Agreement) 끌어들이며 중국을 압박하는 군사적 봉쇄를 피하고, 동시에 일본을 미국 주도의 안보구도 속에 묶어두려 하고 있다. 이로써 군사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게는 봉쇄를, 동맹국인 EU나 일본에 대해서는 견제를, 남미나 아프리카, 또 아시아 등 제3세계에게는 지배를 추진 및 관철하고 있다. 이로써 세계는 미국의 일방주의(unilateralism)에 의해 탈냉전의 시기에도 작은냉전을 지속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로 미국주도의 자본주의체제에 철저히 순응시키고 있지만 러시아나 중국에 대한 경제적 봉쇄는 취하고 있지 않고 유대관계와 상호의존성의 증가를 통한 통제를 지속하고 있다.

우리는 유고공습을 미국주도의 초패권적 세계질서 구축과 작은냉전의 시각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미 미국은 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토를 중부유럽까지 확대하여 러시아 중심의 슬라브문명권을 압박하는 동진정책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구상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국가는 남슬라브의 세르비아계 유고이다. 게다가 유로화의 출현으로 달러화의 독주에 제동이 걸리고 나토무용론과 함께 유럽통합군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유럽을 붙들어 놓기 위한 명분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탈냉전을 계기로 제3세계에 개입할 명분이 사라져버리자 미국은 개입의 명분을 테러방지, 인권보호 등의 이현령비현령식 차원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중층적 요인들로 인해 미국은 쿠르드족에 대한 잔악행위를 일삼는 터키나 92년의 보스니아에서와는 달리 전쟁이라는 최강수를 구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미국정부의 작은냉전적 행위와 더불어 대부분의 미국인과 유럽인 역시 냉전의식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권'이란 그들만의 보편가치로 유고의 주권이라는 또 하나의 보편가치를 유엔의 승인도 없이 불법적으로 공습하여 수 천명을 살해했을 때 문명국을 자부하는 그들은 박수를 보냈다. "화염 속에서 엄마의 이름을 불렀던 유고의 어린이와 주민들의 죽음은 선진국 사람에겐 서부 활극 배우의 '가짜 죽음' 정도로 가벼운 것이었다." 곧 냉전의식은 청산되지 않고 여전히 존속하면서 작은냉전을 뒷받침하고 있다.

3-2) 동북아수준의 작은냉전

동북아수준에서의 냉전구도는 군사적으로 한·미·일삼각군사동맹체제에 의해 소련과 중국 및 북한을 봉쇄하는 구도였다. 이후 중·소분쟁과 중·미관계개선으로 소련과 북한에 대한 봉쇄구도로 전환되었다. 탈냉전을 맞이한 현재 미국과 일본은 1996년 신안보공약선언, 1999년 '세계적 동반자' 관계선언, 신가이드라인 입법화를 완결시켰고, 미국과 필리핀은 미군방문군협정(Visiting Forces Agreement)을 체결하였으며, 대만까지도 묶어두는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를 구축하고 있다. 또 한국과 일본은 군사협력관계를 증진시켜 99년 8월 사상 처음으로 합동해군군사훈련을 실시하여 삼각군사동맹을 강화하는 反 탈냉전구도로 나아가고 있다.

대 중국봉쇄정책의 일환으로 강화된 대미동맹에 힘입어 일본은 방위정책 기본개념을 영토가 공격받을 때 대응하는 '전수(專守)방위전략'에서 주변지역 유사시에도 대응하는 '전방위전략'으로 바꾸고 신가이드라인 관련 3개 법안인 주변사태법안, 자위대법 개정안, 미일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을 통과시켰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유엔을 무시한 미국과 NATO의 불법적 유고공습을 빌미로 일본은 미일방위협력지침 관련법안 수정과 관련한 주변사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공격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는 사태" 라고 명기하고, 주변사태법안의 적용범위를 기존의 △무력분쟁이 발생한 경우 △무력분쟁이 임박한 경우 △정치체제의 혼란으로 난민이 일본에 대량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변국이 유엔안보리 결의로 평화에 대한 위협 또는 경제제재의 대상이 되는 경우 등 4가지에다 내란과 질서교란을 포함하는 곧, △ "이웃 나라에서 내란, 내전 등의 사태가 발생해 그것이 순수 국내문제에 머물지 않고 국제적으로 확대될 경우" △ "일본 주변지역에서 무력분쟁 그 자체는 일단 멈췄지만 여전히 질서회복 등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 등 2가지를 추가하여 중국을 포함한 일본주변에 대한 미일군사패권화를 노골화했다.

98년 8월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했을 당시 일본은 안보히스테리증세와 정신도착 증세를 보였다. 경수로지원금을 유보하고, 식량지원과 국교정상화 협상을 중단하고, 유엔안보리에 제기하는 등 온갖 허풍을 떨더니 드디어는 방위청장관이 참의원 외교안보위원회에서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대체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까지 감행할 수 있다는 선전포고와 같은 말을 서슴치 않았다. 이 시점에서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기지를 공격하는 극비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99년 3월의 '괴선박'에 대하여 패전 후 처음으로 무력공격을 가하여 무력사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또 "조센징 가에로(조선인은 너희나라로 돌아가라)" "폭파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면서 조총련계를 위협하고 북한돕기 콘서트도 협박하여 취소시켰다. 마치 '제2의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재발하려는 분위기로 냉전의식과 융합된 조선족에 대한 인종주의가 극치를 이루었다. 이어 99년 3월 24일 소위 '괴선박'사건이 일어났을 때 발로된 일본인의 대북한 냉전의식과 조선인에 대한 인종주의를 토미야마 이찌로(富山 一郎)는 잘 분석하고 있다.

물보라를 일으키며 달리는 두 척의 소형선과 이를 추적하며 포격을 가하는 군함의 사진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자가 무방비의 소형선에 일방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구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 영상은 그것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의 눈길에는 압도적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공격하는 것으로 비치지 않았다. 그들은 공격받고 있는 것이 자기들이며 자위대의 포격은 그 공격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방위행동이라는 식으로 이해했다. 하지만 방영된 영상의 어디에 이 작은 배로부터의 공격을 볼 수 있었던가?... 인종주의 속에서 성립된 시선은 상대의 몸짓과 사고를 정의하고 역사도 정의한다. “저놈들을 잘 안다. 저 놈들은 그런 놈들이다”라는 상투어는 이러한 事物化의 가장 성공한 예를 나타낸다 (토미야마 이찌로(富山 一郎), 1999: 132-133).

이러한 냉전의식 마비환자에게는 북한에 관한 한 사실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인지적 합리성이 마비되고, 확인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명약관화’한 사실화가 되어버려 제 멋대로 재단을 해 버리기 마련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미국인과 남한인에게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만연해 있는 현상이다. 금창리핵위기 등은 있지도 않는 핵무기개발에 대한 의혹을 일으켜 긴장을 고조시키고 전쟁도 불사한다는 미국 국회의원들이나 지식인의 우월주의, 람보주의, 냉전주의가 결합한 결과이다. 이로써 동북아수준은 작은냉전이 지속되고 있으며,³⁾ 이는 한반도에 냉전의 구도를 넘어 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화약고의 역할을 하고 있다.

3-3) 한반도수준의 속냉전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냉전의 완전한 청산은 핵무기를 포함한 무기경쟁과 군사적 봉쇄, 이데올로기전, 상대를 악마로 모는 낙인론, 성공적 협상 부재, 제3세계에서 대리전 형식의 열전전개, 이데올로기적 내부통제력 강화, 진영간의 대결 지속 등의 특징이 해소되거나 현격히 완화되어 이념적 적대와 군사적 봉쇄를 근간으로 형성된 정치, 외교, 경제, 군사 등 전 영역의 전면적 적대와 대결의 관계가 종결된 상황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반도에는 북한을 표적으로 하여 미국, 일본, 한국이 전개하는 군사적 봉쇄, 이데올로기적 배척, 북한 악마만들기식의 낙인론, 열전으로 비화될 전쟁위기 조성, 이데올로기적 내부통제, 남북한간의 대결 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 결과 북한을 한·미·일삼각군사동맹체제에 의해 군사적으로 봉쇄하고, 한·미·일공조체제의 강화와 교차승인을 거절하여 외교적으로 고립화시키고, 적성국과 테로국으로 지정하여 경제적으로 봉쇄하는 등 적대와 대결관계를 해소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에는 세계적 수준이나 동북아수준의 탈냉전이나 작은냉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속냉전이 지속되고 있고, 이 제3세계의 속냉전은 언제든지 열전으로 비화될 수 있어 전쟁위기 상황에 처

3) 이의 전형적인 보기가 전 미국국무차관을 지낸 아미타지 같은 사람이다: “북한 미사일 수출이 계속되고, 미국이 이를 확인하면, 미국은 이 선적을 수색 및 압수할(intercept)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미국은 유엔 헌장의 자위권의 권리를 행사할 것임을 북한에 분명히 하여야 한다”(Amitage, 1999). 그의 논리대로라면 세계의 대부분 국가는 최대 무기 수출국인 미국의 무기수출 배에 대한 수색과 압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고 이는 기본적으로 무기수출은 없어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반도의 속냉전구도를 위의 대표적인 냉전의 특징을 기준으로 고찰해 보겠다. 곧, 군사적 봉쇄와 군비경쟁, 상대를 악마로 모는 낙인론, 이데올로기적(또는 이데올로기를 빌미로 한) 내부통제, 열전전개 가능성인 전쟁위기를 기준으로 남한과 미국 및 일본을 중심으로 냉전현황 또는 냉전성을 살펴보겠다. 북한은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북한은 주체적으로 냉전적 적대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한미일에 의한 일방적인 냉전적대에 피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희생양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기준인 군사적 측면에서 한반도의 냉전은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일삼각군사동맹은 더욱 강화되어 단기적으로는 북한을 겨냥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중국을 봉쇄하고 있다. 일본과 남한의 군비증강은 북한을 가상의 적으로 삼아 지속되고 있으며, 미·일신가이드라인은 북한을 노골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북·미평화협정체결은 미국의 지속적인 기피로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고, 10·21조미협정에서 약속한 미국의 대북 핵선제공격포기나 관계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미국은 1998년 10월 9일 주한미군 작전부참모장인 레이먼드 아이어스 소장이 非보도를 전제로 밝힌 OPLAN(작전계획)5027-98을 수립해 “첫째는 남한에 의한 통일의 전주곡으로 북한정권을 남한의 점령정권으로 대체하겠다는 노골적인 목표”를 설정하였고, 둘째는 “방어진지로부터 탱크나 포대가 대규모로 이동하는 것과 같이, 북한이 공격을 준비중임을 보여주는 모호하지 않은 조짐들이 나타날 경우 ‘선제공격을 가할 가능성’을 강조”하였으며, 셋째, 심지어 “그들을 모두 죽여 군대라고 할 수 있는 걸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없애버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한겨레』, 1999.4.4).

실제로 94년 6월 영변핵위기때에는 전쟁일보 직전까지 갔고, 금창리핵의혹도 실제로 있지도 않은 북한 핵무기개발을 문제삼아 전쟁불사를 천명하였다. 또 최근에는 북한의 제2인공위성발사에 대하여 미국이 항공포함 등 전투력을 한반도에 증강시켜 황야의 무법자식 무력시위를 벌리고 있고, 일본은 마치 전쟁이라도 치를 듯한 광적인 모습을 보이고, 한국은 일본과의 합동군사훈련이라는 마치 나당연 합군이 고구려와 백제를 침략하는 것을 연상시키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호전성과 가공할 군사력으로 북한봉쇄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입장으로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미사일이나 핵무기 개발일 수 있다. 핵무기 개발은 10·21조미협정에 위배되지만 미사일개발은 합리적 전략의 선택이다. 빈사상태에 놓여 있는 북한경제력으로서 더 이상 재래식 무기로서 자기들의 안보를 보장받지 못한다. 그러나 미사일개발은 최소한 전쟁 역지력의 효과를 한껏 가져 올 수 있다. 이 밖에도 외화벌이 상품도 되고, 김정일의 공적으로 삼아 정당성을 높일 수 있고, 외교카드도 심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북한 미사일개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 아니라 북한이 미사일 개발의 필요성을 가지지 않도록 평화체제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두 번째의 냉전기준인 상대를 악마로 모는 낙인론을 점검해 보겠다. 국내에서는 최근 서해교전을 계기로 언론의 북한 왕따화와 악마만들기가 극성을 부렸다. 냉전의 상대방 악마만들기 낙인론이 전적으로 발동하여 최소한의 이성적 판단마저 마비된 채 맹목성으로 치달았음을 확인시켜준 것이, 곧 속 냉전을 확인시킨 것이 서해교전이다.

첫째, 무엇보다 이번 서해안교전은 언론의 무책임한 냄비식 여론조장에 의해 강제당했다는 점이다. 6월 7일 북한의 북방한계선 월선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냉정한 대응을 구사하던 정부가 '영해침범', '국토수호'라는 극단적인 선동구호를 외치며 별떼같이 날뛰는 언론들과 일부 정치권의 정략적인 정치쟁점화에 힘없이 무너지면서 무력충돌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사흘만에 여론에 굴복한 정부가 6월 10일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여 "북한이 우리를 자극하고는 있지만 적대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다"는 기존의 합리적인 대처방안에서 "NLL을 지상의 군사분계선과 같이 확고하게 지킬 것" 이라고 강경대응으로 방향선회 하게 되었다.

둘째, 북한 경비정 등의 북방한계선 진입을 '영해에 대한 침범'으로 보고 국토수호자원에서 강경 대응하여야 한다는 언론몰이는 최소한 국제법상의 규정도 존중할 것을 거부하는 반이성적인 힘의 논리였다. 북방한계선을 선언한 당사자인 미국조차 이를 남한의 영해로 인정하지 않고 공해나 분쟁해양으로 인정하였다. 그런데도 굳이 영해로 주장하는 남한 언론과 이를 반합리적인 줄 알면서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김대중정부의 취약성은 남한의 현주소를 잘 말해 준다.

외교통상부장관이 "만일 북한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한다면, (남한은) 이 문제를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기자회견 내용을 야당 국회의원은 이를 문제삼아 사과를 강제하였고, 월선이라고 표현한 정부당국자의 합리적 발표에 대하여 국정원장에게 잘못된 것이라며 사과를 강요하는 막무가내식 람보를 강제하는 반이성적인 작태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언론도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해 온 NLL 문제를 공론화해 북한과 협상을 벌일 경우 일정 부분 양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칙과 순리를 벗어난 단적인 예"라면서 홍순영장관을 비난하여 야당 국회의원과 초록은 동색인 모습을 보였다. 또 일부 지식인은 미국의 국무부와 언론들이 북한의 '도발'을 강조하기보다 남북한의 '상호교전'과 '상호자제'를 요구하는 이성적인 논평에 불멘소리로 여야가 안보위협에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면 북한과 미국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남한만의 나라사랑인 극단적인 반민족적 애국심을 고취하기까지 하였다.

셋째, 이번 교전사태에 대하여 유엔사와 남쪽은 "북한이 선제공격을 해와 자위권 보호 차원에서 공격한 것"이라며 남한의 함포사격 등에 대하여 정당화 논리를 폈다. 또 국회 국방위 대북결의안은 "북한측의 북방한계선 침범행위와 무력사용을 규탄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6월 16일자 '한겨레'는 "군 당국은 북한이 그 동안 영해침범 후 해군의 밀어내기식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자세에서 돌변, 15일 선제공격을 감행한"이라고 언급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선제공격을 가한 것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임을 군당국의 성명조차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남쪽의 자위권 차원의 정당화는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면 그것은 북한이 선제사격을 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는 논리를 펴야 한다. 실제로 선제공격은 남한이 하고서도 북한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다. 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 15일 북한 경비정은 선제공격을 가하면 우리 쪽에서 뒤로 물러날 것으로 판단했겠지만 우리 쪽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응사해 상황을 종료시켰다"고 말했다. 이는 선제공격으로 북한의 선제사격을 유도하고는 이에 대하여 과잉대응하여 응징하겠다는 면밀한 사전 시나

리오를 암시한다. 여기에는 군대의 전쟁논리만 작동하지 인지적 합리성, 민족논리, 정치논리 등은 끼어들 틈이 없어진다. 이렇게 정치논리가 무너지고 전쟁논리가 지배하면 전쟁이라는 막바지로 치닫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었다.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유엔사 교전수칙이 이 구역에서는 적이 먼저 무력도발을 하지 않는 한 우리 쪽에서 선제 무력사용은 자제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11일과 15일 우리가 선제공격을 감행하여 이 교전수칙을 어겼다는 점이다. 배를 밀어붙여 충돌식 공격을 감행하는 것 역시 분명히 무력공격이다. 아울러 북한의 선제사격은 기관포 수준이었는데도 남한이 즉각 함포사격으로 대응한 점은 과잉대응의 성격이 짙다. 과거 97년 6월에도 바로 서해안에서 교전상황이 벌어졌다. 그 때는 쌍방이 배의 후미를 공격하는 정도로 자제력을 가졌다. 이 번에도 서로 자제력을 가지고 기관포 정도의 사격으로 서로 대응하였다면 엄청난 인명피해와 일촉즉발의 위험을 막을 수 있었다. 교전수칙을 '위배'하고 선제공격을 가한 것과 함포사격이라는 과잉대응 여부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문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남과 북이 과잉반응을 서로 자제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의 '의도적 선제공격설'을 국방부가 근거도 없이 유포하고 이를 그대로 맹신하여 여론을 오도하는 언론의 무비판적 왜곡행위이다. 곧, 국방부는 6월 16일 유엔사-북한간 장성급회담에서 '오전 9시 15분 한국이 먼저 사격했다'는 북한측 이찬복 중장의 발언은 사전에 공격사실을 계획하고 회담장에 나왔으며 각본에 따라 이러한 남한의 공격설을 주장을 했을 것이라는 국방부의 일방적 추론이다. 그러나 6월 17일자 '한국일보'의 분석대로 북한측 대표단이 서해상에서 벌어진 교전 사실을 회담장에 도착하기 전 충분히 긴급보고 받았을 수도 있다. 조그만 개연성만 있어 보이면 곧 바로 음모론에 결부시키는 근원적인 불신과 이러한 음모론적 추론에 대한 확인이나 검증의 필요성마저 느끼지 않고 그대로 맹신하는 관성적인 냉전의식이 우리 언론, 정치인, 및 지식인들의 현주소이다.

다섯째, 지극히 원색적이고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강제하는 전쟁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치권과 언론의 고질적인 자폐증이 치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김대중정부의 초대 정책자문위원장이었던 최장집교수나 김영삼 정권아래 개혁과 민주화의 선두주자였던 한완상교수가 『조선일보』의 이념공세에 중도하차하는 유사한 전철을 이번에도 겪었다. 반개혁과 극우진영의 이념공세에 가장 좋은 소재는 바로 한국전쟁이거나 전쟁에 관련된 사항이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한국전쟁에 관한 한 비록 그것이 학문적이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분석이나 이해가 용납되지 않는다. 무조건 남침이고, 모든 잘못은 북쪽에 있고, 그 엄청난 비극적 참화는 남한이 입었고, 전적으로 그 책임은 김일성에게 있고, 이에 이로 대응해야 한다는 틀에 박힌 '정답'이 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모두 빨갱이 취급을 받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게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철저하게 정답만 외치거나 아니면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곧 금기의 영역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다.

이번에도 차영구국방부대변인의 전격적인 해임은 바로 이러한 금기의 영역을 재미있게 묘사한 불경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기자회견 뒤 지나가는 말투로 "부부도 싸운 뒤에 더 화목해지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군의 할 일은 대비태세를 완비하고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다. 현 상황을 툠다운시키는 것은 군의 임무가 아니니 오해없기를 바란다"는 말을 붙이며 브리핑을 마무리

했다. 이는 교전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포용정책의 기초를 살리면서 남북간에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는 유연하고 폭넓은 브리핑이었다. 그러나 확고부동한 정답이나 공식에서 조금이라도 이탈하면 용납하지 않는 냉전 전사적인 한나라당 국방위원들이 당일 오후 '교전상황을 어떻게 부부싸움으로 비교하느냐'면서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고 이 결과 전격적으로 대변인은 그 날 밤 해임되었다. 이러한 상황, 곧 '처부수자 김정일'만을 읊조려야만 하는 상황에서 내적 통일기반은 백년하청일 수밖에 없다.

여섯째, 30여명의 북한 젊은이들이 죽음을 당하였는데도 남쪽은 재발방지 대책이나 유감표명조차 없이 관련 병사들을 특진시키고, 승리에 찬사를 보내고, 강경대응의 지속을 역설하였다. 이는 "말만 다를 뿐이지 '필요하면 더 죽여라'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생체화되어 있는 냉전의식 때문에 북한과 관련된 일이 터지기만 하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낙인론에 매몰되어 이성이 마비되고 미래의 전망을 상실한 채 "쌀 주고 뽕만 따"식의 저돌적인 돌진만을 일삼아 왔다. 북한의 금창리 핵의혹에 대하여서도 지식인들은 검증은 기다릴 필요도 없이 북한은 저렇다고 사실적 단정을 쉽게 지어버린다. 이러한 냉전의식이 극복되지 않고는 냉전청산 또한 요원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기준인 이데올로기를 빌미로 한 내부통제의 수준에서는 아직도 국가보안법이나 보안관찰법이 상존해 있고, 준법서약서까지 가세하고 있다. 또 서해교전에 대한 남쪽과 미국 측의 음모론이라는 시각에서 의문을 제기한 글에 대하여 검찰 수사가 발표되는 등 여전히 내부통제는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다른 군사적 수준이나 음모론 수준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개선된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이 개선도 주로 지식인이나 상위계층에 국한되고 여전히 학생이나 노동자의 경우 별로 달라진 점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영남위사건이나 한양대학생사건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아직도 반공교육이나 반복교육, 반복선전전은 지하철이나 TV연속극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 속에 깊이 잠겨 있다(권혁범, 1998).

네 번째 기준인 열전전개 가능성, 곧 전쟁위기를 기준으로 한반도 냉전상태를 고찰하겠다. 가깝게는 99년 6월 15일의 서해교전이다. 이 경우 앞서도 밝혔지만 북한이 남한처럼 자제력과 통제력을 잃고 옹진반도나 서해지역의 지대함미사일을 남한 군함에 발사하였다더라면 남북간에는 우발적인 전면전이 필연적으로 벌어졌을 것이다. 이 경우 민족공멸을 초래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러한 일촉즉발의 위험을 우리는 우리 품에 안고 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더 큰 위험은 미국이 벌이는 전쟁위협이다. 비근한 예로 탈냉전의 시점에서 일어난 94년 6월 핵위기를 보겠다.

1993년 3월부터 시작된 영변핵위기는 94년 10.21조미협정이 체결되던 10월까지 무려 5번의 민족생존권 위기를 맞았고, 그 가운데 94년 6월 위기는 최악의 위기로서 당시 민족생존권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었다. 아찔한 순간은 6월 16일이었다. 한국에서는 렉 주한미사령관과 레이니대사는 미대사관 관저에서 몰래 만났다. "두 사람은 비상체제를 가동, 소개작전을 추진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레이니는 공식명령도 기다리지 않았다. 당시 한국에 와 있던 딸과 세 손자·손녀에게 사흘 뒤인 일요일까지 한국을 떠나라고 말한 것이다." 워싱턴시각으로 16일 아침 10시경 백악관

에선 대통령, 부통령, 국무·국방장관, 합참의장, CIA국장, 유엔대사, 안보보좌관 등 최고위 당국자는 모두 모여 회의를 열었다. "회의 서두에 클린턴은 유엔안보리의 대북한 제재 추진을 최종 승인했다. 클린턴의 최종승인이 떨어지자 [합참의장]은 한반도 주변지역의 미군증강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에게 추가병력을 제대로 배치하려면 한시적이나마 예비군을 소집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미 국민이 사태의 심각성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점진적 증강 안이 담긴 제1안에 대해 설명한 뒤 전투기와 또 다른 항모전단, 그리고 1만 명을 웃도는 추가병력 배치에 관한 제2안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미 북한은 미군의 추가배치가 있을 경우 이를 군사적 공격으로 간주하고 선제공격을 할 것을 밝힌 상황이었다.

바로 이 때, 이 긴박한 순간에 평양을 방문중인 카터전대통령에게서 백악관으로 전화가 온 것이다. 이로써 가까스로 민족과멸을 초래할 전쟁고비를 넘기게 되었다. 실로 모골이 송연한 순간이었다.(Oberdorfer, 1998: 300-303). 물론 미국은 5월 18일 국방장관, 합참의장, 주한미군사령관 게리 러, 현역 4성장군과 제독, 세계전역에 파견된 미장성 등을 대거 소집하여 특별군사회의를 거쳐 도상훈련이 아니라 '실전회의'를 통하여 만반의 준비를 거친 상태였다(Oberdorfer, 1998:291). 이 때 제3안은 전면전, 곧 OPLAN5027에 의한 북한섬멸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소한 40만 명 이상의 미군과병을 전제로 예비군 소집을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Oberdorfer, 1998:299). 전쟁 정보 국가정보 담당관 찰스 앨런은 미군의 무력 증강은 북조선의 전시 동원령을 유발시킴으로써 선제 공격의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대통령에 대한 전쟁 정보보고는 전쟁 개시가 임박했을 때에만 이루어지는 관례다.⁴⁾

남한정부 또한 전군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대통령이 "24시간 감시체제를 통해 한-미 양국은 북한의 움직임을 100% 장악하고 있다. ... 한-미 양국은 만일의 사태에도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무력을 갖추고 있다"(『한겨레신문』, 1994.6.4)면서 '여유'의 수준을 넘어서 '전쟁승리'를 자신하는 모습까지 보였다(『중앙일보』, 1994, 6.4). 6월 8일 김영삼정권은 출범이후 첫 국가안보회의를 열고 예비군 동원태세, 국지전 대비태세, 심지어 전면전까지 상정하였다.⁵⁾ 이에 대해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제재는 곧 전쟁이며 전쟁에서는 자비가 없다. ... 동족에 대한 제재 판을 벌여놓고도 자기만은 무사하리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맞대응하였다(『중앙일보』, 1994.6.6.). 또한 군 참모총장 최광을 중국에 급파하여 '혈맹관계'를 과시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Non-Proliferation Treaty) 탈퇴불사를 선언하였다.

4) Leon V. Sigal, *Disarming Strangers: Nuclear Diplomacy with North Korea*,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155쪽. 한호석, "핵위기와 금융 위기: 한(조선)반도 정세를 읽는 두 초점", 1998년 3월, 민주평화통일연구 인터넷사이트에서 재인용

5) 두 번째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김일성주석 서거가 알려진 직후인 7월 9일이었다. 이는 "김일성 사망—북한체제붕괴—김정일무력도발"이라는 시나리오에 기초한 정부의 비상계획(우발계획)에 따른 조치였다." 우발계획은 군사안보측면의 총무계획과 통일에 대비한 총무계획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러한 시나리오와 우발계획에 따라 대통령은 전국특별경계령, 공무원비상대기령, 외교대책반 가동 등의 조치를 취했다. "빛나간 시나리오, 맥빠진 '비상계획'", 『시사저널』 150호, 1994.8.11.

이렇듯 한반도는 동서냉전의 시점보다 오히려 더 전쟁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의하여야 한다. 동서냉전의 시점에서는 최소한 소련의 견제력 때문에 전쟁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지금 속냉전의 경우는 이러한 전쟁억지력이 상실되어 있어 미국이나 일본 또는 남한의 자의에 의한 전쟁가능성이 더 높아 졌다.

위에서 우리는 네 가지 기준에서 한반도는 아직도 냉전중이라는 속냉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속냉전은 고전적 냉전과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비록 대북 경제봉쇄는 하지만 인도적 식량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남한의 경우는 경제적 봉쇄를 완화하고 있으며, 제네바협정과 같이 상호 성공적인 협상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대북연착륙정책도 추진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미국이 궁극적으로 북한축이기에 매달리기 보다 대북한 개입 및 확장전략으로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의 비개발과 비확산 그리고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꾀하여 미국주도의 세계질서에 순치하도록 하자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⁶⁾ 물론 이것은 상황의 진전에 따라 무력공격이나 북한축이기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4. 한반도 냉전청산의 방향

앞 절에서 한반도는 현재 속냉전 상태에 놓여 있다고 규정하였다. 곧, 북한에 대하여 미국, 일본, 한국이 전개하는 군사적 봉쇄, 이데올로기적 배척, 북한 악마만들기식의 낙인론, 열전으로 비화될 전쟁 위기 조성, 이데올로기적 내부통제, 남북한간의 대결 등이 지속되고 있고, 이 결과 북한을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체제에 의해 군사적으로 봉쇄하고, 한·미·일공조체제의 강화와 교차승인을 거절하여 외교적으로 고립화시키고, 적성국과 테러국으로 지정하여 경제적으로 봉쇄하는 등 거의 전면적인 적대와 대결관계를 지속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 이 속냉전은 언제든지 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전쟁위기 상황을 내포하고 있어 한반도는 오히려 기존의 냉전상태보다 더 심한 전쟁위협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냉전구조를 해체 및 청산하는 것이 민족안보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위한 지극한 과제이고 동시에 통일을 위한 전제이다.

세계적 수준이나 동북아수준의 작은냉전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냉전구조의 청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미국과 일본에 의한 대 북한 군사적 봉쇄, 적대관계, 및 전쟁위협의 해소이다. 그러나 앞 절에서 확인하였듯이 북한에 대한 낙인론, 이데올로기를 빙자한 내부통제, 개인수준의 반공 및 냉전의식 등의 청산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포괄적인 냉전청산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보다 가장 핵심적인 군사적 적대관계의 해소에 국한하여 냉전청산의 방향을 논하겠다.

가장 핵심적인 군사적 수준의 냉전청산에 대한 근원적인 방안은 한미일삼각군사동맹체제를 해소하고 동북아지역협력안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동북아수준의 작은냉전 해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지난 할 뿐 아니라 장기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당면한 대안이라고 볼 수 없다. 그

6) Report of an Independent Task Force Sponsored by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1999.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A Second Look" NAPSNET, SPECIAL REPORT July 28, 1999

러므로 우선 단기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봉쇄정책을 지속하여 동북아에서 작은냉전을 견지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생존권을 확고히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은 자기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존할 수밖에 없는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을 자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페리보고서가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핵과 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의 생산금지로서 미국의 대북정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에 반대급부로서 제시하고 있는 보상은 고작 △북미, 북일수교 △한국정부 차원의 농업개발 지원 △일본의 대일청구권자금 및 경협자금 제공 △한·미·일 3자의 국제기구를 통한 경협자금 제공 및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⁷⁾ 이는 주로 외교, 경제, 정치분야에서 대북한 적대관계를 완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는 북한이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OPLAN5027의 폐기, 북미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의 지위변경과 군사력 감축, 남북평화선언이나 군비축소, 10·21조미협정에서 합의한 대북핵선제공격 포기 보증 등 북한 생존권에 결정적인 사안이 들어있지 않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이 진정으로 자신의 생존권을 보장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미국의 외교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미국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99년 7월 27자 2차보고서도("U.S. Policy toward North Korea: A Second Look") 포괄적 접근인 페리보고서에 대하여 북한이 주저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네 가지 제시하였다. 곧, 확대된 개입전략(expanded engagement), 비개입전략(Disengagement), 압력가중전략(increased pressure), 선택적 개입전략(selective engagement)이다. 이 가운데 '더 큰 보상'(bigger carrots)을 제공하는 '확대된 개입전략'의 대안은 미국, 일본, 한국의 정치적 기류를 감안한다면 지극히 수용하기 힘든 대안이라고 결론짓고 '선택적 개입전략'을 권고하였다. 이는 '북한은 악마이다. 악마에게 어떻게 더 큰 당근을 준단 말인가'라는 낙인론에 빠진 미국과 일본,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남한의 냉전의식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택적 개입전략' 또한 근본적으로 페리조정안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그 핵심내용은 <페리조정안 유효성의 지속적 유지> <잠정적인 적성국 경제제재 해제와 대포동2 발사시 해제 취소> <10·21북미협정 준수>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 지속> <4자회담 지속> <한미일 고위급 조정위 가동> <한미일 삼각군사협의, 신가이드라인 실행, TMD 공동진척 등을 통한 비 도발적 억지력의 단계적 상승에 의한 압박> <중국의 협조모색> 등이다. 이러한 대안으로는 북한과 미국의 줄다리기가 지속될 수밖에 없어 한반도의 긴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통령이 남북한과 미국 및 일본이 "북한에 대하여 성의를 가지고 대하면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실사구시적 입장에서 공정한 대북정책"이라고 자평하는 포괄적 대북정책의 5개과제 역시 북한생존권 보장에 대한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5개과제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통한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 <북·미, 북·일 수교> <대량살상무기 제거와 군비통제> <북한의 개방 및 시장경제 전환과 국제기구 참여> <남북간의 평화체제 전환>이다. 이 5개 과제가 구현될 경우 법적 통일(de jure unification)에 앞서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 상황」을 실현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통일부, 1999; 김대중대통령 CNN회견). 그러나 김대통령의 줄 것은 주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지는 낮은 수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북한 경제봉쇄를 풀지 않았고, 북한의 인공 위성 발사를 빌미로 항공모함 파견 등으로 북을 위협하고 있고, 일본은 독자적 정보위성 체계 구축 등 군비확장에 몰두하면서 경수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한국정부에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속냉전적인 미국과 일본의 행위를 두고 볼 때 미국은 외교협회의 보고서에서와 같이 과연 북한축이기를 배제하고 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더욱 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문제의 해결은 북한이 최우선적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군사적 적대관계의 해소를 경제·외교·정치적 적대관계 해소와 동시에 병행하거나, 아니면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를 먼저 추진하여 북한이 상응한 대응을 해 올 때 외교, 경제, 정치적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것일 테다. 북한의 1999년도 총 예산은 겨우 94억 달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통일부는 보고 있고, 식량난으로 굶어죽는 자가 무려 백만 수준을 능가하고, 97년 남한의 군사비가 170억 달러인데 북한의 총 국민생산액이 겨우 177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 고립무원과 생존에 허덕이는 북한에 안보위협 운운한다는 미국, 일본, 남한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⁷⁾ 미국의 대북한정책이 외면적으로는 북한축이기를 배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축이기를 정책을 추구하고 있거나 아니면 사실확인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저 놈들은 저렇다'는 불문가지(不問可知) 식의 낙인론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는 OPLAN5027이라는 북한섬멸작전계획을 폐기하고 1983년 이전의 작전계획이었던 휴전선을 원상회복하는 전략으로 바꾸는 것이다. 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작전계획으로 북한 생존권 불위협을 보여 주어야 한다.

둘째는 평화협정을 북미간에 조속히 진전시키는 것이다. 남한과 미국은 남북당사자 논리를 펴면서 남과 북이 평화체제 당사자가 되고 미국과 중국은 보증국으로 남는, 곧 '4-2'의 구도를 고수하고 있다. 북한 또한 정전협정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간에 협정을 체결하고 남한과는 남북합의서의 불가침선언으로 협정의 효력을 기할 수 있다면서 남한 배제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남한을 배제한 채 북미간의 평화협정 체결만을 고집하는 북한의 제안은 현실적으로도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통일기반 조성이라는 민족사적 과제와 유기적으로 결합되기도 힘들다. 또 미국을 배제한 채 남북당사자간의 평화체제만을 주장하는 남한이나 미국의 제안 또한 비논리적이고 반통일적이다. 한국전쟁에서 주도적 전쟁당사자로서의 미국의 역할, 정전협정 당사자, 4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무력 소지자인 주한미군, 한미합동군사훈련 실시, 한국군의 전시작전권과 통제권 장악, 전시지원협정에 따른 미국 본토의 신속배치군 파견 보장 등을 고려한다면 미국이 평화협정의 주체인 당사자가 되는 것

7) 북한군사력 수준의 약화로 전쟁도발 가능성이 희박함은 98년 10월 9일 주한미군 작전부참모장인 레이먼드 아이어스 소장이 非보도를 전제로 미국 공무원이 아시아 여러 나라 출신의 지도급 언론인 13명을 초청해 브리핑을 주선한 곳에서도 확인되었다. "북한이 백만 명이 넘는 군대를 갖고 있지만 그들은 구식무기로 무장되어 있고, 제대로 훈련조차 받고 있지 못하고 있"고 또한 "북한의 경제적 재난은 식량, 연료, 장비 등의 군수품 조달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미 북한은 베이징으로부터의 군사적 원조에 의존할 수도 없으며 자신의 문제만으로도 벅찬 모스크바로부터도 그러하다"(Halloran, 1998).

은 당연하고 필수적이다. 결코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엄연한 외국군의 존재인 주한미군의 문제 등이 다뤄지지 않고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도 없거나 민족사적으로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따라서 남한, 북한, 미국 이 3자가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 또 이미 주장한 바대로 미국과 중국이 보증국이 되는, 곧 미국이 협정당사자이면서 동시에 보증국이 되는 '3+2'형식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셋째는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엄연한 외국군의 존재인 주한미군의 지위문제, 곧 감군, 후방배치, 장기적 철군 등이 다뤄지는 것은 냉전해체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필연적이다. 그러나 미국과 김대중대통령은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통일이 된 뒤까지도 동북아지역의 안정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세력 균형자로서의 미국의 역할은 주일미군이 충분히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 굳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세계 최상과 최첨단으로 기계화와 정보화한 군대를 보유한 미국은 주일미군이 아니더라도 괌도의 미군과 항공모함 등으로도 이 동북아 균형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또 장기적으로는 남한이나 남북한이 이 균형자나 안정자로서의 역할을 추구하여야 한다.⁸⁾

민족자주의 상징성 만으로라도 이 땅에 외국군이 당연히 사라져야겠지만, 장기적인 또 통일지향적인 관점에서 미군철수는 필연적이다. 첫째, 동북아신냉전 도래 시 주한미군은 대 중국봉쇄의 역할을 하게 되어 중국과의 긴장관계를 초래하여 통일에 결정적 걸림돌로 작용한다. 둘째, 남북한 군비축소, 평화정착에 미군주둔의 영향력 확대는 걸림돌이 된다. 셋째, 미군산복합체 이해에 따라 한반도 긴장이 자의적으로 조성될 수 있다. 넷째, 자주적인 민족사의 역사행로를 원천 봉쇄할 수 있다. 다섯째, 군사무기를 계속 강매할 우려가 있다. 여섯째,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한 북한은 남한과의 군사문제 대화에 소홀할 수밖에 없으며 "남한은 미군의 존재에 의존해 안보의 허상 속에서 군축을 통한 진정한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에 소극성을 띠는 악순환이 지속된"다(이삼성, 1999: 77).

넷째는 동북아에서 한국, 일본, 필리핀(방문군협정으로 다시 미국과 쌍무적 안보체제에 의존함) 등이 현재 의존하고 있는 미군주둔과 미국과의 위계적이고 쌍무적인 안보질서에서(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일안보조약 등) 벗어나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끼리 상호 횡적으로 결속되는 지역협력안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이장희, 1999; 이삼성, 1999). 앞에서 와다 하루끼도 언급했지만 이 과정에서 서로가 위협을 느끼는 강대국이 아니라 크지도 않지만 작지도 않는 남북한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도

8) 와다 하루끼는 "동북아시아 지역협력의 중심이 되고 그 견인차가 돼야 할 존재가 한반도이고 한민족이다. 대륙국가인 러시아, 중국과 해양국가인 일본, 미국을 연결하는 일에는 반도국가인 한국, 북한이 적격이다. 나는 이미 몇번이나 지적했지만 디아스포라의 결과 이 지역의 모든 나라에 한족(조선족)이 거주하고 있는 것도 국가를 넘은 지역협력 창출에 큰 의미를 지닌다. 한국 정부와 국민, 북한 정부와 국민, 그리고 각국에 거주하는 한족(조선족)이 이니셔티브를 취하려 하지 않는 한 동북아시아 지역협력은 시작되지도, 전진하지도 못할 것이다"(와다 하루끼, 199). 동시에 남북한은 위협적이지는 않지만 작지도 않는 경제·군사적 지위 때문에 동북아 강대국사이에서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균형추로서 안정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지금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제2인공위성 발사준비를 계기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군사 공격까지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바로 민족의 공멸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분단되었듯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설사 북한이 제2 인공위성의 발사로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격용이라기 보다 군사적 억지력을 확보하여 자기의 생존을 담보하고자하는 방어용이라는 점을 우리는 유의하여야 한다. 북한이 이들 미사일을 개발함으로써 군사적으로 합리적 충분성을 갖 추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개발이나 수출을 추진하지 않도록, 곧 영변핵문제의 해결방식으로 과거 핵에 대한 사후인정과 미래 핵에 대한 통제를 확보하는 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주로 국제적 수준에서 냉전구조 청산을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이는 한반도냉전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세에 의해 구조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국내수준에서도 서해교전의 경우처럼 구조화되어 있다. 냉전청산을 위한 5개과제 가운데 특히 <대량살상무기 제거와 군비통제> <북한의 개방 및 시장경제 전환과 국제기구 참여>는 북한이 수용하기 힘든 요소를 담고 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게 될 대량살상무기의 제거는 반드시 군비축소와 병행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또 개방과 시장경제 유도는 북한의 자주권에 속하는 것으로 남한의 장기적 흡수통일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냉전청산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5. 맺음말

'탈냉전'의 시점에서 한반도는 지속적으로 열전으로 비화될 전쟁위기 속에 처해 있다. 한반도에서 미국은 오히려 더 냉전전사다운 모습을 보여 주었다. 걸프전쟁 직후인 90년 대 초반에는 '제2의 한국전쟁론'이 비등하더니, 94년에는 영변핵위기에서 우리 민족은 민족공멸로 이어질 엄청난 전쟁위기를 마지막 순간에야 넘기게 되었다. 그러다 또 다시 이러한 위기가 금창리핵위기에 OPLAN5027-98로 발화되려고 하였다가 김대중정권의 주도로 이런 위기를 넘겼다. 이제 다시 제2의 인공위성 발사준비를 계기로 다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 고비가 넘겨지면 북한이 비축하고 있다는 생·화학 무기가 도마 위에 올려져 한 바탕 소동을 펼 것이고, 다시 북한의 인권문제, 개혁·개방의 문제 등이 지속적인 메뉴로 등장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는 세계적 수준에서 '탈냉전'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 지구촌과 동북아에는 진정한 탈냉전이 도래하지 않고 작은냉전 상태에 머물러 있다. 지구촌전반이 이러한 형편이니 한반도야 두 말할 나위도 없다. 탈냉전은 두 대립 물인 소련주도의 사회주의체제와 미국주도의 자본주의체제가 변증법적 지양을 통한 냉전의 극복으로 귀결된 것은 아니다. 단지 한 대립 물만의 몰락으로 다른 한 쪽의 냉전체제는 건재한 채로 아직도 남아있다. 오히려 기존 대립물의 견제기능 상실로 이 잔존한 외팔이 냉전전사는 더욱 더 기세를 올리고 있다.

한반도 냉전은 일시적인 미국의 세계정책에 기인된 것이 아니라 2차대전 이후 미·소냉전의 확장이 한반도에 투영되어 강제적으로 구조화된 산물이다. 이 냉전구조는 어떤 한 정권의 전향적인 정책으로 일거에 해소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다. 정권의 정책은 정권 핵심자의 의도적 행위의 결과이지만 그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구조의 엄청난 규정력 속에 제약받기 마련이다. 김대중정부의 냉전해체를 위한 포괄적 접근과 대북 포용정책은 금창리핵위기를 넘기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서해교전과 북한의 제2인공위성의 발사준비에 이르러서는 체계적인 구조적 제약에 직면하여 표류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형성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또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우리 인간이다. 그러나 그 인간은 역사적 주체로서 조직화되고 연대화된 무리로서 비약할 때만 가능하다. 바로 여기에 우리 NGO의 역할이 부여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김대중정권의 대북정책은 김영삼정권에 비하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이루었고 적지 않은 성과도 일구었다. 그러나 정권기반의 취약과 세계질서와 동북아 및 한반도 수준의 냉전구조의 강고함은 정부차원의 힘으로만 냉전구조를 넘어서기 힘들게 되었다. 바로 시민사회의 역할, 곧 평화운동, 주한미군기지 퇴거운동, 범아시아적 미일신방위협력지침 철폐운동, 국가보안법철폐운동, 서해교전,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운동 등과 같은 우발적 전쟁비화 방지 운동 등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 역사의 주체로서 인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인간은 흩어진 개인이 아니라 연대화된 조직 속의 인간이다. ■

참고문헌

- 강정구, 1999. "김대중정부 통일정책의 평가와 전망: 포용정책의 민족친화성과 신자유주의의 반 통일성" 『진보평론』 창간호 게재 예정
- 강정구, 1999. "한반도 속의 미국: 5.18에서 금창리 핵위기까지" 학술단체협의회, 『5.18은 끝났는가』
- 강정구, 1999. "북한식량난과 사회변화", 강정구·법륜역음, 『1999 민족의 희망찾기』 서울: 정토출판
- 강정구, 1990. 『좌절된 사회혁명: 미 점령하의 남한·필리핀과 북한 비교연구』 열음사.
- 권혁범, 1998. "반공주의 회로판 읽기: 한국 반공주의의 의미체제와 정치사회적 기능"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제2권 제2호
- 길정우, 1999.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 포괄적 논의를 위한 시론" 통일연구원,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 1: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 김대중대통령 CNN 위성회견(전문) 1999년 5월 5일
- 서재진, 1999.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북한의 호응 및 개혁·개방 유도" 통일연구원,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 11: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 와다 하루키, 1999. "21세기 동북아시아와 일본" 『한겨레』 창간11돌 기념 국제학술대회, "새 세기와 한국, 21세기 신동북아질서" 발표문, 1999.5.8
- 이삼성, 1999. "한반도 전쟁위기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당대비평』 통권7호, 1999 여름
- 이장희, 1999. "21세기 미일제국주의에 항거하는 아시아 시민운동의 전망" 대만노동당주최 국제학술대회, "The Prospects for the Asian People's Movement against U.S. and Japanese Imperialism into the New

- Century" 1999. 7.26-7.28 Taipei 발표문
- 허문영, 1999.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 장기·포괄적 접근(시론)" 통일연구원,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 1: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 토미야마 이찌로(富山 一郎), 1999. "평화를 만드는 것" 『당대비평』 통권7호, 1999 여름
 - 통일부, 1999. 7월. "평화와 화해·협력을 위한 대북정책과 남북현안에 대한 입장"
 - 통일부, 1999. 『98통일백서』
 - Amitage, Richard. 1999. "A Comprehensive Approach to North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Strategic Forum, No.159, March 1999
 - Bello, Walden & Ehito Kimura, "Why the Protectorate Survives" NAPSNET, SPECIAL REPORT June 23, 1999
 - Bello, Walden & Eric Blantz, 1996. "위협과 가능성: 태평양지역에서 대안적 질서의 모색" 서재정·정용욱, 『탈쟁전과 미국의 신세계질서』 역사비평사
 - Bernstein, Barton J. 1972, "American Foreign Policy and the Origins of the Cold War" in Bernstein ed., Politics and Policies of the Truman Administration, Chicago Quadrangle Books
 - Bernstein, Barton J. ed., 1972. Politics and Policies of the Truman Administration, Chicago Quadrangle Books
 - Bernstein, Richard and Ross Munro. 1997. The Coming Conflict with China, (NY: Alfred Knopf)
 - Blanton, Tomas(1998?) "When did the Cold War End?".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 Cumings, Bruce. 1996. "70년 위기의 종언: 삼각구성과 신세계질서" 서재정·정용욱, 『탈쟁전과 미국의 신세계질서』 역사비평사
 - Dianne Shaver Clemens(1970), Yalta, NY: Oxford Univ. Press
 - Halliday, Fred, 1983. The Making of the Second Cold War, London: Verso
 - Jon Halliday and Gavan McCormack(1973), Japanese Imperialism Today, NY: Monthly Review Press,
 - Harrison, Selig. 1999. "Confederation,, Unification and Peace in Northeast Asia" 『한겨레』 창간11돌 기념 국제학술대회, "새 세기와 한국, 21세기 신동북아질서" 발표문, 1999.5.8
 - Hays, Peter, 1993. Pacific Powderkeg: American Nuclear Dilemmas in Korea, Lexington Books, 1991. 고대승, 고경은 옮김, 『미국의 한반도 핵정책의 뿌리와 전개과정, 핵 딜레마』, 한울, 1993
 - Halloran, Richard, 1998. "... But Carry a Big Stick",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98.12.3
 - LaFeber, Walter. 1993. America Russia and the Cold War 1945-1992, NY: McGraw Hill
 - Leffler, Melvyn, 1992. A Preponderance of Power: National Security, the Truman Administration, and the Cold War. Stanford Univ.
 - Parrish, Scott(1998?). "The Turn Toward Confrontation: The Soviet Reaction to the Marshall Plan, 1947", Marshall Plan Bulletin Working Paper Series of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 Oberdorfer, Don. 1998.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중앙일보역, 『두 개의 코리아: 북한국과 남조선』
 - Report of an Independent Task Force Sponsored by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1999.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A Second Look" NAPSNET, SPECIAL REPORT July 28, 1999 ■

The Current Stat and the method for dismantlement of the Cold War structure(summary)

Kang Jeong-Koo
/ Dong-guk University

The Current Stat and the method for dismantlement of the Cold War structure(summary)

1. Foreward

The tragedy of National Partition and the Korean War had originated from United Sates vs. the Soviet Union Cold War and the worsened Cold war systemic structure of Korean peninsula has not weakened, making itself as a deep rooted obstacle of reunification.

The purpose of this writing is to have a general view of the historic origin and characters of the Cold War from the systemic structure to Cold War ideology. Also it deals with dismantling of Cold War structure in Korean peninsula focusing on policies of collective approach and Perry Proposals in the time of Kim Dae-Jung Administration.

It is the dissolution of military blockade, adverse relationship and threat of war b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hich makes the crucial factor in dismantlement of Cold War structure in Korean peninsula. With this, the collective settlement of ideological obstacles such as stigmatization to the North, inner restriction of freedom of speech, anti-communistic brainwashing in individual levels is needed as well.

However, this writing will confine its content to the direction of dissolving the Cold War, to be specific on the dismantlement of military hostilities rather than covering collective approaches to the Cold War. Besides, it will notice the role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the level of civil society to promote amity of inner Koreans.

2. The characters of Cold War and its method of analysis

The Cold War is defined as a positional warfare, centered on frontal hostility and conflict in all ranges of social sectors such as politics, foreign relations, economy and military between two major powers, the Soviet Union representing socialist system versus the United States standing for capitalist side, on the basis of ideological hostility, socialism versus capitalism and military blockade.

There are various theories about the origin of the Cold War; Ideology Contribution theory which explained the Cold War initiated from the Russian Revolution and Siberia Invasion in 1917 and others. Usually the dispute between traditional historians and revisionism historians made a major flow and the latter revisionist theory gained more relevancy after recent publicization of Soviet papers. (Leffler, 1992, Parrish, 1998?)

Generally, the start of full scale Cold War is seemed to be after the proclamation of Truman Doctrine by the United States to declare full support for Greece and Turkey under the conflict on 12th of March, 1947. In other words, it is enforcement of dichotomy; from now on, people from all countries has to decide either one of two ways of life.

This solidified characterization of the Cold War can be outlined like followings; arms competition around nuclear weapons, ideological propaganda between East and West sides, Stigmatization of United States as imperialist, Soviet Union as Nazi Germany, Deficiency of negotiation process between two poles, hot conflicts as proxy war such as the Korean War, the Vietnam War, the Angolan civil war, Reinforcement of inner restriction on both sides, McCarthyism and Reagan Doctrine in U. S. and Breznev Doctrine including restrictive sovereignty of socialist countries and suppressing of anti government groups in the Soviet, (Halliday, 1983)

Therefore, the complete dissolution of Cold war in its definitive meaning indicates settlement of its above-mentioned all phenomena during Cold War period. The analysis of systemic structure of Cold War in Korean peninsula, thus, have to cover all ranges from world system, regional system

of northeast Asia, South-North Korea relationship, inner relationship in both Koreas and individual conception of Korean people.

Besides it needs considering both harcters and purposes of Cold War defined by leading power, U.S. to analyze the Cold war in Korean peninsula since post Cold-war period. The Cold war policy of United States had tried to obtain complete blockade to Soviet Union and communist sectors, main control and sanction over allies and guidance toward the third world. In spite of appeasement policy toward Russia -which also is suspicious as we see in case of New Nato strategy and Kosovo bombings-, the restraints over allies and control toward the third world have still sustained, in some third world regions, governance is more reinforced. In this aspect, the Korean peninsula has become the reign of Cold war in the period of post Cold war.

3. The characters and recent situation of the Cold war structure in Korean peninsula

As we showed above, the Cold war structure in Korean peninsula has been governed by maintaining force in the level of world, Northeast Asia, South-North Korea, domestic and individuals, being composed of various factors. We will look into these structures in each level.

3-1) Small Cold war in the world system

Already mentioned in the level of world system, Nato military alliance in the West has not dissolved even though Warsaw Pact in the communist bloc had disappeared: The Air raid upon Yugoslavia exploiting the cause of human rights abuses, New Nato strategy by the United State and Nato to interfere with outer region of Nato, Increasing membership by containing central and east Europe to block and constrain Russia as a way of marching into the East policy. Like these occasions, 'small Cold war' in the post Cold war period continues. With this, the strategy is carried out in order to confine Euro advocating Europe Community Army to Nato alliance system.

In the east side of global village, with Japan as a sub alley through U.S.-Japan New Guide Line and binding Philippines with Visiting Forces Agreement, the United States has sought to press China as a military blockade and to limit Japan in America leading safety structure at the

same time. Militarily, U.S. has propelled blockades to China and Russia, check to alliance, EU and Japan, governance to third world such as South America, Africa and Asia. This is the small Cold war in the post Cold war period by unilateralism of United States. Even if it is taming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with neo-liberalism of capitalist world, it does not pose economic blockade to Russia and China, but maintain control through increased bonds and mutual interdependence.

3-2) Small Cold war in the level of Northeast Asia

The Cold war structure in the level of Northeast Asia was to block the Soviet Union, China and North Korea by South Korea-United States-Japan Triangle military alliance system. After the improvement of relationship toward China and Russia, it was changed into blockade to North Korea. At present, United States and Japan has furthered its relationship with New Safety Declaration in 1996, 'Worldwide Partnership' Declaration in 1999 and legislation of New Guide Line. United States and Philippine have agreed to Visiting Forces Agreement, with Taiwan establishing TMD. Furthermore, Korea-Japan's military cooperation went to do combination military practice for the first time in this August, reinforcing Triangle military alliance.

In Northeast Asia, small cold war¹⁾ has continued and has the possibility of making a gunpowder warehouse from the Cold war in Korean peninsula to Hot war.

3-3) Sequel Cold war in the level of Korean peninsula

I will consider the sequel Cold war structure of Korean peninsula on the basis of representing characters in Cold War. In the first aspect of military, Korean-US-Japan triangle military alliance has furthered, aiming North Korea temporarily and checking China in the long term perspective. The second aspect of Cold War stand is stigmatization propaganda. In domestic situation, the

1) The typical example of this is Amitage who served as a former deputy secretary of State in U.S. "If the export of North Korean missiles continues and U.S. confirms this, America will have to carry out the right to search and confiscate the shipment of this armament. It should be known to North Korea that U.S. will fulfil its right of self-defense in U.N Constitution. (Amitage, 1999). According to his logic of thinking, most countries in the world have rights to search and confiscate the armament exportation of US, the greatest exporter of weapons, which means the exportation of armament will disappear basically.

isolation and demonization of North Korea by mass media had its peak at the time of hostilities in the West Sea. It was recent hostilities in the West Sea that confirmed the remained relic of stigmatization during the Cold War, paralyzing the possible rationality to the extreme.

The third standard of inner constraint attributing ideology, there have existed National Security Law and Security Observance Law not to mention 'written oath of law abiding'. The prosecutory authorities inspected the writing which expressed doubts about hostilities in the West Sea and conspiracy plot by US. Still there has been improvements to some extent compared with other military or conspiracy theory levels. There was no difference in dealing with students and laborers even if there was advance in intellectuals and upper class, though.

The exemplary instances are Young-Nam committee Incident and Hanyang University students Incident. In every way of life from subway to TV soap operas, the atmosphere of anti communist education or anti-North Korea propaganda prevails. (Hyuk-bum Kwon, 1998)

The fourth standard is the possibility of hot war, in other word, crisis of military conflicts. The imminent incident is military hostilities which occurred in West Sea on 15th of June, 1999. If North Korea, losing rationality and control as South Korea, had fired ground to ground missiles of Ongjin gulf or the region of West Sea, there must have been irredeemable front war by accident between two Koreas. The result of this military contraction would be crucial destruction of both Koreas. We embrace this danger of a tough-and-go. The greater danger, however is war threats from U.S. Its precarious instance was Nuclear crisis in June 1994 at times of post Cold war.

From above we've witnessed the sequel of Cold war in the Korean peninsula by four standards. For sure,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Sequel cold war and traditional Cold war; in spite of economic sanction by U.S. toward North Korea, U.S. has served humanity-based food support. South Korea relieved economic sanction toward North Korea, agreeing to mutual benefit negotiations such as Geneve Agreement. The policy of supporting soft landing of North Korea has been introduced as well. The objective of this difference seems to lie in making North Korea follow the U.S. leading world order, participate to market economy system, give up the hostile development of fatal destructive weapons, rather than to stick into 'killing North Korea'.²⁾ This measure for certain has not rule out the possibility of military attack according to changeable situation.

2) Report of Independent Task Force Sponsored by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1999,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 A Second Look" NAOSNET, SPECIAL REPORT July 28, 1999

4. The direction of dismantling Cold war in Korean peninsula

I defined the state of Korean peninsula as Sequel Cold war at present. The Sequel cold war contains the crisis of war which can worsen to hot war phase. Therefore, it is the imminent task for the peace of Northeast Asia and Korean peninsula and the premise of reunification to dissolve the Cold war structure. These are the essential fulfillments for the dismantlement of Cold war structure in Korean peninsula as well as to finish small Cold war in the level of world system and Northeast Asian region; the dissolution of military blockade, hostility and war threats to North Korea by U.S. and Japan.

To be specific,

The first task is to abolish the strategy of destroying North Korea, 'OPLAN 5027' and return to the former strategy of remaking Truce Line before 1983.

Secondly, to advance Peace settlement between North Korea-U.S. with no delay. Still, Peace Settlement cannot be reached without addressing U.S. Staying Army in Korean peninsula as a foreign entity. Thus, It is rational and practical to address South and North Korea and U.S. as third parties involved.

Thirdly, it is necessary to address the relevant stance of U.S. Staying Army in South Korea, its reduction, arrangement to the rear and its retrieval in the long term for the fundamentals of reunification.

The fourth is to establish multilateral safety cooperating network in Northeast Asia region, free from stationary troops of U.S. in South Korea, Japan and Philippines (with the agreement of Visiting Army Forces, it was bided bilateral security frame to U.S again) and free from hierarchy of bilateral security framework with U.S. (Jang-hee Lee, 1999; Sam-sung Lee, 1999)

Now the tension in Korean peninsula is taut due to the preparation of launching the second artificial satellite by North Korea, some people even arguing military attack. Regardless of our will, such National Partition by outside powers, the occurrence of war in Korean peninsula is possible. Even if North Korea succeeds in developing long distance missile by launch of the second artificial satellite, it is to obtain military checking ability for national security rather than to attack

other countries. In order that North Korea does not seek further exportation or development, we need to secure control of future nuclear weapons and to admit former nuclear plans as a way of solving Youngbyun Nuclear Problems.

5. Conclusion

The post Cold war period in the global level does not secure a real post Cold war atmosphere in Northeast Asia. Rather it has the precarious moment of small Cold war state. The Cold war in Korean peninsula had resulted from systemic outcome of forced enlargement of U.S.-Soviet Cold war after the second World War, not from temporary world strategy of U.S.

It is humanity who made these systemic obstacles, but it was also 'human being' who could overcome them. It is possible only if human being is organized and solidified as 'motivated people' Here lies the important role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in Kim Dae-Jung Administration is much advanced and quite revolutionary than that of Kim Young-Sam Administration. Yet, the ability of South Korean government cannot overrule its weakness fundamental, the strong framework of Cold War in world order and in Northeast Asian regions. That encourages the role of civil society, in other words, social participation by citizens; such as Peace movement, Movement for Return of U.S. Army base in Korea, The abolishment of pan-asian U.S.-Japan New Guide Line Agreement, The Annulment of National Security Law, East Asia Community Movement As a leading initiative of history, human being is crucial; not as an individual dispersed, but as a member of solidified organization. ■

대인지리 대책의 방향

조재국
/ KCBL집행위원장

1. 한반도 통일환경의 변화와 추이

지난 10여 년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환경과 남북한의 인적, 물적 교류를 살펴볼 때, 불안과 갈등 가운데서도 놀라운만한 변화와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사회에서는 유엔을 중심으로 남북한이 동등한 발언권을 가지고 각종 대화의 자리에 동석하고 있고 4자회담을 통하여 한반도의 현안과 평화통일에 관하여 남북한의 직접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난 수년간 남북의 물적 교역은 성장을 거듭해와 북한으로서는 남한을 가장 큰 교역 상대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인적 교류의 면에서도 다채널을 통한 직접적인 교류가 확대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최근에 문제가 되어 있는 현대의 금강산관광은 지나친 상업주의적 발상이라는 비난을 수용한다고 해도 한반도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 사업임을 부인할 수 없고, 남한의 여러 사회, 종교단체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료보내기운동은 북한에 대한 남한의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 현상임에 틀림이 없다. 더욱이 이러한 남북교류가 현존하는 남북간의 충돌과 갈등을 극복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서해안에서 있었던 군사적 충돌은 남북관계를 새로운 냉각의 시대로 몰고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사건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도 군사적 효용과 위협의 측면에서만 보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본이 남한 보다 크게 문제제시하고 있는데,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열도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되는 일이지만 남한은 군축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전향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남한의 침묵은 긍정적으로 설명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의 남북관계는 이런 정도의 문제를 능히 극복하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되어 가고 있고 이에 대한 남한국민들의 감정이나 생각도 충분히 포용하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통일과정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다고 할 수 있으리라. 현대의 전쟁수행에 필수적인 경제력이 약하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상 북한은 큰 위협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일 수

도 있다. 이렇듯 오늘날 북한에 대한 정보는 북한과의 교류 증대와 더불어 놀라운 정도로 확대 전달되어 오고 있다. 북한의 정치와 경제에 관한 정보분석은 아마도 북한의 웬만한 지식인보다도 우리가 더 많이 하고 있을런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북의 평화통일과 민족화해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줄 군사부문의 정보가 미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하게도 남북한의 군사에 관한 정보는 우리보다도 미국, 영국 등이 더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번 서해안 무력 충돌에서도 우리나라 언론의 보도는 장비나 화력에 대한 남북한의 차이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그래픽 합성사진으로 불타는 북한군함을 보도하는 남한신문의 보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에 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는 남북의 평화통일을 직접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군축문제에 관심을 둘 때가 되었고, 더욱이 아무런 군사적 효용가치가 없다고 공인되고 있는 재래식 무기들, 특히 대인지뢰는 같이 없애버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정보와 지식이기 하나 가능한대로 남북의 군사력과 대인지뢰 현황을 분석하고 평화통일의 마지막 장벽이 될 군축에 관한 남북한 과제에 대하여 대인지뢰 금지운동을 중심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2.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

1) 남북한의 군사력

남북한의 군사력을 단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종 류		북 한	남 한
군사비(1991년)		55.6억불(GNP의 24.3%)	105.9억불(GNP의 3.9%)
병력수		105.5만명 (육 92만명, 해 4.7만명, 공 8.8만명)	69만명 (육 56만명, 해 6.6만명, 공 6.4만명)
장비	육군	전차 장갑차 야포 3,800여대 2,800여대 11,000여문	2,050여대 22,250여대 4,700여문
	해군	수상전투함 지원함 잠수함 430여척 335척 35척	180여척 50여척 4척
	공군	전술기 지원기 헬기 840여대 510여대 290여대	530여대 160여대 630여대

2) 남북한의 평화통일과 군사통합

남북의 평화통일은 말할 것도 없이 군사적인 통합을 동반하게 될 것이며 남북의 군사통합은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데 가장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다. 통일 후에도 군사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를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적정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 주장이다. 국방부는 지난 1991년 1월에 발표한 “21세기를 지향하는 중장기 국방정책 및 군사력 발전안”에서 통일 후 군사력이 크게 감축될 필요가 있음을 시인하였다. 미국의 군사전문지는 남북통일 후 한국의 가상적은 일본과 중국 및 러시아 등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를 감안하여 현재 병력 수 175만 명에서 인구의 1%인 60만 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20만 명으로 줄여도 된다는 주장도 있다. 독일의 경우는 통일 전에는 서독이 49.5만 명, 동독이 22만 명이었으나 통일 후에는 37만 명으로 축소하여 유지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삼면이 바다로 싸여있고 북쪽의 경계가 대부분 강으로 갈라져 있음을 고려할 때 많은 수의 병력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 또한 육해공군의 구성비율은 지금의 88:5:7에서 78:10:12로 육군의 비중을 축소하고 해군과 공군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다.

통일과정에서 가장 어렵고 비용이 드는 부문이 군사적 통합 및 군사력 감축인데, 남북예멘의 경우는 통일 후에도 군사력을 따로 유지하다가 군사적 충돌을 맞게 되기도 했다. 독일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사적 통합과 감축의 과정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동안 군대 기강의 해이와 군 조직 체계의 이완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된다. 또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독일의 경우 230억 마르크 이상으로 총통일 비용인 1조 마르크의 2.4%나 차지했다. 이와 같이 남북한의 통일에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지만 분단에 의한 군사비 지출 등을 감안하면 분단비용이 통일비용보다 훨씬 많이 들고 있다는 계산이다.

3. 남북한의 대인지뢰 현황

1) 북한의 대인지뢰

지난 1997년 9월 대인지뢰금지협약의 초안이 작성되는 오늘로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과 함께 한반도를 제외해 달라는 예외조항을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당시 주 러시아 북한 대사였던 손성필은 어떤 지역도 제외해서는 안된다고 예외조항을 두려는 시도를 강하게 비난하였다. 그러나 1998년 12월 4일 북한은 성명을 통하여 “북한은 대인지뢰에 관련한 인도적인 관심을 이해하지만 한반도의 어려운 안보상황으로 인해 대인지뢰금지협약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금년 2월 김삼중 주 유엔 북한공사는 아직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소련제 POMZ-2, POMZ-2M, Model 15등을 생산하고 있고 나무로 만들어 탐지가 불가능한 목각지뢰를 만들었으나 생산을 확대하거나 발전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른 나라에서 북한의 지뢰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수출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소련이나 중국 등으로

부터 수입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비축되어 있는 지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국전쟁시에 미국 군으로부터 탈취한 지뢰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은 현재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100만개 정도의 대인지뢰가 매설되어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지대에는 지뢰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법률클스님의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1997년 9월에 실시한 조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한의 북쪽 국경에는 지뢰가 없다고 대답했다.

2) 남한의 대인지뢰

이양호 전 국방부장관은 남북한이 동시에 지뢰를 제거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년 2월 25일 한국 국방부는 오타와 지뢰금지협약의 국제법 발효일을 앞두고 CCW(the Convention on Conventional Weapons)의 개정 제2의정서(Amended Protocol 2)에 가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지뢰생산에 관하여 한국은 미국의 M18A1 크레모어 지뢰를 복제하였고, 한국화약에서 KM18A1, 대우에서 K440을 생산하여 군에 납품하였다. 한국화약에 의하면 1995-1997년에 10,721개의 M18A1을 생산하여 납품했다.

또한 한국정부는 1995년부터 매년 대인지뢰의 수출에 대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가 1997년에는 무한기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여 수출을 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은 1969년부터 1992년까지 수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있으면서도 한국에 대해 40,324개의 수출을 비롯하여 1986년-1988년 31,572개 (ADAM), 1970년에는 탐지불가능한 M14를 1,035개 수출하고 1969-1973년에는 크레모어 7,000개 (M-18A1)를 한국에 수출한 것으로 되어있다.

비축지뢰에 대하여는 국방부 측에서 굳게 입을 다물고 있으나 M14와 M16이 100만개 정도 비축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모두 소위 자폭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Dumb 지뢰로써 한국이 CCW에 가입하면 사용할 수 없는 지뢰들이다. 한편 미국자료에 의하면 미국군은 남한에 120만개의 Dumb 지뢰를 한반도 유사시를 위하여 비축하고 있고, 미국이 자국과 사우디, 이태리, 독일 등에 비축하고 있는 대인지뢰는 무려 1천 130만개에 달한다. 대인지뢰사용에 대하여는 한국전쟁시에 뿌려진 지뢰가 100여만 개 남아있고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 민통선 안에 상당량의 지뢰가 매설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전쟁시 미군의 피해를 분석한 결과 적군의 지뢰에 의한 피해 보다는 아군의 지뢰에 의한 피해가 더 많았다고 한다.

3) 대인지뢰피해

매년 발생하고 있는 대인지뢰 피해자는 한마디로 군 당국의 대인지뢰 사용과 허술한 무기관리에 기인한다. 금년 장마에도 상당수의 무기가 홍수에 유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군 당국이 정확한 숫자와 지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인근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지난 폭우 기간에 화천의 육군부대에서 무기저장용 컨테이너가 폭우로 유실되었다고 하는데 당시 무기고에는 크레모어 대인지뢰를 비롯하여 탄약 7400발이 저장되어 있었고 유출된 무기중에 수류탄 30발이 든 상자 1개가 청평댐 부근 북한강에서 낚시를 하던 박몽진씨에 의해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또한 지난 6일 영천군 대광리 차탄천에서 M14대인지뢰 3발과 M15 대전차지뢰 1발이 수거되었다고 한다. 이는 경기북

부 지역에서 지난해 수해 때 유실되어 수거되지 못한 150여발 (당시 329발 유실) 중의 일부라고 생각된다. 국감자료와 신문보도 등을 통하여 집계된 작년도 유실부기수는 무려 98,331발, 236톤에 달하고 이중 수거하지 못한 부기만도 3톤 (5,438발)에 달한다. 특히 후방지역의 15개 방공포기지 주변에 10만 개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고 그 중에 유실된 후 수거하지 못한 지뢰만도 1,290여개에 달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지뢰사용을 고집하고 군 당국에 의한 허술한 관리가 계속될 경우, 민간인 지뢰피해자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정부의 공식발표에는 지난 5년동안 총 48건의 지뢰사고가 발생하여 41명이 숨지고 46명이 부상 당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중 민간인 피해자가 36%라고 파악되고 있으나 실체는 이보다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KCBL)가 지난 1년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민통선내의 이주주민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민통선 안에 있는 유일한 면 지역인 해안면에 55명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비롯하며 백령면에 7명, 연천군에 10여명, 철원을 대마리에 50여명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망한 사람들과 부상당하고 이주한 사람들을 모두 조사하면 최소 1,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2월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조디 윌리엄스가 방문한 파주 금파리에는 지뢰에 의해서 다리를 잘린 7명의 피해자들이 어려운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다. 한편 매년 발생하는 군 사고에 의하여 희생되는 장병들이 300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상당수가 지뢰사고와 관계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며 군인피해자들은 민간피해자들 보다 훨씬 많으리라고 생각된다.

한국에서 피해자들은 대부분 냉전체제하의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피해를 당한 것이어서 군이나 국가를 상대로 한 보상신청이나 손해배상소송을 생각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군 당국이나 정부가 지뢰지대 주변의 주민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나 교육을 통하여 지뢰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이나 피해보상 신청을 유도하는 노력을 했다는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민통선 안으로 이주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피해에도 배상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여 심리적 압박을 주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국방부를 비롯하여 관계기관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생활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며,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난 세기의 상흔을 치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평화, 군축과제로서의 대인지뢰

한국과 미국은 대인지뢰금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인지뢰의 사용을 고집하고 있고 대인지뢰문제에 대한 논의나 정확한 데이터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세계대인지뢰금지운동(ICBL)을 비롯한 국제민간기구들이 군사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내어놓는 대인지뢰 사용의 불필요성과 군사적 효능의 불명확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에 대해서도 이렇다할 내용의 반론을 펴지 못하고 있다. 한국국방부의 입장은 보병의 행군을 통해 남침했던 과거 한국전쟁시의 생각이나 대규모 세계대전의 위협이 상존했던 냉전시대의 사고에서 조금도 진전되어 있지 못한 것 같다.

이제는 한국정부가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여 전쟁을 수행하던 과거시대의 사고에서 탈피하고 변화된 현대의 군사적, 사회적 상황에 대비하는 지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먼저 대인지뢰의 제거와 사용의 금지에 관한 논의는 평화통일과 민족화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정치, 사회, 종교, 예술의 각분야에서 상당한 정도의 남북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부문만 과거의 냉전적 사고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4자회담은 기본적으로 남북한의 통일환경을 조성해보자는데 가장 큰 뜻이 있는 것으로 당연히 군축문제가 주요의제로 다루어져야 하고 그 가운데서 실현 가능한 대인지뢰의 상호금지 및 폐기를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다음으로 대인지뢰를 금지하는 국제협약과 국제운동에 한국정부가 주체적으로 적극 대비하여야 하고, 정부의 입장이나 계획을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지뢰문제를 군사적 문제로만 보지 않고 평화통일과 연계하여 이해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미 미국이 주도하는 제네바 군축회의(CD)에서 성립된 CCW 개정 제2의정서를 금년내에 비준하겠다고 약속하고 있고, 미국정부는 2006년까지 한국의 오타와 대인지뢰 금지협약에 가입하고 대인지뢰 피해자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국국방부는 CCW의 이행규칙을 만들고 있다는 대답만 계속하고 있고 내용이나 일정은 밝히고 있지 않다. 국회의 비준을 기다려야 할 법안이 이렇게 베일에 가려지고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는 사태는 심각한 문제이다. 더구나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비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 또한 미국정부의 약속이고 한국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2006년 문제에 대하여 미국국방성은 지난해 4,830만 불을 요청하였으며, 앞으로 수년간 4,500만 불을 조사와 연구에 쓰고 5,000만 불을 피해자 구원을 위해 쓰겠다고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대인지뢰의 제거와 금지에 사용되는 비용은 통일비용의 일부라는 측면의 이해가 필요하다. 독일의 예에서도 보듯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에는 막대한 군사적 비용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비무장지대의 지뢰를 제거하자면 4-10조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아프리카 등 외국의 경우에도 지뢰제거 비용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북한의 경우 外援과 연계하여 KEDO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 주어야 할지도 모른다. 금년에 정부가 CCW에 가입하게 되면 당장 탐지불가능한 대인지뢰(매설지뢰의 약 80%)의 비축대인지뢰를 제거하거나 탐지장치 부착을 시작해야 한다. 실로 막대한 비용이 드는 작업이고 2006년에 전면금지 조약인 오타와협약에 가입하는데 현재의 매설지뢰를 제거하지 않고 탐지장치를 부착하게 된다면 비용이 이중으로 들게 될 것이다. 또한 민간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피해자에 대한 구원도 통일비용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 미국은 이미 미군에 의해서 사용된 지뢰 피해자들을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의 민간인 피해자들은 거의 미국의 원조케이스에 포함된다고 보여진다.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에 대하여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민족화해를 위하여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그 실현에 가장 큰 문제가 될 군비축소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한반도의 대인지뢰 문제를 통일문제로 보고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

Courses for Anti-Landmines

Cho Jai Kook

/ Korea Campaign to Ban Landmines

1. The change and transition of the environment of the Korean Peninsula

For the past 10 years the political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as uncertain and had its complications. With the act of joining the U. N , direct conference between the two nation have made a tremendous change and progress.

The Kumgang Mountain tourism and fertilizer aid shows the progressing relationship of the North and the South. Furthermore this alternating current between the two nations will overcome the complications and conflict which actually exist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has a great meaning to all this. The war in the West Coast and the missile experiment by the North and so on have led to the existence of this cold-war situation. The South should not be seeking a peace system through armament reduction but by considering a changing counter-plan.

On the other hand, the silence of the South can be considered as being optimistic as the nation has the ability to overcome the problems of the two nation and mature from them. It could also be considered that the South Koreans have learnt to deal with their emotions well enough to discuss this matter. This has broaden the people's knowledge on the process of unification. However during the West Coast War the emotional and abstract judgement shown by the South Korean press indicates that despite the increase in information and data of the North Korea the army information which could be the key solution to peace unification and reconciliation and the nation is still very weak.

It is time to concern about the armament reduction and furthermore get rid of old-fashioned weapons especially the personal landmines. The information given is very limited but can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armaments and the landmines and discuss about the issues of the North and the South armament reduction and prohibition of the landmines.

2. Comparison of the North and South's armaments

1) Armament of the North and the South

The following shows a comparison of the North's and South's armament.

			North	South
Cost of Military Affairs (1991)			\$ 55.6 hundred million (24.3% of G. N. P)	\$105.9 hundred million (3.9% of G. N. P)
Number of Military Force			10.55 million (9.2 million army) 470 thousand navy 880 thousand airforce	6.9 million (5.6 million army) 660 thousand navy 640 thousand airforce
Equipm ent	Army	Tank	3,800	2,050
		Armored motorcar	2,800	22,250
		Field Artillery	11,000	4,700
	Navy	Battleship	430	180
		Supply Ship	335	50
		submarine	35	4
	Airforce	Tactical Plane	840	530
		Supply Plane	510	160
		Helicopter	290	630

2) Peace Unification and Military Unification of the North and the South

The peac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companied by the military unification and this will be the most difficult process in establishing a peaceful unification. The most difficult and expensive process during the unification is the unification of the military and armament reduction. In Germany's case the unification of the military and armament reduction process took years to establish and during this period there inevitably follows the lack of law and order in the military and the lack of military system. Also the amount of money spent on this was over 230 hundred million marks. Likewise the unification of the North and the South will need a tremendous amount of expense but by taking into account the division of the military expenditure, this division will cost more than the unification expense itself.

3. The situation of the North and the South's Landmines

1) The North's Landmines.

However through a public declaration in December 4 1998 it has been declared that the " North has humanistic interest considering landmines but due to difficult security situation in the Peninsula they can not agree to Anti-Personal Landmines Agreement." Also Kim, Sang-jong, North Korean U. N diplomatic minister has clearly stated in this February that there is still no change.

North Korea is at the present producing U. S. S. R' s POMZ-2, POMZ-2M, model 15 and have made wooden landmines which can not be detected. But they have not seem to have increased production. If can be inferred that the landmines are being imported form China or U. S. S. R as no North Korean landmines have been found overseas. No storage of the landmines have been found but the landmines stolen from the U. S army during the Korean War are still being used. North Korea at the present has about 10 million landmines underground around the demilitarized zone. No signs of the landmines have been reported on the Chinese and the Russian border.

2) The South's Landmines

This year, February 25, the Korean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as announced to join the amended protocol 2 of the CCW (the Convention on Conventional Weapons) with the upcoming of the beginning of International law of Ottawa , Anti-Landmines Agreement.

The Korean government proclaimed moratorium on the export of the personal landmines every year since 1995. However, in 1997 it proclaimed unlimited-time moratorium and decided not to export them. Although US had proclaimed moratorium exports from 1969 until 1992, it still had exported 31,527 (ADAM) from 1986 to 1988, 1035 undetectable M14 in 1970 and 600 (M-18 A1) during 1969-1973, also 40,324 more to Korea.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ave been silent about the storage of the landmines but it has been said that there is 10 million M14 and M16 and these do not have what you call a 'self-destructing device' and therefore can not be used if Korea joins the CCW.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American sources, the American army has about 12 million 'dumb' landmines stored

in the Peninsula in case of an Emergency. 10 million landmines from the Korean war still exist and a vast amount of them have been laid during the crisis of Cuban Missiles.

3) The damage of the landmines

The victims of the landmines every year result from the usage and the loose maintenance of the landmines on the level of Military authorities. During the flood this year, a large amount of the landmines has been exposed but the authorities have not announced the accurate numbers and locations, causing the nearby residents to live in fear. The number reported by the press, last year's misplaced arms was about 98, 331 bullets (236 tons) and out of this number 3 tons of them have not been collected properly. Especially in 15 of the rear districts near air and artillery defense bases, a hundred of the landmines have been laid underground and about 1290 of the lost ones have not yet been collected.

If the Korean government persists on using the landmines and the lack of management of these continue, the civilian victims of these will inevitably occur.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official announcement, for the past 5 years a total of 48 cases of accidents caused by 지뢰 have been reported, leaving 41 casualties and 46 injured. Out of this number, 36% of them have been reported to be civilians but it can be assumed that the number is greater. The Korea Campaign to Ban Landmines(KCBL)'s research for the past year shows that residents around the civilian restricted area are most affected. Hae-an-myun, the only town within the civilian restricted area have 55 victims whereas 7 in Baeklyung-myun, 10 in Yeonchun-goon, 50 in Chulwon-up Kaema-lee. It can be assumed that the number of causalities and injured are over 1000.

However the military authorities and the government have not publicized and the government have not publicized and through education tried to decrease the amount of damaged caused by the landmines. Instead they have suppressed the residents moving into the civilian restricted area by forcing them to sign a memorandum which states that the government will not take any responsibility for any damage or actions.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other related organizations should take matters into hand and establish a special law to recover the damage of the last century.